

#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정책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 장진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연구위원)

위촉연구원 : 박성준(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위촉연구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발 간 사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서울은 2014년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저출산은 노동인구의 감소, 소비시장 위축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젊은 세대의 부양부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육과 양육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주거마련,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찾아보고자 시작되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서울시 여성은 출산이 가까워짐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이른바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차별받고, 일·가족양립이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또한 출산여성과 비출산여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일·가족양립지원제도, 경제적 상황, 주거마련이 출산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주거마련의 어려움, 경제적인 부담은 출산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비출산 여성들의 비출산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서 본 연구는 저출산 대응 방안으로서 서울시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직장맘지원센터를 통한 여성의 일·가족양립지원제도 강화 및 고용안정방안과 임대주택 지원 자격조건 완화, 사회적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본 연구를 위해 자문을 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FGI에 참여하여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들려주신 참여자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서울 여성의 저출산 영향요인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준 연구진의 노고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향후 이 연구가 서울시 저출산 정책과 나아가 여성의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8월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이숙진



# Contents

## I 서론 \_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7
2.1 연구의 내용 .....	7
2.2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	14

## II 서울시 저출산 원인과 현황 \_ 17

1. 출산에 관한 제이론들 .....	19
1.1 인구학적 접근 .....	20
1.2 경제학적인 접근 .....	21
1.3 사회학적인 접근 .....	24
2. 서울시의 출산율 및 주요요인 현황 .....	25
2.1 서울시 합계출산율 및 주 출산연령대의 이동 .....	25
2.2 서울시의 높은 주택가격과 인구이동 .....	31
2.3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	36
2.4 서울시의 높은 물가와 교육비부담 .....	37
2.5 일·가족양립의 어려움 .....	43

**Ⅲ 출산을 감소원인 기여도 분석 \_ 45**

- 1. 서울시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 47
  - 1.1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방법 ..... 47
  - 1.2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자료 ..... 50
- 2. 서울시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결과 ..... 51
  - 2.1 1997-2005년, 1997-2010년 분해결과 ..... 52

**Ⅳ 서울시 출산·비출산여성 및 가구 특성과 출산결정요인 분석 \_ 55**

- 1. 분석방법 ..... 57
  - 1.1 서울시 출산 및 비출산여성의 현황분석방법 ..... 57
  - 1.2 서울시 여성의 출산결정요인 변수 및 추정방법 ..... 58
- 2. 서울시 출산·비출산 여성 및 가구특성 현황 ..... 64
  - 2.1 교육년수 및 일·가족양립지원의 중요성 ..... 65
  - 2.2 비출산여성의 고용불안정 및 낮은 소득수준 ..... 67
  - 2.3 가구 근로소득 및 이전소득 ..... 74
  - 2.4 비출산가구의 낮은 저축액과 높은 부채금액 ..... 76
  - 2.5 입주·주거형태 및 주거비, 월평균 생활비 ..... 77
- 3.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 분석 : 미시적 요인을 중심으로 .. 80
  - 3.1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 분석결과 ..... 80
- 4. 소결 ..... 87

**V 서울시 여성의 출산 결정 요인 분석 : FGI를 중심으로 \_ 89**

1. 불안정한 일자리와 출산 ..... 92

2. 주거문제와 출산 ..... 95

3. 출산관련 의료비 및 보육문제와 출산 ..... 100

4. 소결 ..... 102

**VI 정책방안 \_ 103**

1. 서울시 여성 및 가족친화적 기업환경 개선 ..... 105

    1.1 여성 및 가족친화적 기업에 대한 유인(incentive)제공 .... 106

    1.2 고용안정과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이탈방지 및 재진입  
        활성화 ..... 108

    1.3 비정규직 근로자 및 임산부에 대한 불이익 적극적 예방 110

    1.4 직장맘지원센터 기능강화를 통한 여성노동권 보장 ..... 110

2.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 ..... 111

    2.1 임대주택의 높은 진입장벽 해제 ..... 111

    2.2 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 113

    2.3 희망하우징 대상의 확대 및 사회적 주택 공급 ..... 113

3. 출산관련의료지출 및 생활비, 보육 ..... 116

    3.1 출산관료의료정보 제공 ..... 116

    3.2 국공립어린이집 공급확대 및 편의시설 마련 ..... 116

4. 향후 연구의 개선방향 ..... 117

## Contents

참고문헌 \_ 119

영문초록(Abstract) \_ 121

부 록 \_ 123



## 표 목차

표 I-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저출산부문(1차, 2차 비교)	4
표 I-2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분석을 통한 정책방안 연구 분석대상 및 시기	7
표 I-3	분석을 위해 구축한 패널자료 구조 및 분석시기	8
표 I-4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정책방안」 저출산 요인	9
표 I-5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정책방안」 분석대상 및 변수	10
표 I-6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정책방안 연구흐름	14
표 I-7	저출산 선행연구 및 결과	16
표 II-1	서울시 합계출산율 및 출생건수 변동추이 (1993~2013)	27
표 II-2	서울시 평균 초혼연령 변화 (1995~2013)	28
표 II-3	서울시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및 자녀 출산연령 (1995~2013)	29
표 II-4	서울시 주 출산연령층 출산율 변동추이 및 비중 (1993~2013)	30
표 II-5	서울시 가임여성 인구 수 추이변동 (1995~2013)	32
표 II-6	서울시 주택구매력 지수(HAI) (2008~2014)	34
표 II-7	서울시 가구소득대비 주택가격 지수(PIR) (2008~2014)	35
표 II-8	서울시 여성의 혼인상태별 월평균소득 (2008~2013)	39
표 II-9	서울시 월평균 사교육비 (2007~2014)	40
표 II-10	서울시 월평균 공교육비, 사교육비 및 임금대비 총 교육비 (2007~2012)	41
표 II-11	서울시 30세 이상 가구주 교육비 부담 인식 (2000,2004,2008,2012,2014)	42
표 II-12	서울시 및 6개 광역시 월평균 생활비	43
표 II-13	서울시 남편·부인의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 (2002,2006,2008,2010,2012)	44
표 III-1	서울시 연령별 혼인여성 비율(1997~2010)	51
표 III-2	서울시 합계출산율 감소원인에 대한 기여도 분석	53
표 IV-1	서울시 여성 출산영향요인 분석 변수설명	60

## Table Contents

▣ 표 IV-2 ▣	서울시 출산·비출산 여성 교육년수 .....	65
▣ 표 IV-3 ▣	서울시 출산·비출산 여성 출산휴가 유무비율 (2001~2012) .....	66
▣ 표 IV-4 ▣	서울시 출산·비출산 여성 육아휴직 유무비율 .....	67
▣ 표 IV-5 ▣	서울시 출산·비출산여성 및 배우자 경제활동상태 .....	69
▣ 표 IV-6 ▣	서울시 출산·비출산여성 및 배우자 근무상 지위 .....	71
▣ 표 IV-7 ▣	서울시 출산·비출산여성 및 배우자 정규직 비율 .....	71
▣ 표 IV-8 ▣	서울시 출산·비출산남녀 주당 평균 근로시간 .....	73
▣ 표 IV-9 ▣	서울시 출산·비출산남녀 월평균소득 및 배우자 대비 소득 .....	73
▣ 표 IV-10 ▣	서울시 출산·비출산가구 근로소득, 이전소득,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	75
▣ 표 IV-11 ▣	서울시 출산·비출산가구 주관적 경제상태 인식정도 .....	76
▣ 표 IV-12 ▣	서울시 출산·비출산가구 월평균저축 및 부채 .....	77
▣ 표 IV-13 ▣	서울시 출산·비출산가구 입주 및 주거형태 비율 .....	77
▣ 표 IV-14 ▣	서울시 출산·비출산가구 전세보증금 규모 .....	78
▣ 표 IV-15 ▣	서울시 출산·비출산가구 월평균 생활비 .....	79
▣ 표 IV-16 ▣	서울시 여성 출산영향요인 분석결과 (출산 2년 전) .....	81
▣ 표 IV-17 ▣	연령 및 교육년수 한계효과(marginal effect) .....	82
▣ 표 IV-18 ▣	여성 월평균소득 × 교육년수, 배우자 월평균소득 한계효과 (marginal effect) .....	84
▣ 표 IV-19 ▣	서울시 여성의 근무상 지위 한계효과(marginal effect) .....	84
▣ 표 IV-20 ▣	출산관련 제도 및 주당 월평균 근로시간 한계효과(marginal effect) ·	85
▣ 표 IV-21 ▣	월평균 가구소득 대비 월평균 생활비 한계효과(marginal effect) ·	86
▣ 표 IV-22 ▣	서울시 출산·비출산 여성 및 가구 출산 2년 전 특성 비교 .....	87
▣ 표 IV-23 ▣	서울시 여성 출산영향요인 분석결과 최적모형 한계효과 .....	88
▣ 표 V-1 ▣	FGI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	91

## 그림 목차

■ 그림 I-1 ■ 지역별 합계출산율 (2014) .....	4
■ 그림 I-2 ■ 분석대상의 시기별 변화 .....	9
■ 그림 II-1 ■ 서울시 합계출산율과 경제상황 및 정책변화 (1993~2013) .....	26
■ 그림 II-2 ■ 서울시 연령별 출산율 변화 (2000~2013) .....	31
■ 그림 II-3 ■ 서울시 가임여성 연도별 순 인구이동 (2000~2013) .....	33
■ 그림 II-4 ■ 서울시 30-44세 순 인구이동 수와 주택구매력 상관관계 .....	35
■ 그림 II-5 ■ 서울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및 합계출산율 (2000~2013) .....	36
■ 그림 II-6 ■ 서울시 여성실업률 및 합계출산율 (2000~2013) .....	37
■ 그림 II-7 ■ 서울시 전·월세포함 생활물가지수 (1995~2014) .....	38



# 연구요약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21조에 따라 5년마다 법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29조에 따라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함. 이에 서울시는 2011.07.2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함
  - 일본은 1989년 합계출산율 1.57명으로 떨어진 것을 계기로 1994년 ‘엔젤플랜’, 1999년 ‘新엔젤플랜’, 2004년 ‘어린이·양육지원플랜’을 수립하였음
  - 우리나라는 1996년 공식적으로 출산억제정책을 폐지, 2006년 6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안인 ‘새로지마플랜 2010’으로 대책수립에 들어감. 그러나 1차 저출산·고령사회 계획에 따라 보육중심 및 저소득 가정을 주요대상으로 하여 5년간 42조를 투입하였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함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시 특성에 맞는 저출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 중 저출산부분(1차, 2차 비교)

	1차		2차
주요대상	저소득 가정	⇨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
정책영역	보육지원 중심	⇨	일·가정 양립 등 종합적 접근
추진방식	정부주도	⇨	범사회적 정책공조

- 합계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도 경제기반의 약화, 소비시장 위축, 노령자 부양을 위한 젊은 세대의 부담증가 등 경제 및 사회적 부작용 우려됨. 이에 여성의 노동환경 및 일·가족 양립을 통한 문제해결이 요구됨

-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1993년 1.56명이었으나 지속적으로 하락, 2014년 0.98명을 보였으며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반대로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는 1990년 4.9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15.1, 2020년 20.5로 예상됨
  - 보육지원 중심의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성평등적인 기업문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궁극적인 해결책이 요구됨
- 본 연구는 서울시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불안정한 노동환경과 경제적 요인, 주택문제 등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서울시 여성의 노동환경 개선 및 저출산 대응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한국노동패널 2~15차를 활용하여 출산가구와 비출산가구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실증분석과 FGI를 통해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해결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 2. 연구의 내용 및 결과

- 서울시 여성의 초혼연령, 출산연령이 늦춰짐에 따라 서울시 주 출산연령대 역시 30대로 이동하였으나, 서울시 30~40대 여성은 지속적으로 서울시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서울시의 높은 주택가격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 서울시 여성의 초혼연령은 1995년 26.0세였으나 점차 늦춰져 2011년 30.0세, 2013년 30.4세를 보였으며 평균 출산연령 역시 1995년 28.4세에서 2013년 32.5세로 늦춰짐
  - 연령별 출산율에 있어서 2000년 25-29세 여성의 출산율은 120.7명이었으나 2013년 41.6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반면,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은 2000년 89.5명에서 2013년 96.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35-39세 또한 2000년 18.4명에서 2014년 42.4명으로 증가함
  - 초혼연령, 출산연령이 30대로 늦춰졌을 뿐만 아니라 30대 여성의 출산율이 서울시 여성의 출산율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이는 서울시 주 출산연

령대가 30대로 이동하였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서울시 30대 여성이 출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 서울시 30-60세 이상 여성들은 2000년도 이후 꾸준히 서울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 2013년 30-34세 여성은 12,180명, 35-39세 여성은 7,648명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관찰됨. 특히, 전국에 비해 주택구매가 2배 이상 어려운(주택구매력, 가구소득대비 주택가격 지수) 서울시 주택가격 특성을 고려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음(-)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215)로 나타남

□ 한국노동패널 2~15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FGI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 비출산여성은 주택마련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근무상 지위, 월평균 소득, 직장 내 일·가족양립지원제도의 마련 등 출산여성에 비해 열악한 노동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성의 출산은 노동환경과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서울시 출산/비출산여성의 출산 2년 전 월평균 소득에 있어서, 출산여성은 174.8만원의 월평균 소득을 가지고 있었으나 비출산여성의 경우 이보다 47.7만원 낮은 127.1만원을 보임
- 출산/비출산여성의 출산 2년 전 직장 내 일·가족양립지원제도 유무를 분석한 결과, 출산한 여성의 67.6%는 직장 내 출산휴가제도가 마련되어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비출산여성의 경우 30.6%에 불과함.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역시 출산여성의 53.5%는 육아휴직제도가 있었으나 비출산여성은 22.3%에 그침. 직장 내 일·가족양립지원제도는 출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임
- 출산여성은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상용직 근무비중이 80.4%였으나 비출산여성의 경우 57.8%에 불과함. FGI결과, 상용직이라 하더라도 출산으로 인한 고용불안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비출산여성의 임시직 근무비중은 17.9%였으며 출산여성은 이보다 12.5%p 낮은 5.4%였음. 이러한 결과는 출산과 고용안정은 매우 중요함을 의미
- FGI에 참여한 모든 서울시 기혼여성들은 주택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

며, 출산보다 주택마련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은 여성 역시 원금상환 등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 출산을 늦추고 있음

□ 서울시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는 연령, 배우자(남성) 월평균소득, 주관적 경제상태, 여성의 월평균소득×교육년수, 일·가족양립지원제도 유무, 경제활동여부, 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월평균 생활비로 나타났으며 이 중 여성의 연령과 일·가족양립지원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분석을 위해 한국노동패널의 2~15차까지의 가구자료와 개인자료를 결합 후 서울시 가구만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가구 중 혼인하지 않은 가구, 여성은 제외하였음. 즉,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서울시에 출산 2년 전, 출산 1년 전, 출산까지 총 3년을 연속적으로 서울에 거주한 기혼여성(15-49세)이며 첫째아 출산영향요인을 분석함.

-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연령(코호트별, 15-29세, 30-39세, 40-49세), 교육년수, 여성의 월평균소득×교육년수, 근무상 지위(상용직/일용직 및 임시직/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비경제활동), 일·가족양립지원제도 유무, 근로시간, 입주형태(자가/전세/월세), 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월평균 생활비를 설명변수로 선별하였으며 서울시 여성의 출산여부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으며 IV panel probit 모형을 통해 추정함. 각 설명변수는 출산 2년 전을 고려하기 위해 -2시차를 이용하였으며 도구변수는 1년 전 여성의 월평균소득과 주관적 경제상태정도를 사용함

- 월평균소득은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실질적인 소득을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 2010=100)로 나누어 실질화 한 후 자연로그를 취하여 사용하였으며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를 이용하여 최적모형을 선별함

- 서울시 기혼여성의 배우자 월평균소득이 1% 증가할수록 출산확률은 1.3%p 높아졌으며, 여성 고학력·고소득(월평균소득×교육년수)일수록 출산확률은 0.1%p 증가함. 또한 비경제활동여성에 비해 상용직 여성의 출산확률은



0.1%p 높음. 직장 내 일·가족양립지원제도가 마련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출산확률이 2.8%p 높은 결과였으며, 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월평균 생활비가 1% 증가할수록 1.9%p 증가함. 이는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생활비가 높은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여성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시간 증가할수록 출산확률은 0.8%p 낮아졌으며, 20대에 비해 30대는 26.2%p, 40대 35.3%p 출산확률이 내려가는 결과를 보임

### 3. 정책방안

- 일·가족양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가족친화적 기업에 대한 유인(incentive)을 높이고, 우수기업 선정조건 강화하여 서울시 기혼여성의 일·가족양립지원 확대가 요구됨
  - 현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일·가족양립지원센터에서는 서울시 소재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직장문화조성을 위한 컨설팅과 이를 통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①여성고용 우수기업 특별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가능 : 시중보다 2~3% 낮은 대출금리(5억 원 이내 용자) ②서울가족사랑기업 B사용 ③서울시 표창 및 기업홍보(우수사례집, 관련홈페이지 및 언론보도)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우수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1차 과정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부 2명, 외부 2명의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우수기업목록을 작성하고 1차적으로 선별된 기업 중 절대평가를 통해 서울시에서 우수기업을 선정·혜택이 주어짐
  - 우수기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내부 근로자가 아닌 외부의 전문가에 의해서 평가된다는 단점이 존재함. 실제 해당 기업의 일·가족양립의 정도는 기업외부 전문가보다 내부 근로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근로자 의견의 영향력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침. 따라서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지표 및 절차를 근로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음
  -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지표를 강화함과 동시에 우수기업이 되고자하

는 유인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①서울시청 및 우수기업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 내 ‘일·가족양립 우수기업’ 신설 및 홍보 ②서울시 및 산하기관 입찰시 가산점 부여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특별자금 금리(2~3%)인하 및 용자규모(5억 원 이내) 확대와 같은 방안을 제시함

□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과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를 통한 서울시 여성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이탈방지 및 재진입 활성화, 비정규직, 임신부에 대한 불이익 적극적 예방 필요

- 서울시 비출산 기혼여성에게 고용안정이 크게 요구되는 상황 하에서 서울시는 2015년 5월까지 5,625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17년까지 1,697명의 비정규직을 추가 전환함으로써 총 7,322명을 정규직화 할 계획임. 이러한 공공부문에서의 정규직 전환은 단순 공공부문에서 그치기보다 사회적 분위기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높은 언론매체 등을 통해 민간부분에 영향을 주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서 여성을 위한 4개의 단위과제가 존재하나 임신부를 위한 단위과제는 고려되지 않음. 일하는 임신부 근로자 쉼터 등의 운영을 통해 출산 전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현상을 방지해야 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근로환경 단위과제 중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추진’ 직장내 괴롭힘 세부 처리 절차 등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계획 중에 있음. 그러나 성희롱 예방교육의 강화뿐만 아니라 임신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구제가 필요하며 직장맘지원센터 기능강화를 통해 여성의 노동권 보장이 요구됨

□ 임대주택의 높은 진입장벽을 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며, 기존의 희망하우징 대상의 확대 및 사회적 주택 공급을 통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택마련 방안이 필요함

- 2015년 현재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①혼인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 혼인기간 내에 출산한 자녀(입양포함)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②결혼 3년 이내 유자녀 또는 임신 중(1순위) ③결혼 3년 초과 5년 이내 유자녀 또는 임신 중(2순위) ④청약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는 신혼부부와 같은 조건이 필요함
- 기존의 제도는 혼인 후 출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예비 신혼부부 또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또한 소득 기준 역시 매우 낮아 FGI에 참가한 서울시 기혼여성들 중 소득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단 한명도 없었음
- 임대주택의 대상자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존재함
- 서울시와 SH공사가 다가구주택과 건설한 원룸을 서울시 대학생들에게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희망하우징'의 대상을 신혼부부로 확대하여, 서울시 신혼부부 주택문제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 I

##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60년에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급격한 산업화와 가족계획사업의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83년 2.08명으로 인구 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sup>1)</sup> 2.1명 미만의 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이래 약 10여 년간 1.6~1.7명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IMF 경제위기 이후 합계출산율은 급락하기 시작하여 1998년 1.47명, 2005년 1.08명, 2014년 1.21명을 기록하였다. 이미 1986년 저출산사회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이 지난 1996년에 인구감소 및 저출산의 문제를 인식, 공식적으로 출산억제정책을 폐지하였다. 또한 2004년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였으며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2006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을 수립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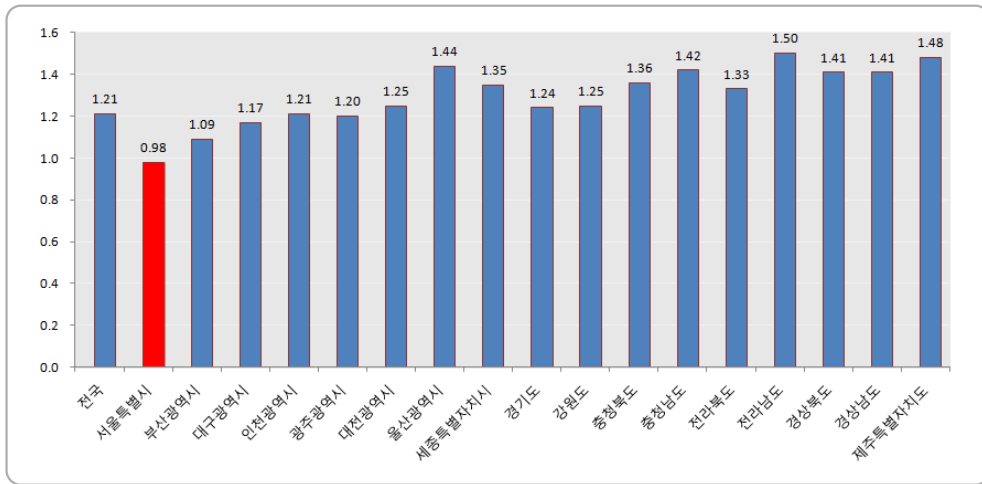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조사 및 연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1) 인구수의 현상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산율의 수준을 의미한다.

안중범 외(2010)의 연구에서 2006년부터 '1차 저출산·고령사회 계획'에 따라 보육 중심 및 저소득 가정을 주요대상으로 하여 5년간 42조를 투입하였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 중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2014년 0.98명을 보이며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주 : 가임기(15-49세)여성을 기준으로,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의미함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4, DB웹데이터

■ 그림 I-1 ■ 지역별 합계출산율 (2014)

이에 정부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맞벌이가구, 베이비붐 세대 등 정책수요가 높은 계층에 초점을 맞춰 정책효과를 높이는 것을 중점으로 시행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 서울시는 2011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다.

■ 표 I-1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저출산부문(1차, 2차 비교)

구분	1차	2차
주요대상	저소득 가정	⇒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
정책영역	보육지원 중심	⇒ 일·가정 양립 등 종합적 접근
추진방식	정부 주도	⇒ 범사회적 정책공조

출처 : 안중범 외, 「저출산의 원인분석을 통한 저출산대책개선과 여성인적자원 활용방안 연구」, 2010

4 ■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정책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중장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시 특성에 맞는 저출산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 대응 정책의 비전과 방향
2. 추진과제와 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
4. 그 밖에 저출산 대응 및 출산장려 정책으로서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구청장,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관련 계획 및 정책, 자료제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반면, 저출산 대책에 대해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정부대안이 출산의 문제를 여성의 책임으로만 인식한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여성의 교육 수준 증가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생각은 성역할 분담에서 초래되는 문제를 도외시한 것이며, 성평등적 접근만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재경, 2006).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성평등적 접근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일·육아 양립을 위한 육아시설의 확대에만 주된 초점을 두었으나(김우택, 2006), 보육지원 중심의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일부 성평등적인 측면을 주장하는 연구에 따르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육아병행의 어려움에 있으며, 육아시설 등에 대한 과도한 정부지출보다 ‘성평등’적인 기업 문화, 파트타임 및 맞춤형 근무시간제와 같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통하여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김우택, 2006; 박승희·김사현, 2008; 최숙희·김정우, 2006)

본 연구는 위의 주장들과 마찬가지로 성평등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동의하나 인구학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연구와 1차적 관심이 다르

다. 서울시 여성의 적절한 소득, 안정적인 일자리 등 서울시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노동환경’과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을 분석한다. 다시 말해, 높은 비용을 수반하는 출산영향의 주요 원인을 경제적인 문제라고 판단하며 경제적인 문제는 노동시장 차별로부터 기인하므로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 고용의 불안정, 일·가족양립의 어려움이 여성의 출산에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여성의 차별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혼인, 출산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사회적 환경(일·가족양립, 성평등한 노동환경 등)조성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서울시 여성 또는 가구의 경제력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서울시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분석의 지역적 범위를 서울시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타 지역과 차별되는 요인들을 분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물가상승률과 이로 인한 높은 생활비와 주택비용 등은 장기적으로 높은 비용을 수반하는 출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비용을 보이는 서울시 특성과 서울시 여성의 노동환경, 경제적 요인들을 선별하여 저출산 문제에 접근한다.

분석을 위해 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출산여성과 비출산여성, 더 나아가 출산가구와 비출산가구의 경제적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현황을 분석하고 실증분석과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수행한다. 또한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서울시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현 노동시장, 서울시 출산장려정책 등 환경적 문제를 진단하고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2.1 연구의 내용

저출산에 관한 연구는 크게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는 ‘혼인’을 결정하는 요인과 가구 분석단위의 ‘출산’ 결정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기존의 수많은 연구는 개인 단위 접근을 통한 여성의 연령, 교육수준 등 인구학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거나 양육, 보육시설과 같은 주변 환경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 물론 저출산 대응을 위해 보육시설과 같은 인프라(infra)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서울시 여성의 노동시장 처우, 출산·육아휴직 제도 이용과 더불어 생활비, 주택가격 등 서울시의 높은 비용의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단위의 서울시 여성의 특성과 가구단위의 가구특성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개인자료와 개인이 속한 가구자료를 제공하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개인자료의 고유식별번호(PID)와 가구식별번호(HHID)를 이용하여 한 개의 데이터로 가공하였으며 혼인한 서울시 여성과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즉, 한국노동패널 조사가 시작된 이후 출산한 서울시 여성과 가구가 분석대상이며 한국노동패널조사 이전에 출산한 서울시 여성, 서울시 미혼여성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조부모가 손자를 양육하는 가구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표 I-2】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분석을 통한 정책방안 연구 분석대상 및 시기

분석대상	분석시기	분석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 출산·비출산여성</li> <li>•서울시 출산·비출산가구</li> </ul>	출산 2년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 미혼여성</li> <li>•조부모가 손자를 양육하는 가구</li> <li>•노동패널 조사 전 이미 출산을 완료한 여성 및 가구</li> </ul>
	출산 1년 전	
	출산시기	

분석시기에 있어 단순 시계열적 분석이 아닌 각 개별여성의 출산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출산한 여성의 경우 2009년, 2008년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2009년에 출산한 여성은 2008년, 2007년 요인을 추출하여 패널자료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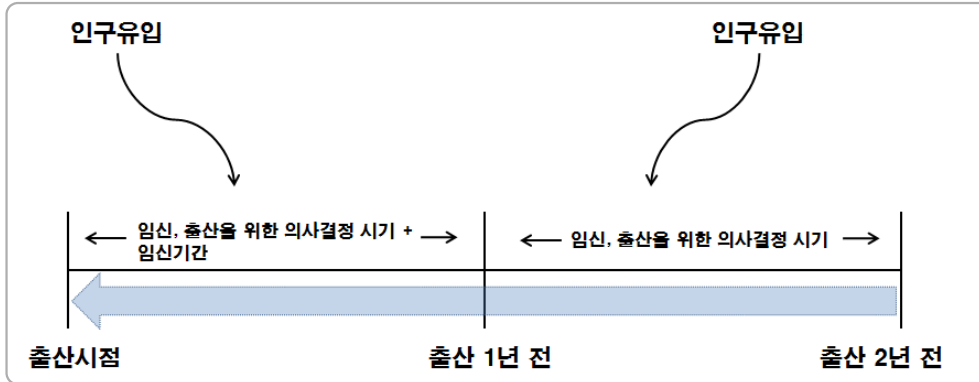
하였다.

패널자료 구성 시 가장 우선 고려한 점은 ‘출산시점을 기준으로 몇 년 전부터 여성의 환경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가?’이다. 출산시점을 기준으로 수년전부터의 소득, 저축여부, 노동시장 처우 등을 고려할 수도 있겠으나 출산과 무관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 문제(가령, 2010년 출산한 서울시 여성의 1999년 당시의 월평균 소득과 같은), 서울시에 연속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기간의 증가로 인한 표본크기의 감소, 비효율적 추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임신기간을 포함한 임신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을 출산 2년 전부터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3】 분석을 위해 구축한 패널자료 구조 및 분석시기

개인번호	연도	출산유무	분석시기
1	2008	0	출산2년 전 + 출산 1년 전 + 출산시기
1	2009	0	
1	2010	1	
2	2007	0	
2	2008	0	
2	2009	1	
⋮			
170	2011	0	출산 1년 전 + 출산시기
170	2012	1	
171	2012	1	출산시기

패널자료는 동일한 개인을 추적 조사하는 특성으로 인해 출산 2년 전, 출산 1년 전, 출산시기까지 시간변화에 따른 환경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출산시점, 출산 1년 전 서울시로 유입된 인구로 인해 각 시점의 여성·가구가 완벽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즉, 출산 2년 전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며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진 여성·가구뿐만 아니라 중간에 유입된 인구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다.



【그림 I-2】 분석대상의 시기별 변화

서울시 저출산의 원인을 크게 다음과 같이 경제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정책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특성을 제시하고 이를 다시 미시적으로 세부 분류하여 현황분석 및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I-4】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정책방안」 저출산 요인

경제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정책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소득 및 고용</li> <li>• 남성의 소득 및 고용</li> <li>• 서울시의 주택비용</li> <li>• 양육 및 교육비용</li> <li>• 가구 외(外)적인 경제적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여성의 초혼 연령 및 출산연령</li> <li>• 서울시 가임여성의 인구변화</li> <li>• 서울시의 순인구이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li> <li>•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장려정책의 규모</li> <li>• 서울시 정책대상의 범위</li> </ul>

【 표 I-5 】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정책방안」 분석대상 및 변수

대상	변수	현황 분석	실증 분석	변수설명
출산·비출산 남녀 (개인단위)	교육기간1)	○	○	• 무학(0년)~박사(21년)
	직장의 출산휴가 유무비율	○	○	•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율
	직장의 육아휴직 유무비율	○	○	
	경제활동상태 (취업인구, 비경제활동인구)	○	○	• 상용직: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 임시직: 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또는 1년 이내에 일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일용직: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또는 매일 고용되어 일당제를 받는 경우
	근무상 지위 (상용직/임시직/일용직/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	○	
	정규직비율	○	×	•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며 근로계약기간의 제약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
	주당 평균 근로시간	○	○	• 시간제와 전일제 주업시간 + 부업시간 모두 포함
	월평균소득	○	○	• 세후 근로소득
출산·비출산 가구 (가구단위)	가구 월평균소득	○	×	• 여성, 배우자(남편)뿐만 아니라 가구구성원 세후 근로소득의 총합임
	이전소득	○	×	•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친척, 친지로부터 받는 지원금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	×	• 사업자금, 주택구입, 경조사, 의료비 등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경제적 지원의 총 금액
	주관적 경제상태 인식정도	○	×	• 5점 척도(매우 만족~매우 불만족)
	월평균 저축 및 부채규모 (금융권/비금융권)	○	×	• 금융권에서의 대출과 친척, 친지로부터의 부채
	입주형태 (자가/월세/전세/기타)	○	○	-
	주거형태 (아파트/연립/단독/다세대/기타)	○	○	• 상가주택과 기타유형은 기타로 처리함 • 실증분석 시 연립과 다세대는 하나의 변수로 통합함

대상	변수	현황 분석	실증 분석	변수설명
서울시	가임여성 인구 수	○	○	15~49세 서울시 여성인구 수
	기혼여성 인구 수	○	○	15~49세 서울시 기혼여성 인구 수
	출생아 수	○	○	-
	초혼연령	○	×	• 서울시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
	출산연령	○	×	• 첫째아~셋째아 이상 평균 출산 연령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	○	×	•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에 전·월세를 반영하여 제공함
	주택가격 (주택구매력/소득대비주택가격)	○	×	• 소득3분위를 이용한 주택구매력과 소득3분위 대비 서울시 주택가격 3분위 가격 지수
	월평균 공·사교육비	○	○	• 통계청 사회조사 및 한국노동패널(2인 가구 이상)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재구성함
월평균 생활비	○	○	• 2인 가구 이상의 월평균 식비, 주거비, 의류비 등 생활에 드는 총 금액임 • 부채 원리금 상환은 제외함	

[표 I -5]는 본 연구의 현황분석 또는 실증분석에서 사용한 변수와 해당변수의 정의를 보여준다. 교육기간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대졸이상을 더미(dummy)변수로 사용하나 본 연구에서는 학력이 아닌 교육기간을 사용하였으며<sup>2)</sup> 비록 임금근로자에게만 관찰되나 사업장에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의 마련 정도를 살펴보았다. 근무상 지위 역시 임금근로자인 상용직과 임시직, 일용직과 더불어 비임금근로자인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현황을 제시하며 실증분석 시 근무상 지위, 경제활동상태를 하나로 결합하여 상용직/임시직·일용직/자영업·무급

2) 본 연구에서 학력과 교육기간을 모두 고려하였으나 학력을 고려하게 될 시 실증분석에서 변수를 더미(dummy)로 처리해야 하는 단점이 발생한다.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 중 교육이 가지는 한계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학력 대신 교육기간을 고려하였다.

가족종사/비경제활동으로 사용하였다.

가구단위의 변수 중 가구 월평균소득, 가구 이전소득,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주관적 경제상태 인식정도, 월평균 저축 및 부채규모는 조사차수가 짧아(한국노동패널 9차부터 제공)현황분석에만 이용하였다. 이 중 가구 월평균소득의 경우 여성, 배우자(남편)와의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의 세후 근로소득의 총합으로 산출하였으며 주거형태는 연립과 다세대는 하나의 변수로 통합하여 실증분석에 이용하였다.

서울시 합계출산율 분해 및 서울시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 가임여성 인구 수, 기혼여성 인구 수, 출생아 수, 초혼연령 등 거시적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주택가격과 교육비, 생활비를 활용하였다. 다만 분석의 대상은 출산이전 출산가구이므로 실제 실증분석에서 월평균 공·사교육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혼인가구(2인 이상 가구)월평균 생활비를 실증분석에 포함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서울시 기혼여성의 출산영향요인 분석과 더불어 모형에서 반영하지 못한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한국노동패널(2~15차)에서 주거에 관해 주거유형(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과 입주형태(자가, 전세, 월세, 기타)를 제공한다. 서울시의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경제적인 압박과 이로 인한 출산의 어려움을 모형에서 반영하기 위해 현재 주거지의 구입방법(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등)과 이로 인한 부채정보가 필요하다. IV장과 V장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혼인한 가구의 주택구매를 위한 부채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노동패널에서 이와 같은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부채정보뿐만 아니라 원자료의 한계로 인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몇 가지의 정보들이 누락되거나 통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었다. 출산이라는 것은 단순한 두개의 원인이 아닌 매우 복잡한 개인, 환경 등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한 개의 모형에서 모두 통제하는 것 이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물론 본 연구가 서울시 여성의 출산력 실태조사를 통해 자료를 구축하였다면 많은 요인들을 통제하여 충분한 변수와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는 한계점으로 인해 모형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은 FGI를 통해 보완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와



FGI 결과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차구성 및 전반적인 연구의 흐름은 [표 1-6]과 같으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장 도입부에 각 장의 목적과 간략한 요약은 제시하였다.

II장과 III장에서는 통계청 인구동향자료를 중심으로 서울시 합계출산율, 연령별 출산율, 가임기 여성의 수, 출생아 수를 포함한 여성의 수와 서울시 물가지수, 주택가격 지수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서울시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서울시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분해하여 실제 미혼의 문제, 출산하지 않는 문제가 합계출산율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었는지 분해하여 제시한다.

IV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 2차~15차까지의 개인자료, 가구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혼인가구 중 출산가구와 비출산가구의 특성을 살펴본다. 여성의 학력 및 월평균 소득 등 개별특성과 가구특성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출산여성과 비출산여성의 차이를 분석한다. II장, III장, IV장에서 현황을 분석하며 나타난 문제들도 간략하게 제시하며 출산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거친다.

V장에서는 앞서 다뤘던 IV장의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 여성의 출산결정요인을 모형화(modeling)하여 실증분석하며 원자료의 한계로 인해 다루지 못한 요인들은 VI장의 FGI를 통해 보강한다.

마지막으로 VII장에서는 앞서 현황에서 드러난 출산환경의 문제와 실증분석의 결과 및 FGI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서울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차별과 이로 인한 일·가족양립의 문제, 서울시의 높은 주거비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도출한다. 또한 본 연구의 한계점을 기술하여 추후 서울시 여성의 출산 영향요인에 관한 후속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표 I -6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정책방안 연구흐름



## 2.2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저출산에 관해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의 1차 당사자인 여성의 노동환경, 가구 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경제적 위치 등에 초점을 맞춘 실증분석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저출산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출산 행위 자체에 관심을 두거나 출산 후 요구되는 양육비, 보육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결정함에 있어서 단순히 배우자(남성)의 소득과 근

무상 지위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여성의 소득은 배우자의 소득보다 낮은 비중으로 다뤄졌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의 노동환경과 여성이 가구 내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치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의 개별특성(학력, 나이), 가구의 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물가, 주택가격, 주거안정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성을 두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 중 대부분은 출산여성 및 가구특성 정보를 단년도만 제시하여 시계열적 변화를 볼 수 없는 아쉬움이 존재하였다. 이에 기존연구에서 보여주지 못한 출산여성의 시계열적 변화(출산 2년 전, 출산 1년 전, 출산시점)를 제시하여 출산여성이 출산에 가까워짐에 따라 소득변화, 근무상 지위를 통한 노동시장에서의 이탈 등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양육비와 보육이 같은 경제적 보상으로 저출산이 해결되지 힘들다는 차경욱(2005)의 주장에 일견 동의하며 서울시 여성이 출산하지 않는 혹은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여성노동시장과 경제적 문제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실증분석 모형에 반영하지 못한 중요 요인들(주택가격과 인구유출 등)은 현황분석과 FGI, 저출산 극복 해외사례를 통해 보완하여 정책적 방향을 도출하였다.

【표 I-7】 저출산 선행연구 및 결과

연구자 (연도)	주요변수 및 출산과의 관계	연구결과
김태현 (2006)	혼인연령 및 학력	-
	혼인상태 불안정(이혼, 사별)	-
	도시화 수준	-
	전문직 및 사무직(가구원)	+
김현숙 (2007)	가구소득	+
	남아선호도	+
	남편의 장남여부 및 농촌지역	+
	혼인연령 및 학력	-
김영주 (2005)	주택가격	-
	교육열	-
손승영 (2005)	경제적 이유 (자녀양육의 시간과 비용)	-
최성은 우석진 (2008)	공공부문 종사 여부(가구원)	+
	가구소득	+
최경수 (2008)	생애효용모형 (코호트별 임금률 추정)	.
차경옥 (2005)	교육비 및 양육비	-
	가구 월평균소득	-
김현식 김지연 (2012)	근무상 지위(상용/임시/일용)	.
	가구소득	+

# II

## 서울시 저출산 원인과 현황

1. 출산에 관한 제이론들
2. 서울시의 출산율 및 주요요인 현황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II

## 서울시 저출산 원인과 현황

본 장에서는 기존의 저출산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서울시 합계출산율, 연령별 출산율, 출생아 수, 초혼연령, 출산연령 등 인구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참가율, 서울시 주택가격 및 물가와 같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에 관해 거시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서울시 초혼연령, 출산연령이 늦춰짐으로써 주 출산연령대가 20~29세에서 30~39세로 변화하였으며 그 중 30~34세 여성이 서울시 출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소득대비 주택가격은 전국에 비해 2배 높았으며<sup>3)</sup> 생활물가지수 역시 매년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여성의 소득증가는 다소 미비한 모습이었고 그 중 미혼여성의 월평균 소득은 기혼여성보다 낮았다. 주 출산연령대로 나타난 30~39세의 순 인구이동(인구유출)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나타났는데 서울시의 높은 주택가격, 생활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1. 출산에 관한 제이론들

저출산의 문제는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매우 복합적인 문제이다.

---

3) 주택구매력(HAI)은 전국에 비해 2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의사결정과 더불어 한 가구의 종합적인 환경 등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인의 생물학적 요인, 인구학적인 특성, 개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 사회적 지위는 물론이며 출산 이후에 발생할 보육, 교육의 문제와 장기적으로 자녀의 혼인 등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개인과 가구의 상황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경제상황, 사회적 분위기, 규범 등 역시 출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복합적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분을 총 망라하여 다루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인구학적, 경제학적, 사회문화적인 접근을 다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세 개의 측면에서 접근하나 최종적으로 하나의 문제, 고용 및 소득의 안정에 중심을 두고 전개한다. 이는 미시적 분석에서 다뤄질 교육, 주택마련, 부양 등 소비지출의 문제는 여성 노동시장의 특성에서부터 기인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 1.1 인구학적 접근

출산결정요인에 대한 인구학적인 접근은 가임력(fecundity)와 출산력(fertility)을 중심으로 여성의 교육수준의 증가로 인한 혼인연령의 상승, 이로 인한 만혼화에 주목한다. 가임력이란 임신할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을 의미하며 출산력은 가임력을 출산행위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가임력은 가임기간을 전제하며 일반적으로 15~49세로 보고 있는데 가임기간의 감소는 출산력의 감소로 이어져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된다.

여성의 교육수준 상승은 경제적 접근에서 밝혔듯이 여성의 경제적 안정, 높은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 여성의 시장임금을 상승시키고 출산에 대한 기회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류기철·박영화(2009)는 여성가족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출생코호트별(cohort) 위험도 모형(hazard-model)을 적용하여 혼인연령 및 결혼 이후 첫 번째 출산까지의 간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출생시기가 최근으로 올수록,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혼인연령이 증가함을 보였다. 반면 이삼식 외(2005)의 연구에서는 혼인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 출산 위험도가 낮아진다



는 결론을 보였다.

혼인연령과 첫 출산간의 관계에 대해서 은기수(2001)는 혼인연령이 높아질수록 첫 출산이 빨라진다는 결론을 보였으나, 민희철(2008)은 혼인연령과 첫 출산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것을 보였다. 최경수(2003)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 감소의 과정은 20대의 출산율이 하락한 반면, 30대의 출산율을 증가하였으나 감소폭이 증가폭을 초과하며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다는 것이다. 최경수의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앞서 서울시 출산율 현황에서 보였듯이 서울 시도 동일한 결과였다.

선행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사회적 요인들 중 계량화가 다소 불가능한 억제요인들이 있다. 이를테면 피임법의 사용이나 불임시술, 인공유산 등과 같은 강제적인 출산억제 방식이다. 이러한 것들은 자연출산력(natural fertility)을 억제함으로써 출산력 저하를 가져오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자연출산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 거주하고 있는 후터라이트(Hutterite)와 인도양의 수마트라 근처의 코코스섬(Cocos Island)에서는 출산율이 매우 높는데, 이는 이들 사회에서 피임 등을 일절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Pott & Selman, 1979; 이홍탁, 1987; 박승희·김사현, 2008에서 재인용)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 인구증가율이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판단, 피임 보급, 지정시술의사에 의한 자궁 내 장치 및 불임시술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하여 출산율을 낮추려 하였다. 그 결과 1976년 15~44세 기혼여성 중 44.2%가 피임을 실천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97년 8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김한곤(1993)의 연구에서 경제발전과 여성의 지위, 불임시술을 통해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분석하였고 유의함을 보였다.

인구학적 접근에서 언급된 저출산 요인들은 직접적이긴 하나 매개적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을 초래하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들, 여성의 경제활동을 포함한 경제적 요인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1.2 경제학적인 접근

출산에 관한 경제학적인 접근방법은 출산행위가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 출산으로

부터 얻는 효용(utility)과 이에 따르는 비용에 초점을 맞추어 출산의 결정원인을 분석한다. 다시 말해 부모는 자신들의 소비와 출산으로 인한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아이를 물질적 재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여성의 교육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임금수준이 상승하게 되고 출산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하여 출산이 감소한다는 인구·사회학적인 접근방법과 연결된다. 그러나 경제학적인 접근의 중요한 차이점은 자녀를 가구의 효용함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며 소득효과(income effect)와 시간의 기회비용(price-of-time)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Malthus는 경제발전, 소득의 증가와 함께 아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이는 출산에 대한 경제학적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Kuznets(1996)의 연구에서 서구유럽은 개발도상국 초기단계에서는 출산율이 증가하였지만 경제발전과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 Malthus의 가정이 옳지 않음을 보였다.

이밖에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출산율 결정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연구의 근간은 Heckman&Willis(1975)의 생애효용모형, Becker(1960, 1973, 1976)의 Quantity-Quality 모형, Easterlin(1968)의 세대간 상대소득에 따른 이론으로 대표될 수 있다. 이 중 최초 Becker(1960, 1973)의 연구는 가구의 효용을 극대화 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수(Quantity)와 자녀의 질(Quality)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Quantity-Quality 모형을 제시하였다.

Becker의 연구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이 감소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 시작되었다. 자녀의 질적 수준의 초기 부존자원에 대한 고려가 없고 자녀수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자녀의 질적 수준에 대한 소득탄력성보다 크다는 가정을 이용하여 가구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자녀의 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증명하였다. 다시 말해 소득의 증가가 추가적인 출산보다 자녀의 교육, 질적인 측면에 더 크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녀의 질이 중요해진 데에는 산업화가 가져온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사회의 전반적인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그와 더불어 노동의 질,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의 향상이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다(박승희·김사연, 2008).

인적자본의 투자는 즉 여성 교육수준의 향상과 크게 연관되어 있는데 Newman

& McCullouch(1984)는 1976년 코스타리카 출산력 자료를 활용하여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을 고려한 출산시기 결정요인에 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고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시기가 늦춰지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출산간격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소득에 중심을 두고 분석한 연구로는 Heckman & Walker(1990a,b, 1991)가 있다. 여성의 임금이 높을수록 임신시기가 늦어지고 생애주기에 있어서 총 출산의 수가 감소한 반면 남성의 소득이 높을수록 임신시기가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기회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양육비용의 증가를 야기한다. Lundholm&Ohlsson(1998)은 Becker의 모형에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데 투입되는 시간을 시간제약식으로 추가하여 모형을 재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부모가 시장에서 보육서비스를 구매하고 동시에 부모 역시 보육에 참여하는 경우 Becker의 결론과 동일한 소득과 자녀의 수 통계적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시장에서 보육서비스를 구매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인 경우 소득이 증가할 때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노동과 양육의 양자택일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다면 여성의 높은 소득이 출산율을 보존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비록 Lundholm&Ohlsson의 연구에서 여성의 소득에 초점을 맞췄으나 최근 우리나라, 서울시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안정적인 일자리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원화된 경우에 정규직 여성들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출산 및 유아와 관련하여 임금손실, 기술 침식(skill erosion), 경력 및 근속연수의 상실, 그리고 이로 인한 진급의 불이익 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이전 직장으로의 복귀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그것이 완전히 불가능할 경우 비정규직으로 떨어질 위험이 존재한다(박승희·김사연, 2008). 비정규직은 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미래에 대한 소득불안, 고용의 불안정성은 노동시장 이탈과 이탈 전 근무하였던 직장으로의 복귀, 재취업에 대해 더 큰 어려움을 안고 있다. 다시 말해 일시적인 계약 상태의 여성들은 더 낮은 취업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Baizán(2004).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인 접근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노동시

장에서의 여성의 소득, 고용의 안정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출산의 기회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 1.3 사회학적인 접근

사회학적인 접근은 경제학적인 접근과 달리 개인적 성향보다 집단적(collective) 특성을 고려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적자본을 근거로한 정태적인(statistic) Becker의 연구와 달리 동태적인(dynamic) 관점에서 출산율에 접근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Easterlin(1968)의 연구에서는 세대 간의 소득차이, 세대별 인구수의 차이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젊은 세대의 근로자 수의 감소는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임금을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생활수준이 높아져 결혼과 출산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내세웠다(반대로 결혼과 출산을 많이 한 세대가 부모세대가 되는 20년의 시간이 지난 후 노동시장의 경쟁으로 인해 새로운 세대의 결혼과 출산은 감소한다). 또한 윗세대의 평균임금에 비해 젊은 세대의 평균임금의 비중이 커질수록 결혼과 출산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보였다.<sup>4)</sup>

Easterlin의 상대소득가설(relative income hypothesis)과 달리 사회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Leibenstein(1974)가 있다. Leibenstein은 출산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고유한 역사, 사회경제적, 문화적인 변수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자녀 양육비, 교육비와 같은 자녀양육에 투입되는 직접비용과 자녀양육으로 인해 포기되는 여성노동의 기회비용 구분하여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 출산을 많이 하나 경제발전 이후 출산이 줄어들음을 밝혔다. 경제발전으로 인한 소득증대가 여성노동의 기회비용을 증가시킨 요인으로 본 것이다. 즉, 자녀출산으로 인한 효용이 출산, 육아로 인한 비용보다 적어져 출산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또한 류덕현(2006)의 연구에서 사회준거집단의 평균소득에 비해 개인의 소득이 낮을수록 출산이 감소함을 보였다.

사회학적인 접근에서 출산과 관련하여 항상 제기되는 요인은 개인의 가치관, 결

---

4) 초기의 출산율에 관한 실증분석에서는 아이의 수를 이용한 OLS 모형이 사용되었으나 추정이 비효율적(inefficient)이고 표준편차에 대한 추정치가 비일치적(inconsistent)한 문제가 나타났다. 또한 출산자녀가 음(-)의 값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혼관, 자녀관이다. 우선 경제발전이 따른 여성의 교육기회 향상이 결혼관 변화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며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경제발전 - 교육기회 증대 -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증대 - 여성지위의 향상 - 여성의 성역할 변화 - 결혼관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것이다(김한곤, 1993; 조혜자·방희정, 2005; 박승희·김사현, 2008). 류덕현(2005)은 메커니즘의 최종결과인 결혼관, 자녀관을 자산소득이론(asset theory of children)으로 접근하였는데 자녀에 대한 투자수익이 시장이자율보다 높다면 출산을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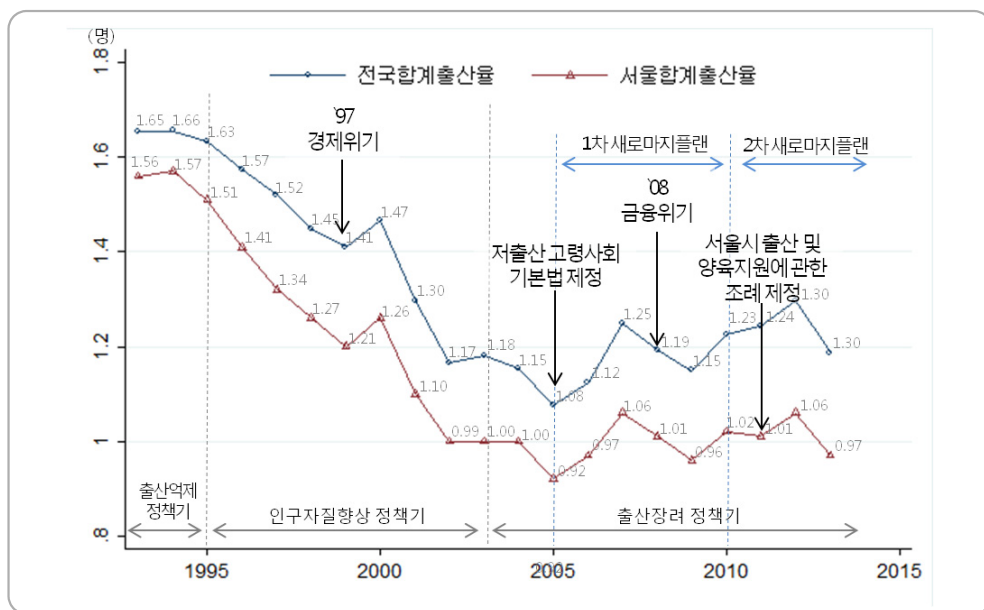
우리나라와 같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육아 및 가사의 부담이 크게 남아있는 사회에서, 선행연구와 같이 여성의 역할 과부하로 인한 부작용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경제학적인 접근과 동일하게 사회적인 접근 역시 저출산에 접근하는 방식만 다를 뿐 공통적으로 여성이 직면한 어려움을 언급한다. 특히 출산 이후 보육, 양육에 투입되는 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여성의 소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의 소득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인가? 그것은 단순 낮은 임금과 높은 임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분명 높은 임금이 낮은 임금보다 출산과 이후 교육에 있어서 이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보다 먼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지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고용의 안정,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이탈 후 재진입, 가족 중심적인 사고방식 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지 판단된다. 이 밖에 결혼 후에도 이혼을 선택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과 더불어 자녀출산 및 양육 역시 필연적인 인생의 과업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인생의 가치나 기쁨, 보람을 위한 선택적 행위의 한 영역으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 또한 요구된다.

## 2. 서울시의 출산율 및 주요요인 현황

### 2.1 서울시 합계출산율 및 주 출산연령대의 이동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1993년 1.56명<sup>5)</sup>이었으며 1996년 인구억제정책이 폐지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합계출산율 1.30명 이하를 보이며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였고 2005년 0.92명의 최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였다. 이후 다시 반등하였으나 0.9~1.0명 수준에서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여전히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출산율과 함께 초저출산 사회에 머물렀다. 출생건수 역시 합계출산율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며 1993년 이래 가장 적은 84,066명을 보였다.



■ 그림 II-1 ■ 서울시 합계출산율과 경제상황 및 정책변화 (1993~2013)

5)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70년도부터 제공되고 있으나 서울시를 포함한 시·도 자료는 1993년도부터 제공된다. 이로 인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이 어느 시점에서 인구대체수준(2.1명), 저출산 사회에 진입하였는지 살펴볼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 표 II -1 】 서울시 합계출산율 및 출생건수 변동추이 (1993~2013)

(단위 : 명)

연도	합계출산율	출생건수	연도	합계출산율	출생건수
1993	1.56	175,827	2004	1.00	98,790
1994	1.57	175,707	2005	0.92	89,489
1995	1.51	166,236	2006	0.97	92,885
1996	1.41	152,140	2007	1.06	100,107
1997	1.32	141,204	2008	1.01	94,736
1998	1.26	133,174	2009	0.96	89,595
1999	1.20	126,742	2010	1.02	93,268
2000	1.26	131,935	2011	1.01	91,526
2001	1.10	113,632	2012	1.06	93,914
2002	1.00	100,928	2013	0.97	84,066
2003	1.00	100,137	-	-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DB웹서비스

서울시 여성의 초혼연령은 26.0세(1995년)에서 30.4세(2013년)로 4.4세 늦춰졌으며 남성의 초혼연령은 28.8세(1995년)에서 32.6세(2013년)로 3.8세 늦춰졌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초혼연령 차이는 2.8세(1995년)였으나 2.2세(2011년)까지 좁혀졌고<sup>6)</sup> 차이는 2013년까지 유지되었다. 바꾸어 말하자면 남성의 만혼화보다 여성의 만혼화가 더 가팔랐다.

여성의 출산은 전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 가능한 사건(event)이 아니며 가임기라는 기간에 한정될 확률이 매우 높다. 여성의 생물학적 가임기간을 49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혼은 그만큼 출산가능기간을 짧게 만들며 출산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최세은·옥선화(2003)는 30대 혼인남녀의 초혼연령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혼인이 늦어짐을 밝혔다. 하지만 여성의 고학력화가 만혼을 야기하고 이어 가임기간을 단축하여 저출산을 발생시키는 문제점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

6) 과거에 비해 증가한 여성의 사회활동, 경제활동 등으로 인해 남성보다 가파른 속도로 만혼화가 발생되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전통적인 노동경제학에서 학력은 고용과 소득안정의 확률을 높여 경제적 기반 안정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에 여성의 고학력화는 비록 가임기간을 단축시킨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점도 지닌 요인이다. 여성의 경제적인 안정은 생활비, 주택비를 포함하여 미래 자녀의 양육, 교육비 부담을 낮추어 출산의 확률을 높일 수도 있다는 점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sup>7)</sup>

【표 II-2】 서울시 평균 초혼연령 변화 (1995~2013)

(단위 : 세)

구분	남성(A)	여성(B)	차이(B-A)
1995	28.8	26.0	-2.8
2000	29.7	27.3	-2.4
2005	31.2	28.6	-2.7
2010	32.2	29.8	-2.3
2011	32.3	30.0	-2.2
2012	32.4	30.2	-2.2
2013	32.6	30.4	-2.2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DB웹서비스

서울시 여성의 만혼은 단순히 혼인의 시기가 늦춰진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기간만큼 출산의 시기가 늦춰진다는 의미를 갖는다. 서울시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28.4세(1995년)였으나 초혼연령의 증가와 같이 점차 증가하여 32.5세(2013년)로 4.1년 늦춰졌다.

7) 차경옥(2005)과 신윤정(2008)의 연구에서는 출산에서 파생되는 금액인 보육, 교육비의 지출이 여성의 출산의향과 가구의 출산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결과는 여성 또는 가구의 출산의사결정에 있어서 경제적인 요인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표 II-3】 서울시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및 자녀 출산연령 (1995~2013)

(단위 : 세)

구 분	평균출산연령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상
1995	28.4	27.1	29.3	32.6	32.4
2000	29.5	28.4	30.3	33.1	32.9
2005	30.8	29.9	31.8	34.2	34.0
2010	31.9	30.9	32.9	35.1	34.9
2011	32.1	31.1	33.1	35.1	34.9
2012	32.3	31.3	33.2	35.3	35.1
2013	32.5	31.5	33.4	35.3	35.1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DB웹서비스

이처럼 서울시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과 평균 출산연령의 늦춰짐은 주 출산연령대 역시 늦춰짐을 의미한다. 서울시 합계출산율과 출생건수의 변동뿐만 아니라 연령대 별 출산율 비중<sup>8)</sup>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표 II-4]에서 보는바와 같이 1993년 주 출산연령대 출산 중 55%를 차지하던 25~29세 혼인여성의 출산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2013년에 이르러 22%까지 하락하였다. 반면 30~34세 혼인여성의 경우 1993년 23%(출산율 70.0명)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지속적인 출산율 증가를 보이며 2013년 52%(출산율 96.9명)의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1993년 5%(출산율 14.0명)의 가장 낮은 출산 비중을 보인 35~39세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2013년 23%(출산율 42.4명)이었다. 이는 서울시의 주 출산연령대가 20대에서 30대로 이동하였다는 것을 매우 잘 드러내고 있다.

8) 주 출산연령대의 출산율을 모두 합한 후 해당 연령대의 출산율의 비율을 통해 산출한 수치로 주 출산연령대(20~39세) 중 주요 출산연령대를 확인가능하다.

$$\text{비중} = (i\text{의 출산율} / \sum_{i=20}^{39} \text{출산율}), (i=20 \sim 24, 25 \sim 29, 30 \sim 34, 35 \sim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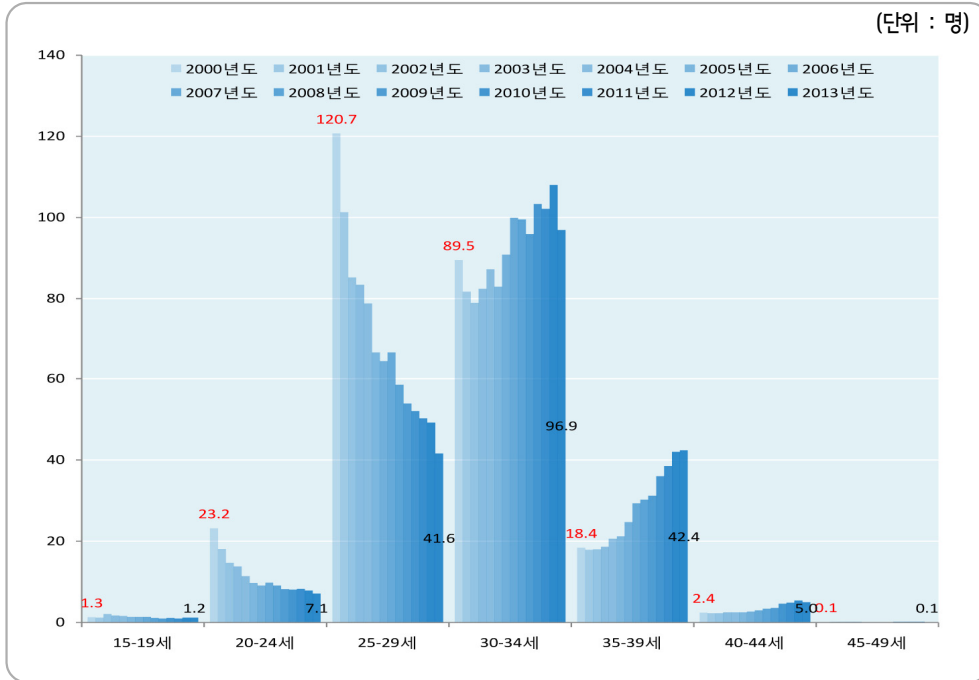
【표 II-4】 서울시 주 출산연령층 출산율 변동추이 및 비중 (1993~2013)

(단위 : 명, %)

구분		1993	1998	2003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24세	출산율	54.20	29.70	13.80	9.10	8.20	8.10	8.30	7.90	7.10
	비중	18	12	7	5	4	4	4	4	4
25-29세	출산율	168.40	128.60	83.40	58.50	53.90	52.00	50.20	49.20	41.60
	비중	55	51	42	30	28	26	25	24	22
30-34세	출산율	70.00	76.60	82.40	99.50	95.90	103.30	102.10	108.00	96.90
	비중	23	31	42	50	51	52	51	52	52
35-39세	출산율	14.00	15.70	18.60	30.20	31.20	36.00	38.50	42.00	42.40
	비중	5	6	9	15	16	18	19	20	23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DB웹서비스

[표 II-4]에 의하면 서울시 연령별(5세 단위) 출산율 변동추이는 1993년부터 2013년까지 감소하는 연령대가 있는 반면 증가하는 연령대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다음의 [그림 II-1]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서울시 25-29세 여성의 출산율 감소 기울기는 다른 연령대보다 더욱 가파르다. 쉽게 말해 2000년대 초반 서울시 주 출산연령대였던 20대 여성의 출산율 감소폭은 2000년대 중반 주 출산연령대 30대 여성의 출산율 증가폭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서울시의 전체의 합계출산율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자료 : 통계청, 「국내이동통계」, DB웹서비스

【그림 II -2】 서울시 연령별 출산율 변화 (2000~2013)

## 2.2 서울시의 높은 주택가격과 인구이동

서울시 가임여성인구수는 [표 II -5]을 통해 보이는 바와 같이 1995년 약 320만여 명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 서울시 가임여성 인구수는 45만여 명이 감소한 280만여 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서울시의 가장 큰 출산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25~29세 여성의 수는 1995년 55만여 명으로 가임기 여성 중 가장 많은 인구수를 보였으나 2013년 약 10만여 명이 감소한 44만여 명이였다. 이는 20-24세 가임기 여성의 감소폭 다음으로 높은 수치였다. 또한 2013년 가장 큰 출산비중을 보인 30~34세의 여성의 수는 비록 1995년 대비 7천여 명이 감소하였으나 가장 적은 감소 수를 보였으며 2013년 주 출산연령대 중 가장 많은 인구수(46만여 명)를 보였다.

【표 II -5】 서울시 가임여성 인구 수 추이변동 (1995~2013)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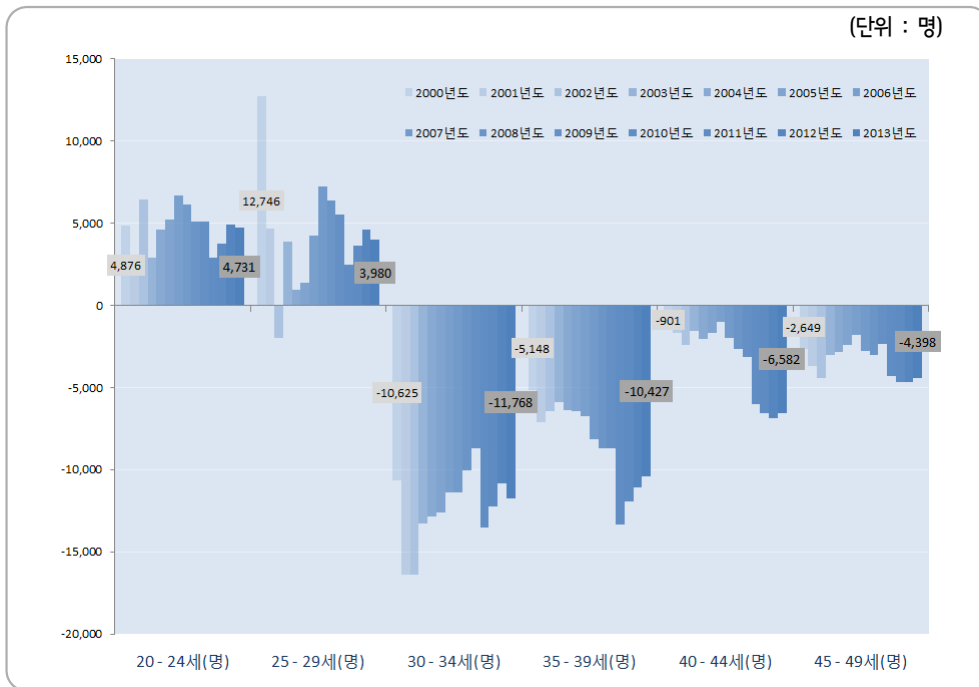
구 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총 합
1995(A)	436,253	582,311	543,392	470,565	472,357	383,620	319,886	3,208,384
2000	392,912	480,957	548,535	449,538	426,495	448,574	352,814	3,099,825
2005	299,296	455,698	498,062	477,148	416,955	421,995	432,830	3,001,984
2006	299,922	424,755	508,704	467,648	432,674	412,723	441,146	2,987,572
2007	305,670	395,547	515,829	455,762	443,707	406,945	443,440	2,966,900
2008	309,739	378,058	515,837	445,520	450,206	407,373	444,952	2,951,685
2009	312,779	370,393	505,421	444,461	448,124	410,920	440,486	2,932,584
2010	310,022	365,253	483,681	444,523	435,714	415,968	430,837	2,885,998
2011	300,998	364,209	468,436	454,260	421,387	424,144	420,395	2,853,829
2012	291,054	360,333	450,252	461,256	405,581	428,138	408,017	2,804,631
2013(B)	281,173	355,832	437,359	463,500	392,988	427,117	400,060	2,758,029
(B)-(A)	-155,080	-226,479	-106,033	-7,065	-79,369	43,497	80,174	-450,355

자료 : 통계청, 「추계인구조사」, DB웹서비스

위와 같이 서울시 여성 인구수가 감소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판단된다. 첫째는 과거로부터 출생아수가 감소하여 발생하는 자연감소이며 둘째는 여성의 개별특성과 서울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다.

후자의 경우 주택가격과 양육비, 교육비 등을 포함한 서울시의 높은 물가에 기인한 이동일 수 있으며, 대학교 진학 등의 이유로 20대 초반 서울시로 전입하였으나 학업을 마치고 다시 원래의 거주지로 진출한 경우일 수 있다. 또한 서울시에 거주하였으나 취업 등의 이유로 이동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sup>9)</sup>

9) 서울시 여성의 인구유입 목적에 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로 정확히 그 수에 대한 통계자료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갖는 특성(가령, 우수한 대학교와 많은 일자리)으로 인해 유입인구가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 바이다.



자료 : 통계청, 「국내이동통계」, DB웹서비스

그림 II-3 | 서울시 가임여성 연도별 순 인구이동 (2000~2013)

서울시 평균 초혼연령, 출산연령, 출산비중을 통해 서울시 출산율에 있어서 30-39세 여성이 주 출산연령대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순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동일 연령대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서울을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울시 환경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서울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갖는 가장 큰 환경적인 문제는 주택가격이다.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을 포함한 모든 주택가격은 타 지역을 압도하는 수준이며 매매, 전세를 막론하고 주택마련이 가장 어려운 지역임은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표 II-6]은 서울시 주택구매력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를 나타낸다. 서울시의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을 모두 고려한 종합지수는 2008년 58.3이었으나 주택구매의 어려움이 점차 감소하여 2014년 98.0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구매력 종합지수 169.9를 보인 전국에 비해 두 배 가량 주택마련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 -6】 서울시 주택구매력 지수(HAI) (2008~2014)

구분 연도	전 국				서 울			
	종합	아파트	단독	연립	종합	아파트	단독	연립
2008	112.5	108.1	103.2	183.6	58.3	50.8	48.2	115.9
2009	122.4	117.3	113.2	201.3	62.2	53.8	51.7	126.0
2010	143.2	138.0	130.3	236.1	73.9	64.9	59.5	148.8
2011	139.2	133.6	129.4	238.4	74.2	66.2	59.5	151.1
2012	159.0	155.0	141.3	267.8	86.7	79.2	66.1	170.6
2013	168.3	161.2	152.5	276.7	95.7	85.9	69.9	179.9
2014	169.9	161.7	155.5	285.9	98.0	87.3	72.2	187.7

주 : 1) HAI(Housing Affordability Index) = (중위가구소득/대출상환가능소득)×100

2) 주택구매력지수란 중간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정도의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의 소득으로 대출원리금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3) HAI가 100보다 클수록 중간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중간가격 정도의 주택을 큰 무리없이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HAI가 상승하면 주택구매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 KB부동산, 「KB주택가격동향」, 연도별 시계열자료

서울시 소득대비 주택가격은 2008년 12월 11.9였으나 2014년 12월 9.2로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전국에 비해 여전히 약 두 배 가량 높았으며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주택가격은 주택마련의 어려움을 넘어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과거 대가족중심의 가족구성은 부부중심 분가로 인한 핵가족화가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가족구성의 변화는 높은 주거비용 문제에 직면한다. 비용-편익의 관점에서 높은 주택비용은 잠재적 출산비용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서울시 혼인가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적으로 주택비용이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이동하여 하거나, 근무지 등의 이유로 서울에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경제기반 안정을 -주택구매와 같은- 위해 출산을 다소 늦출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 출산을 포기할 확률도 배

제할 수 없다.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보이는 서울시는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주택비용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표 II-7 서울시 가구소득대비 주택가격 지수(PIR) (2008~2014)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국	5.2	5.0	4.9	5.2	4.9	4.9	5.0
서울	11.9	11.7	11.0	10.5	9.5	9.0	9.2

주 : 1) PIR(Price to Income Ratio) = 주택가격/가구소득

2) 가구소득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분위별 평균 소득이며, 월평균 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함  
 자료 : KB부동산, 「KB주택가격동향」, 2015

서울시 주택구매력지수와 서울시 30-44세 여성의 순 인구이동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상관계수는 -0.215(p-value 0.07)로 나타나 높은 주택가격이 인구유출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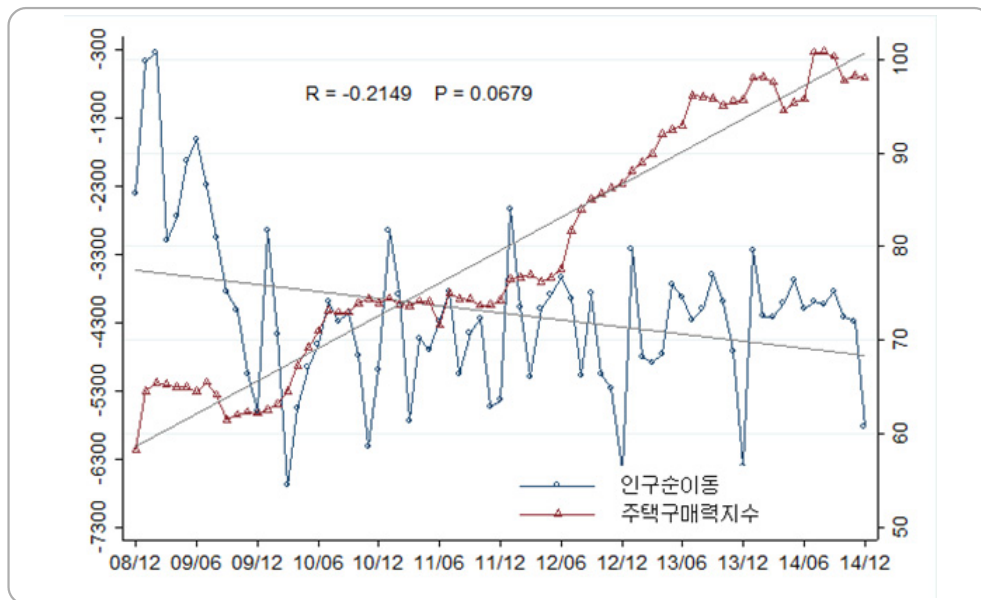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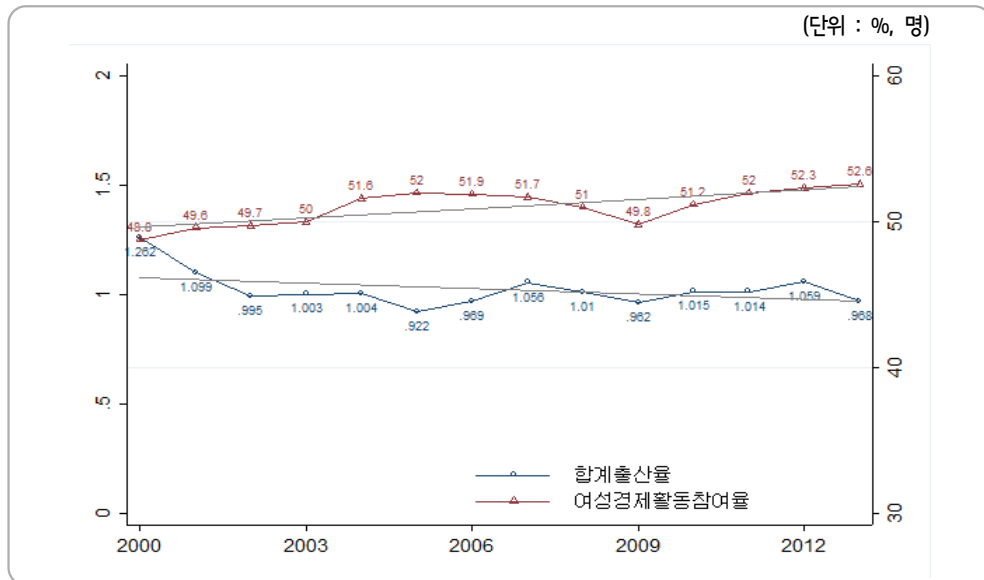


그림 II-4 서울시 30-44세 순 인구이동 수와 주택구매력 상관관계

### 2.3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은 이와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가장 낮았던 2005년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2.0%로 가장 높았다. 이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동과 유사한 형태로 합계출산율은 상반된 경향을 보였는데 이를 토대로 여성경제활동과 출산율간의 관계를 짐작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황진영(2013)은 74개 국가를 대상으로 1980~2005년까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할수록 합계출산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고용의 양)을 통한 출산율 접근보다 왜 여성의 경제활동은 출산에 악영향을 주는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고용의 양과 동시에 고용의 질이 여성의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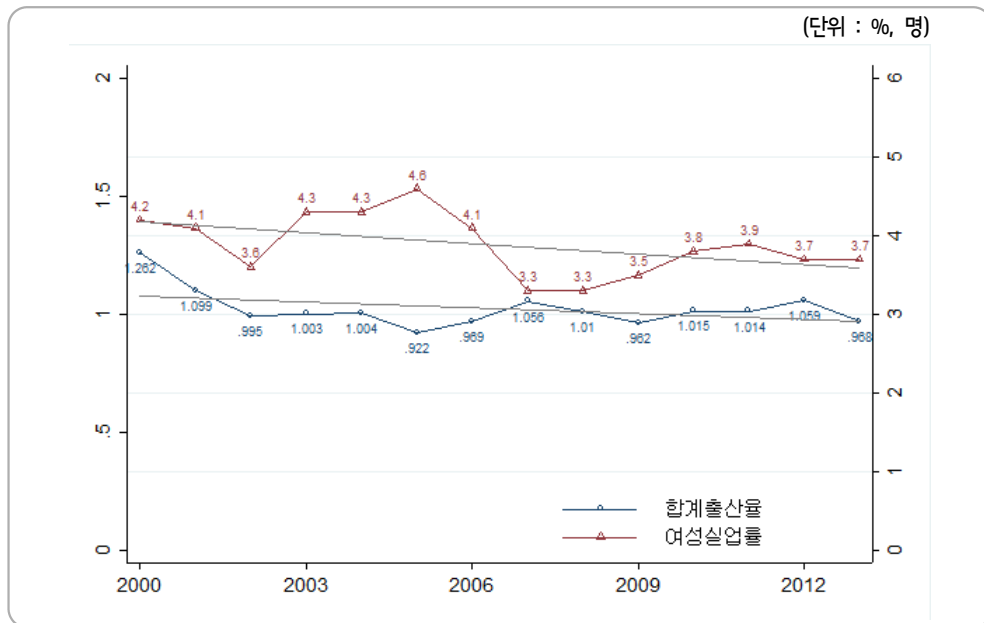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DB웹서비

그림 II-5 | 서울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및 합계출산율 (2000~2013)



서울시 여성의 실업률과 합계출산율은 매우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3%대의 실업률이 실제 서울시 전체의 합계출산율을 변동시켰을지는 다소 의문이며 우리나라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조명덕(2010)의 연구에서 출산율 결정요인을 추정 한 결과, 실업률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출산율과 실업률은 통계적 관계가 없음을 증명하였다.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DB웹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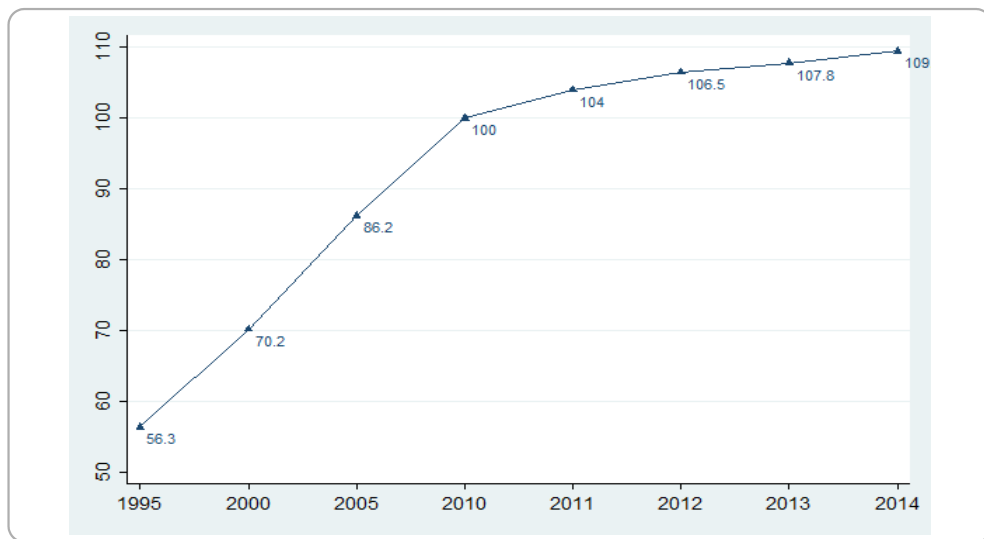
■ 그림 II-6 ■ 서울시 여성실업률 및 합계출산율 (2000~2013)

## 2.4 서울시의 높은 물가와 교육비부담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지역적 범위를 서울시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가진 경제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0년 물가기준 서울시 전·월세를 포함한 생활물가지수<sup>10)</sup>는 2014년 109.5를 나타냈으나 10년 전

10) 소비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481개 품목을 약 26,000개 소매점 포 및 서비스업체와 약 10,500개 가구를 대상으로 가격 조사하여 산출함. 2010년도 물가를 기준으로

56.3에 비해 약 2배 가까운 생활물가지수의 상승을 보였다.<sup>11)</sup> 이러한 물가상승은 전반적인 서울시 생활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며 비용의 상승만큼 소득의 상승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만큼 소득의 상승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생활의 질은 당연히 낮아지게 될 것이고 혼인, 출산보다 자신의 생활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개인은 혼인,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 보았듯이 서울시를 이탈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주 : 기준시점(2010=100)을 이용하여 산출된 지수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DB웹서비스

■ 그림 II-7 ■ 서울시 전·월세포함 생활물가지수 (1995~2014)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20~49세 서울시 여성의 월평균임금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II-7]과 같았다. 서울시 20~49세 미혼과 기혼여성의 월평균임금은 2008년 이후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4세, 25~29세, 30~34세 미혼여성의 월평균임금은 2008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상승하는 물가와

로 해당년도 물가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임.

11) 지역별로 물가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는 통계청을 포함한 다른 기관에서도 획득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서울시 시계열자료만 제시함.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혼인과 출산을 결정함에 있어서 개인 또는 가구의 경제적인 요인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낮은 임금과 높은 생활비로 인해 혼인, 출산을 늦춘다는 관점이 일반적<sup>12)</sup>이나 기존의 몇몇 연구에서 이를 부정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특히 Heckman and Walker(1990a,b, 1991)의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의 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성의 임금이 높아질수록 임신시기가 늦춰지는 것을 보였다. 하지만 남성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임신시기가 빨라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II -8】 서울시 여성의 혼인상태별 월평균소득 (2008~2013)

(단위 : 만원)

연령	혼인여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20~49세)	미혼	172.1	171.2	171.0	169.8	171.5	179.1
	기혼	179.2	177.7	185.6	187.8	192.8	200.7
20~24세	미혼	129.3	126.9	121.6	125.9	118.5	123.9
	기혼	137.5	161.9	89.2	112.2	131.7	139.3
25~29세	미혼	182.2	173.7	177.5	171.8	174.3	180.2
	기혼	193.5	193.4	190.9	206.8	210.7	209.5
30~34세	미혼	200.2	204.1	196.6	189.6	192.6	197.8
	기혼	214.9	208.0	219.1	213.7	226.3	232.7
35~39세	미혼	194.6	198.2	198.0	199.4	210.7	222.3
	기혼	186.1	192.9	194.4	206.5	209.3	221.4
40~44세	미혼	192.4	202.1	201.1	219.2	233.5	229.8
	기혼	164.9	167.7	171.1	177.4	183.2	192.4
45~49세	미혼	173.8	206.1	211.6	226.5	198.3	246.8
	기혼	163.4	153.0	170.8	163.8	168.8	174.6

주 : 1) 기준시점(2010=100)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이용하여 실질화 한 수치임

2) 취업시간 1시간 이상인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20~49세 서울시 여성을 대상으로 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DB웹서비스

12) Blau et al. (2000)은 미국의 전수조사(1970, 1980, 1990년)를 이용하여 노동시장 여건과 결혼율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노동시장의 여건이 좋아질수록 결혼율을 높이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이 삼석외(2005)「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을 꼽았다.

이성립(2005)의 연구에서는 OECD 교육통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교육지출(사교육 부담률 3.4%)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으며 이로 인한 가계의 비용부담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가 더 높은 관심과 비용을 쏟고 있다는 것은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자료<sup>13)</sup>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물가, 타 지역대비 높은 주거비용과 더불어 가구 경제적인 압박을 주는 요인이다. 2007년 서울시 월평균 사교육비는 28.4만원이었으나 점차 상승하여 2014년 33.5만원을 기록하였다.

가구의 경제적인 기반이 불안정하다면 미래 기대비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출산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돌 볼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사교육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공교육의 의존도가 낮아지고 사교육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실에서 사교육비의 증가는 출산 후 양육, 교육에 대한 기대비용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추가적인 출산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 표 II-9 】 서울시 월평균 사교육비 (2007~2014)

(단위 : 만원)

구 분	서울시	6대 광역시
2007	28.4	22.0
2008	29.6	22.8
2009	33.1	22.5
2010	32.1	22.7
2011	32.8	22.3
2012	31.2	23.0
2013	32.8	23.3
2014	33.5	23.1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5

13) 사교육비는 통계청의 사회조사와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하여 각각 추출하였다. 조사대상의 상이함으로 인해 한국노동패널의 조사가 통계청 사회조사보다 평균 4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대 광역시와 비교를 위해 자료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로 비교하며 서울시에 관한 시계열변화는 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 2차, 4~15차에 조사된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의 월평균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공교육지출은 36만원, 사교육지출은 48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교육비의 경우 1999년 대비 약 15만원 증가한 반면 사교육비의 경우 약 30만원이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수치는 앞서 조사하였던 서울시 기혼여성의 월평균 소득에서 총 교육비로 절반 이상을 지출하도록 만들었다.<sup>14)</sup> 물론 교육비의 지출은 대부분 가구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나 높은 교육비는 출산의 1차 당사자인 여성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출산을 앞둔 여성 역시 미래 지출에 대한 부담은 동일하다.

【표 II-10】 서울시 월평균 공교육비, 사교육비 및 임금대비 총 교육비 (2007~2012)  
(단위 : 만원, %)

연 도	공교육비(A)	사교육비(B)	총 교육비(C = A+B)	기혼여성 임금 대비 총 교육비
전 체	36.22	48.51	84.73	-
1999	26.82	27.19	54.01	-
2001	30.86	34.15	65.01	-
2002	32.67	41.27	73.94	-
2003	36.57	49.13	85.70	-
2004	38.83	46.22	85.05	-
2005	31.38	47.58	78.96	-
2006	34.13	52.12	86.25	-
2007	39.07	56.62	95.69	-
2008	37.77	52.41	90.18	50.32%
2009	41.10	51.34	92.44	52.02%
2010	38.00	56.76	94.76	51.06%
2011	42.97	58.89	101.86	54.24%
2012	41.38	58.53	99.92	51.82%

주 : 1) 한국노동패널 3차(2000년)에는 조사되지 않음  
 2) 기혼여성의 임금의 경우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함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한국노동패널, 2차, 4~15차

14) 공교육과 사교육을 동시에 받지 않는 경우 월평균소득에서 총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더욱 낮아질 것이다. 하지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공교육만 받는 가구, 사교육만 받는 가구를 통계청의 자료와 결합하여 비율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에 소득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본 자료를 본문에 탑재하였다.

2010년 서울시의 30세 이상 가구주 중 81.1%가 교육비에 대해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후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4년 여전히 68.9%의 가구주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2012)에 따르면 출생아수 감소에 대해 ‘자녀양육비와 교육비용의 상승’이라고 응답한 기혼여성(20~44세)은 97.5%<sup>15)</sup>를 보였으며 ‘경기불황과 실업률의 증가’(93.4%)가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을 차지했다.

【 표 II -11 】 서울시 30세 이상 가구주 교육비 부담 인식 (2000,2004,2008,2012,2014)

구 분	부담스러움	보통	부담스럽지 않음
2000	38.0	8.7	3.5
2004	77.2	16.6	6.2
2008	80.3	14.2	5.4
2010	81.1	13.1	5.9
2012	76.4	20.8	2.8
2014	68.9	25.7	5.5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한편, 서울시의 월평균 생활비는 6개 광역시 165만원보다 약 10만원 높은 17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식비는 월평균 생활비의 28%에 해당하는 월평균 48만원이었다. 그 밖에 대중교통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문화비에서 6개 광역시에 비해 높은 비용을 보였으며 6개 광역시 대비 서울시 생활비 중 대중교통비가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15) ‘다소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의 합계임



표 II-12 서울시 및 6개 광역시 월평균 생활비

(단위 : 만원, %)

구분	서울시(A)	6개 광역시(B)	비율(A/B)
월평균 생활비	176.26	165.52	106%
식비	48.58	43.02	113%
대중교통비	7.06	5.53	128%
차량유지비	26.43	26.94	98%
주거비	18.32	15.49	118%
보건의료비	7.23	6.10	119%
생필품 구입비	5.12	5.37	95%
문화비	6.61	5.74	115%

주 : 서울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비용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차, 4~15차

### 2.5 일·가족양립의 어려움

김현숙 외(2006)의 연구에 따르면 유럽, 한국, 일본의 공통적인 저출산 원인으로 는 자녀양육비용 부담, 고용 및 소득의 불안정과 같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결혼 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와 스웨덴 같은 상대 적 고출산 국가의 출산정책 성공요인은 성 평등에 기초한 사회를 만드는데 성공했 기 때문이며 독일과 스페인은 가부장적 사회구조로 인해 여성들이 일·가족의 조화 를 이루지 못한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가 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장지연(2005)의 연 구에 의하면 일본은 비정규직의 확대로 젊은 층의 만혼화, 미혼화 현상이 뚜렷해짐 에 따라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으며 가정 내 가사 및 육아분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출산율 저하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성들의 일·가족의 양립 곤란이 저출산의 사회적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 여성 역시 위에서 언급된 높은 근무시간, 가부장적 사회구조에서 파생되 는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가족 내 성별분업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가사 일에 대해 부인이 주로 분담한다는 남편의 응답은 2002년 70.9%<sup>16)</sup>에서 2012년 55.5%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반이상의 남편은 가사일을 부인의 몫으

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부인의 인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부인의 60.4%가 가사일은 부인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2012년 13.9%p 감소한 46.5%를 보였으나 여전히 높았다. 여성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여성의 높은 가사부담은 일·가족 양자택일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더불어 일·가족양립이 가능한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여성의 출산과 노동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표 II-13】 서울시 남편·부인의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 (2002,2006,2008,2010,2012)

(단위 : %)

기 간	구 분	부인이 주로 분담	공평하게 분담	남편이 주로 분담
2002	남 편	70.9	25.7	3.4
	부 인	60.4	37.3	2.3
2006	남 편	68.9	28.4	2.7
	부 인	55.0	42.9	2.2
2008	남 편	69.1	30.0	1.0
	부 인	58.0	41.0	1.0
2010	남 편	66.4	32.0	1.6
	부 인	57.1	41.6	1.3
2012	남 편	55.5	41.6	2.9
	부 인	46.5	50.6	2.8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16) 부인이 주로 분담은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 '부인이 주로 남편도 분담'에 대한 응답이며 남편이 주로 분담은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남편이 주로 분담'에 대한 응답을 나타냄



# III

## 출산율 감소원인 기여도 분석

1. 서울시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2. 서울시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결과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III

## 출산율 감소원인 기여도 분석

III장에서는 앞서 II장에서 다루었던 서울시 합계출산율의 변화요인을 분석한다. 이미 저출산의 원인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혼인하지 않는 문제와 출산하지 않는 문제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각 원인들이 합계출산율 변화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주는지 객관적 자료는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서울시 여성의 거시적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가임기 여성의 혼인감소, 출생아 수의 감소가 서울시 합계출산율 변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객관적 수치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 합계출산율 하락에 있어서 비혼과 기혼여성이 출산하지 않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후자가 더 큰 기여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기혼여성의 출산결정 요인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였다.

### 1. 서울시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 1.1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방법

합계출산율은 가임기(15~49세)에 있는 각 세(age) 여성 1인당 출생아 수를 가임기 연령 전체에 대해 합산하여 계산되는데, 각 세 여성 1인당 출생아 수는 기혼여성 출생아 수와 미혼여성 출생아 수의 가중 평균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연도(t)의 합계출산율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이철휘, 2012).

$$TFR_t = \sum_{a=15}^{49} \left[ \left( \frac{M_t^a}{P_t^a} \right) \left( \frac{B_{Mt}^a}{M_t^a} \right) + \left( 1 - \frac{M_t^a}{P_t^a} \right) \left( \frac{B_{N,t}^a}{P_t^a - M_t^a} \right) \right] \dots \text{식(1)}$$

$$= \sum_{a=15}^{49} \left( m_t^a f_{m,t}^a + (1 - m_t^a) f_{n,t}^a \right)$$

위의 각 부호와 첨자는 t: 연도, a: 연령, TFR: 합계출산율, P:여성인구, M: 기혼여성인구, BM: 기혼여성 출생아 수, m: 기혼여성인구 비율, fm: 기혼여성 출산율, fn: 미혼여성 출산율을 나타낸다.

식(1)은 합계출산율의 변화가 각 연령의 기혼여성인구 비율(m), 각 연령 기혼여성 출산율(fm), 각 연령 미혼여성 출산율(fn)의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장 단순한 출발점은 이 각각의 요인들이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분해하여서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합계출산율 변화의 분해는 특정한 요인(가령, 가임연령 기혼여성인구 비율 등)이 기준 시점으로부터 변화하지 않았을 경우의 합계출산율 변화와 실제 합계출산율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산출될 수 있다. 쉬운 설명을 위해 기준 시점을 t=0으로 하고 비교 시점을 t=T라고 하였을 때, 비교 시점 T기의 실제 합계출산율은 다음의 식(2)와 같이 계산된다.

$$TFR_T = \sum_{a=15}^{49} \left( m_T^a f_{m,t}^a + (1 - m_T^a) f_{n,t}^a \right) \dots \text{식(2)}$$

기준 시점(t=0)의 기혼여성인구 비율( $m_0^a$ )이 T기까지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었을 경우의 가상적인 합계출산율은 다음의 식(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FR_T(m) = \sum_{a=15}^{49} \left( m_0^a f_{m,t}^a + (1 - m_0^a) f_{n,t}^a \right) \dots \text{식(3)}$$

기혼여성인구 비율의 변화가 합계출산율 변화에 기여한 몫은 다음의 식(4)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

$$\Delta TFR(m) = TFR_T - TFR_T(m) \dots\dots\dots \text{식(4)}$$

여성인구 비율의 변화가 합계출산율 변화의 몇 퍼센트를 설명하는지는 아래의 식(5)와 같은 수식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frac{\Delta TFR(m_0)}{\Delta TFR} = \frac{TFR_T - TFR_T(m_0)}{TFR_T - TFR_0} \times 100 \dots\dots\dots \text{식(5)}$$

이와 같은 합계출산율 분해는 가임기 여성의 혼인 비율뿐만 아니라 5세 단위별 혼인여성인구 비율 변화에 대해서 동일한 과정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식(3)의 위첨자 a를 15~19세, ..., 45~49세까지 구분하여 계산하며 식(4), 식(5)에 대해서도 특정 연령에 부합하도록 동일한 과정으로 수행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서울시 기혼여성의 출산율 변화가 합계출산율 변화에 기여한 정도를 분석한다.

다시 말해 서울시 혼인여성의 수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식(3)에서 기혼여성의 비율을 나타내는  $m_0^a$ 가 기준시점에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계산을 수행한다. 1997년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혼인한 여성의 수가 1997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을 때의 TFR을 산출할 수 있다. 이러한 TFR은 식(3)에 의해서 발현되고 식(2)를 통해서 계산된 TFR은 매년 변화하는 혼인한 여성의 수를 반영한 TFR이 계산되며 이 두 개의 값을 식(4)를 통해 변화 정도를 관측한 후 최종적으로 식(5)를 통해 그 기여도를 산출하게 된다. 고정하는 변수를 달리함으로써 혼인한 여성의 수뿐만 아니라 출생아의 수 역시 동일한 산식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 1.2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자료

합계출산율 변화요인을 분해하기 위해 두 개의 자료를 결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필요한 자료는 서울시 15~49세 여성의 총인구 수, 기혼여성 인구 수, 기혼여성 출생아 수, 무배우 여성의 출생아 수 총 4개의 인구통태 자료가 요구되어진다. 서울시 15~49세 여성의 총 인구 수는 통계청 KOSIS의 인구추계를 통해 매년 제공되나 15~49세까지 5세 단위별 기혼여성인구 수와 기혼여성 출생아 수는 5년 단위의 인구총조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무배우 여성 출생아수는 인구총조사에서도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이에 통계진흥원의 인구동향 원자료(MDSS)를 가공하여 각 연도별 서울시 기혼여성 출생아 수, 무배우 여성 출생아수를 추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도별·연령별 서울시 기혼여성 인구의 수는 5년 단위의 인구총조사를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인구총조사 연도가 아닌 연도의 모수는 선형보간(linear interpolation)기법<sup>17)</sup>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다만 선형보간을 하기 위해서는 최종 지점의 자료가 주어져야지만 실행할 수 있다는 한계점으로 인해 1997년부터 최종 인구총조사가 이루어진 2010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한다.

서울시 15~49세 여성 중 혼인한 여성의 수는 45~4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1997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연령별 혼인여성의 비율은 모두 감소하였다. 특히 2000년 서울시 25~29세 여성 100명 중 절반 가까이 혼인하였으나 급격한 혼인감소를 보이며 2010년 불과 18명만 혼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34세 여성의 경우 역시 2000년 78%의 혼인비율을 보였으나 2010년 24%p가 감소한 54%를 보이며 서울시 여성의 만혼, 미혼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7) 선형보간법(linear interpolation)은 두 개의 점 사이의 데이터를 추정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으로 두 점 사이의 관계가 선형(linear)이라는 가정하에 추정한다. 또한 데이터의 오차를 크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표 Ⅲ-1 서울시 연령별 혼인여성 비율(1997~2010)

(단위 : 명)

연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1997	0.01	0.10	0.52	0.86	0.88	0.90	0.91
1998	0.01	0.09	0.49	0.85	0.86	0.89	0.92
1999	0.01	0.08	0.47	0.82	0.86	0.87	0.91
2000	0.01	0.06	0.45	0.78	0.86	0.87	0.87
2001	0.00	0.06	0.43	0.73	0.86	0.85	0.85
2002	0.00	0.05	0.41	0.70	0.86	0.83	0.85
2003	0.00	0.04	0.37	0.68	0.86	0.82	0.84
2004	0.00	0.04	0.33	0.66	0.83	0.82	0.83
2005	0.00	0.03	0.28	0.66	0.80	0.83	0.83
2006	0.00	0.03	0.25	0.64	0.76	0.84	0.80
2007	0.00	0.03	0.23	0.63	0.74	0.84	0.78
2008	0.00	0.03	0.21	0.61	0.72	0.82	0.77
2009	0.00	0.02	0.20	0.58	0.71	0.80	0.76
2010	0.00	0.02	0.18	0.54	0.72	0.78	0.77

주 : 2000, 2005, 2010년을 제외한 각 연도는 선형보간법에 의해 추정된 수치임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장래인구추계」, 「인구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 2. 서울시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결과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1997년 1.32명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2005년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 0.92명을 기록하였다.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2014년 0.98명으로 다소 고착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서울시 합계출산율 변화요인을 분해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하락기인 1997~2005년, 고착화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 2005~2010년의 기간을 나누어 분석하며 서울시 혼인여성의 비율, 혼인여성의 출산율, 여성의 총 인구가 각각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또한 추가적으로 1997년과 2005년, 2005년과 2010년 그리고 1997년과 2010년 비교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 $\Delta$ TFR기여’는 각 요인의 변화가 초래한 합계출산율 변화분을 의미

하며 앞의 식(4)에 의해서 산출된다. 이 지표가 양수라는 것은 해당요인의 변화가 합계출산율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여도(%)'는 각 요인이 해당 기간 동안 합계출산율 변화의 몇 퍼센트를 설명하는지 보여주며 합계출산율이 감소하는 기간에 이 지표가 음의 값을 나타낸다면 해당요인이 합계출산율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음을 의미한다.

## 2.1 1997-2005년, 1997-2010년 분해결과

서울시 합계출산율 변화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총 3개의 기간(1997-2005, 2005-2010, 1997-2010)을 분석한다. 아래의 [표 III-1]은 3개 기간을 각각 분석하여 최종결과만 제시한 것이며 1997-2005년의 경우 1997년의 (기혼여성 수/가임기여성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고, 2005-2010년은 2005년의 (기혼여성 수/가임기여성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예를 들어 1997-2005년의 경우,  $\Delta TFR$ 기여가 -0.00872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7년의 (기혼여성 수/가임기여성 수)가 2005년까지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었다면 합계출산율이 0.009가 상승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기여도%는 1997-2005년까지 합계출산율이 감소하였는데 이 중 (기혼여성 수/가임기여성 수)가 약 24%정도 감소에 기여했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출생아 수/기혼여성 수)를 해석해보자면 1997년의 기혼여성의 출산율이 2005년까지 변화되지 않고 유지되었다면 합계출산율은 0.01정도 상승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합계출산율 하락기동안 기혼여성이 출산하지 않는 문제는 약 67%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합계출산율 하락기와 고착기를 동시에 고려한 1997-2010년의 결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기여도(%)에 있어서 기혼여성의 비율이 64%의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출산율은 29%의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1997년 기혼여성의 출산율이 2010년까지 유지되었다면 합계출산율은 0.0037만큼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기혼여성의 비율이 유지되었다면 0.0031만큼 상승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봤을 때 서울시 합계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혼여성의 출산율로 보이며 본 연구의 목적인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 표 Ⅲ-2 】 서울시 합계출산율 감소원인에 대한 기여도 분석

(단위 : %)

구 분	1997-2005 (합계출산율 감소기)		2005-2010 (합계출산율 고착기)		1997-2010 (전체기간)	
	△TFR 기여	기여도(%)	△TFR 기여	기여도(%)	△TFR 기여	기여도(%)
기혼여성 비율	-0.00372	24.20	-0.00370	-143.97	-0.00319	64.01
기혼여성 출산율	-0.01032	67.17	0.00547	212.60	-0.00376	29.35





# IV

## 서울시 출산·비출산여성 및 가구 특성과 출산결정요인 분석

1. 분석방법
2. 서울시 출산·비출산 여성 및 가구특성 현황
3.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 분석 : 미시적 요인을 중심으로
4. 소결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IV 서울시 출산·비(非)출산여성 및 가구 특성과 출산결정요인 분석

앞서 서울시 합계출산율과 서울시 여성의 거시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출산율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노동패널 2~15차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 여성이 직면한 경제적 상황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특히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은 출산의 1차 당사자인 여성뿐만 아니라 가구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남편, 부모님 경제적 여건 등 가구특성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환경적인 특성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문제를 파악한다.

## 1. 분석방법

### 1.1 서울시 출산 및 비출산여성의 현황분석방법

서울시 여성과 가구특성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혼인하여 출산한 여성과 가구, 혼인하였으나 아직 출산하지 않은 여성과 가구를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시점을 각각 제시하였다.

- 1) t시점(출산시점) 서울에 거주한 여성과 가구
- 2) t시점과 임신기간을 포함한 출산 전년도(t-1시점)에 서울에 거주한 여성과 가구
- 3) t시점과 t-1시점 그리고 임신의사결정을 하였을 것이라 판단되는 임신기간 전년도(t-2시점)에 서울시 거주한 여성과 가구

임신에 대한 의사결정시점과 출산시점 사이에는 임신기간이라는 시차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출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은 출산 이전 시점의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서울시라는 지역적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어디까지를 ‘서울시 여성’으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패널자료의 특성상 일반 통계자료와 다르게 조사대상을 추적조사 하므로 타 지역에 거주하다가 서울로 들어온 여성, 서울에 거주하였으나 타 지역으로 이동한 여성이 혼재되어 있다.<sup>18)</sup>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의 출산시점을 기준으로 출산시점, 출산 1년 전, 출산 2년 전 서울시에 거주한 여성을 ‘서울시 여성’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출산시점과 의사결정시점간에 시차가 존재하므로 세 개의 시점에 대한 서울시 여성·가구특성 현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함께 분석한다.

## 1.2 서울시 여성의 출산결정요인 변수 및 추정방법

서울시 여성의 출산결정요인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노동패널 2~15차 가구자료의 가구번호(hhid)를 활용하여 개인자료를 각 가구에 맞추어 결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분석자료를 구축하였다.

- 1) 한국노동패널의 2~15차까지의 가구자료와 개인자료를 결합 후 서울시 가구만 추출
- 2) 추출된 서울시 가구 중 혼인하지 않은 가구, 여성은 제외
- 3) 출산여성·가구를 구분하여 출산 시 1의 값을 부여
- 4) 각 설명변수에는 시차(lag) -1, -2를 주어 출산 1년 전, 출산 2년 전을 고려

18) 예를 들어 노동패널 2차 조사에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5차 조사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출산한 여성은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서울시 여성’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대로 2차 조사에서 타 지역에 거주하였으나 5차 조사에서 서울시로 이동하여 출산한 경우 ‘서울시 여성’으로 정의한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위의 3가지 시점에서 1)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4차 조사에서 서울시로 이동하고 5차 조사에서 출산한 경우 2)에 해당한다. 또한 3차 조사, 4차 조사에서 모두 서울시에 거주하고 5차 조사에서 출산한 경우 3)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시점고려는 서울시 거주기간도 동시에 고려하는 이점을 지닌다.

한국노동패널의 소득, 부채와 같은 금전적인 질문은 15차에 응답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득은 전년도 즉, 14차에 해당하는 연도의 금액이다. 이에 설명변수에 -2의 시차를 고려할 때 소득과 부채 자료는 -1의 시차만 부여하였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 부양비(9차 이후)와 같이 조사시점이 매우 짧고 결측값이 많아 추정하기 불가능한 변수들은 배제하되 여성, 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변수를 최대한 고려하였다.<sup>19)</sup>

고려한 변수의 다음의 표와 같으며 여성의 개별특성을 우선적으로 선별, 배우자(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기위해 모형에 포함하였다. 특히 월평균소득과 더불어 일·가족양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남성 대비, 가구 대비로 나누었다.<sup>20)</sup>

근무상 지위를 보기위해서는 한국노동패널에서 제공하는 형태를 재가공해야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는 근무상 지위는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에게만 관찰되는 특성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혼인가구의 출산여성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이 다수 관찰되어 근무상 지위만 고려하게 될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만 고려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한국노동패널에서 제공되는 근무상 지위, 경제활동 여부의 항목을 결합하여 상용직, 임시직과 일용직, 자영업을 포함한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하였으며, 추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을 따로 구분하여 더미(dummy)로 처리하였다.

19) 각 변수가의 조사시점이 맞지 않을 경우 매우 많은 수의 관측치를 포기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현황에서 살펴보았던 부모님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부모님 부양비(이상 9차부터 조사)와 같이 가구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를 고려한다면 2~8차까지의 자료는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한다. 서울시에 초점을 맞춘 패널조사가 아닌 전국자료 패널에서 서울시 혼인여성을 추출하여 사용하는 제약으로 인하여 본 연구는 샘플 수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그러므로 최대한 출산가구 샘플 수를 확보하기 위해 2차부터 조사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분석에 이용하였다.

20) 추가적으로 교차항(interaction term)을 고려하여 경제활동×월평균소득, 경제활동×월평균소득의 변수도 고려하였으나 교차항이 포함된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이 매우 낮아 본 보고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 표 IV-1 】 서울시 여성 출산영향요인 분석 변수설명

구분	변수명	비고
종속변수	출산여부	- 출산=1, 비출산=0
설명변수	나이(코호트별)	- 여성 나이 - 15-29세 / 30-39세 / 40-50세
	교육년수	- 여성의 교육년수
	월평균소득	- 여성의 월평균소득 - 배우자(남성)의 월평균소득 - 여성의 월평균소득 × 교육년수 - 가구 월평균소득(여성 월평균소득+배우자 월평균소득) - 남성월평균소득 대비 여성의 월평균소득
	근무상 지위	- 상용직 / 일용직 및 임시직 /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 비경제활동
	제도적 지원	- 여성 직장의 출산휴가 유무(있으면 1, 아니면 0) - 여성 직장의 육아휴직 유무(있으면 1, 아니면 0)
	근로시간	- 여성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 가구 주당 평균 근로시간 대비 여성 주당 평균 근로시간
	입주형태	- 자가, 전세, 월세
	주관적 경제상태정도	- 5점 척도
	월평균 생활비	-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 가구 월평균 소득 대비 월평균 생활비

일반적으로 월평균소득은 물가상승률이 고려되지 않은 명목임금을 의미하나 2010년의 200만원과 2011년 210만원 중 210만원이 반드시 2010년의 소득보다 높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실질적인 소득을 분석에 이용하기 위하여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 2010=100)로 나누어 실질화 한 후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이처럼 가공된 월평균 소득 자료는 첫째로 서울시 여성의 월평균소득, 두 번째로는 가구전체의 소득에서 여성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자(남성)의 월평균소득 대비 여성의 소득을 사용하였다. 여성이 가구 내에서 차지하는 경제적인 위치, 부담정도를 나타내고자 가구전체, 배우자(남성) 소득 대비 변수를 활용하였다.



위의 변수들을 모형에 각각 고려하여 최초모형(full model)에서 가장 적합한 최적 모형을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를 이용하여 선별하였으며 각 변수는 출산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을 출산 2년 전의 노동환경, 경제적환경을 고려하였다.

조사대상이 되는 개인·가구가 한국노동패널 조사 이전시점에 출산을 한 경우 어느 시점에서 출산을 하였는지 알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로 인해 분석대상은 한국노동패널 조사 진입 이후 출산한 여성이며 첫 번째 출생아의 출산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15세 이하의 경우 가구주와의 관계를 조사하지 않으므로 조부모가 양육을 하는 경우<sup>21)</sup>를 배제하기 위해 여성의 연령은 49세(만나이)로 제한하였다. 반대로 사실혼 관계에서의 출산한 여성·가구는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모형에 포함하지 못한 변수로 인한 편의(bias)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구 변수를 활용하였다. 출산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내생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설계에 반영하였으며 내생적 변수인 출산여부와 상관이 있으면서 모형의 오차항과 상관관계가 없는 도구변수를 주관적 생활만족도를 선별하여 추정하였다.<sup>22)</sup>

이처럼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변수를 가공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 각 요인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출산여부를 나타내는 이항변수(binary variable)를 종속으로 하며(출산 시=1 아니면 0) 횡단면자료(cross-section) 분석에 자주 이용되는 프로빗(probit)모형에 시간의 개념을 도입한 패널프로빗(panel probit)모형을 추정에 사용한다. 본 분석은 일반적인 횡단면자료가 아닌 패널자료이므로 각 개체의 보이지 않는 특성을 추가적으로

21) 한 예로 2008년 출산한 것이 관측된 가구의 경우 가구 구성원은 남성과 여성뿐이었으며 여성의 나이는 60세 이상이었다. 물론 60세 이상의 여성이 출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분가가 구 등의 현황으로 보았을 때 조부모가 양육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조부모 양육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2)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생활만족도를 도구변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생활만족도(소득, 지출 외의 상황 하에서)가 여성의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만일 가구의 생활만족도가 여성의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와 같은 가정은 성립하기 어려우며 설명변수로 활용해야 함이 맞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도구 변수 유효성 여부와 더불어 도구변수 설정의 한계로 남는다. 이에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적절한 변수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고려해야한다.

이항종속변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y_{it}^*$ 는 관찰되지 않는(latent) 실제 종속변수이며  $y_{it}$ 는  $y_{it}^*$ 의 관찰된 값을 의미한다.

$$y_{it} = \begin{cases} 1, & y_{it}^* > 0 \text{인 경우 (출산)} \\ 0, & y_{it}^* < 0 \text{인 경우 (비출산)} \end{cases}$$

패널자료를 일반 횡단면자료와 다르게 아래와 같이 각 개별주체의 보이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 요인을 모형에서 고려하며 패널 이항선택 모형(panel binary choice model)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_{it}^* = x_{it}\beta + c_i + u_{it}$$

여기서  $c_i$ 는 각 개별주체  $i$ 의 보이지 않는 특성(이질성)을 의미하며  $u_{it}$ 는 오차항이다. 따라서  $y_{it} = 1$  일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Pr(y_{it} = 1 | x_{it}, c_i) = \Pr(y_{it}^* > 0) = \Pr(u_{it} > -x_{it}\beta - c_i) = G(x_{it}\beta + c_i)$$

위의 식 우변  $G(\cdot)$ 는 0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확률분포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이다. 이때  $G(\cdot)$ 를 표준정규분포(standard normal)를 가정하면 패널프로빗 모형이며 이를 로지스틱분포(logistic distribution)을 가정하면 패널 로짓(panel logit)모형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프로빗 모형을 이용하며 패널프로빗 모형을 추정하는 방법은 고정효과(fixed effects)와 확률효과(random effects)로 구분하여 추정할 수 있다. 고정효과 추정 시 각 개별여성에게 더미변수를 주거나 1차 차분, within 변환하여 개별특성을 제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각 패널개체가 많고 시계열이

짧은 경우 추정해야 할 모수(parameter)가 많아 자유도(degree of freedom)의 문제가 발생하며 효율적인 추정이 되지 않는다.<sup>23)</sup> 따라서 서울시 여성의 출산결정요인 분석은 전통적인 확률효과 프로빗 모형(traditional random effects probit model)을 활용하여 추정한다.

패널프로빗 추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의 가정을 갖는다. 우선 보이지 않는 개별특성  $c_i$ 와 설명변수  $x_{it}$  서로 독립이며  $x_{it}$ 는 강외생성(strictly exogenous)이다. 또한  $c_i$ 는 평균 0, 분산이  $\sigma_c^2$ 인 정규분포를 따르며  $y_{i1}, \dots, y_{iT}$ 는  $(x_{it}, c_i)$ 의 조건하에 각각 독립적이다.<sup>24)</sup> 만약  $c_i$ 가 관측가능하다면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x_{it}, c_i, y_{it}$ 를 고려하여  $\beta$ 값을 극대화(maximize)할 수 있다.

$$\prod_{t=1}^T [\Phi(x_{it}\beta + c_i)]^{y_{it}} [1 - \Phi(x_{it}\beta + c_i)]^{(1-y_{it})}$$

그러나 앞서서 언급하였듯이  $c_i$  관측이 불가능하므로 위의 식을 극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베이즈 이론(Bayes' theorem for probability densities)을 이용하여 추정 가능한 전통적인 확률효과 프로빗모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begin{aligned} &L_i(y_{i1}, \dots, y_{iT} | x_{i1}, \dots, x_{iT}; \beta, \sigma_c^2) \\ &= \int \prod_{t=1}^T [\Phi(x_{it}\beta + c)]^{y_{it}} [1 - \Phi(x_{it}\beta + c)]^{(1-y_{it})} (1/\sigma_c) \varphi(c/\sigma_c) dc \\ & \text{(Gauss - Hermite quadrature method)} \\ &= \pi^{-1/2} \sum_{m=1}^M w_m \prod_{t=1}^T [\Phi(x_{it}\beta + \sqrt{2\sigma} cgm)]^{y_{it}} [1 - \Phi(x_{it}\beta + \sqrt{2\sigma} cgm)]^{(1-y_{it})} \end{aligned}$$

23) 표준정규분포를 가정하는 비선형 모형인 프로빗에서는 차분하더라도  $c_i$ 가 제거되지 않는다. 또한 incidental parameters problem이 존재한다.

24) 자세한 설명은 Wooldridge(2002)의 (15.68)를 참고.

M은 노드(nodes)의 수를 의미하고 W는 가중치(weights)를 의미한다. 또한 계산을 보다 간편하게 하기 위해 자연로그를 취하며 아래의 식을 극대화하는  $\beta$ 값을 추정한다.

$$\log L = \sum_{i=1}^N \log L_i(y_{i1}, \dots, y_{iT} | x_{i1}, \dots, x_{iT}; \beta, \sigma_c^2)$$

## 2. 서울시 출산·비출산 여성 및 가구특성 현황

실질적으로 서울시 출산·비출산여성의 특성을 분석하기에 앞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장에서 모든 기술통계치는 t시점(출산시점), t-1시점(출산 1년 전), t-2시점(출산 2년 전) 세 개의 시점으로 제시되어지며 전체와 각 연도별 통계치가 수록되어있다. t시점 2010년 기술통계치는 2010년에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동시에 서울에서 출산한 여성이다. 비출산여성은 동일시점에 출산하지 않은 여성을 비교대상으로 한다.

t-1시점 2010년 기술통계치는 2011년 출산한 여성의 정보를 나타내며 최소 2년(2010년, 201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한 혼인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임신을 위한 의사결정과 임신한 기간의 경제활동상태를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t-2시점 2010년 기술통계치는 2012년 출산한 여성의 정보를 나타내며 마찬가지로 최소 3년(2010년, 2011년, 2012년) 서울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혼인여성이다. 이는 임신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이자 본 연구의 주 분석시점이다. 하지만 서론에서 설명하였듯이 t-1, t시점에 새로운 분석대상이 포함되므로 t시점, t-1시점 역시 함께 제공한다.

아래의 표는 본 연구의 자료구축에 관한 정보이다. 노동패널 원자료의 가구자료와 개인자료를 결합하면 아래와 같은 형태의 원자료가 구축된다. 이에 출산여부가 1이 되는 자료(첫째아 출산)는 더 이상 자료를 구축하지 않고 2000-2002년까지의 자료만 사용하였다. 즉, 기혼여성의 경우 첫째아를 출산한 여성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도	출산여부	가구번호	개인번호	비고
2000	0	hhid1	pid1	-
2001	0	hhid1	pid1	-
2002	1	hhid1	pid1	첫째아 출산 시 탈락
2003	1	hhid1	pid1	분석대상 아님
2004	1	hhid1	pid1	

## 2.1 교육년수 및 일·가족양립지원의 중요성

서울시 출산여성과 비출산여성의 교육수준에 있어서 출산한 여성의 학력이 대체로 높은 수준임을 보였다. 출산시점에 서울시에 거주한 여성부터 3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여성까지 모든 시점<sup>25)</sup>에서 서울시 출산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았다. 출산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고졸이상 전문대졸 이하의 교육수준을 보인 반면 출산한 여성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 대졸이하의 학력을 나타냈다.

각 여성 개인의 교육수준은 단순 수학(修學)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소득 등 경제적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물론 교육을 받는다고 개인의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할 수 없으나 학력수준을 나타내는 '증서'(대학교 또는 대학원 졸업장 등)는 고용주에게 근로자가 갖춘 자격을 표시하는 신호효과(signaling effect)를 갖는다(David & Marianne, 1996).

【표 IV-2】 서울시 출산·비출산 여성 교육년수

(단위 : 년)

구분	시점					
	출산시점		출산 1년 전		출산 2년 전	
연도	비출산	출산	비출산	출산	비출산	출산
전체	12.4	14.2	12.4	14.3	12.4	14.3

주 : 무학(미취학 포함)=0, 초졸=6년, 중졸=9년, 고졸=12년, 전문대졸=14년, 대졸=16년, 석사졸=18년, 박사졸=21년으로 산출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각 연도

25) 학력은 일반적으로 시간불변(time-invariant)이나 분석대상 중 시간에 따라 학력이 변화하는 경우가 존재하고(가령, 첫 조사당시 대학교 재학이었으나 출산 시 대졸로 학력변화) 각 시점별로 여성이 추가되므로 시점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신호효과 등 기존의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다소 낮은 비출산여성들은 좋지 않은 -소득, 고용의 불안정과 같은- 노동환경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노동시장에의 처우 등으로 인해 혼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망설이고 있거나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sup>26)</sup>

직장 출산휴가 유무비율을 통해 서울시 비출산여성은 출산여성에 비해 더 열악한 출산 노동환경에 처해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출산시점 서울거주 출산여성 중 출산휴가가 마련된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은 84.7%를 보였으나 출산하지 않은 여성은 30.5%에 불과하였다.

이에 임신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산 2년 전의 노동환경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임신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을 시기로 판단되는 출산 2년 전의 근무환경을 보면, 2년 후 출산한 여성의 67.6%가 출산휴가가 존재하는 직장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2년 후에도 출산하지 않은 혹은 못한 여성의 경우 30.6%의 여성만 출산휴가 제도가 마련된 직장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V-3 】 서울시 출산·비출산 여성 출산휴가 유무비율 (2001~2012)

(단위 : %)

구 분	시 점					
	출산 2년 전		출산 1년 전		출산시점	
연 도	비출산	출산	비출산	출산	비출산	출산
전 체	30.56	67.61	30.04	80.37	30.49	84.72

주 : 출산휴가 유무에 관한 정보는 노동패널 4차(2001년)부터 제공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각 연도

출산휴가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유무에 관해서도 차이를 보였다. 출산시기에 서울에 거주했던 출산여성과 비출산여성 직장의 육아휴직 유무 비율은 각각 출산여성 70.8%, 비출산여성 22.8%였다. 또한 2년 후 출산한 여성의 53.5%는 육아휴직 제도가 마련된 직장에 종사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여성, 2년 후에도 출산하지 않은 여성의

26) 물론 학력 이외에도 여성의 나이, 경제적, 환경적 요인 등 고려할 요인들은 무수히 많으며 고소득 환경에 놓인 여성의 경우 출산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경우 22.3%만 제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출산관련 제도는 일반적으로 일용직, 임시직보다 상용직을 대상으로 하며 규모가 작은 직장보다 규모가 큰 직장에 마련 되어있을 확률이 높다. 즉, 제도의 마련은 근무상 지위와 종사하는 직장의 '질'(quality)적인 측면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고학력화가 근무상 지위와 직장의 질을 향상시킬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4】 서울시 출산·비출산 여성 육아휴직 유무비율

(단위 : %)

구 분	시 기					
	출산 2년 전		출산 1년 전		출산시점	
연 도	비출산	출산	비출산	출산	비출산	출산
전 체	22.33	53.52	22.83	52.34	22.82	70.83

주 : 출산휴가 유무에 관한 정보는 노동패널 4차(2001년)부터 제공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각 연도



## 2.2 비출산여성의 고용불안정 및 낮은 소득수준

서울시 출산여성과 비출산여성의 전반적인 경제적 특성 비교에 있어서 비출산여성은 출산여성보다 열악한 노동시장, 경제상태를 보였다. 출산여성에 비해 일하는 비중은 높았으나 임시직과 일용직에 종사하는 여성이 많았으며 정규직의 비율이 낮았다. 이 뿐만 아니라 비출산여성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출산여성보다 높았으며 월평균임금은 약 60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출산·비출산여성 모두 배우자(남성)와 비교해볼 때 더 큰 경제적 격차를 보였다. 90%넘는 남성 취업비중에 비해 출산·비출산여성은 턱없이 낮은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경제상태에 가장 중요한 월평균소득에서 또한 심각하였다. 출산여성 월평균소득의 경우 배우자 월평균소득의 80%를 차지하였으나 비출산여성은 불과 53~4%만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남성-여성간의 노동시장 불균형과 출산-비출산여성간의 불균형은 여성 또는 비출산여성으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발생시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sup>27)</sup> 본 장에서는 서울시 출산·비출산여성의 경제적 특성을 비교하여 비출산여성이 가지는 특성,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나아가 남성과의 비교를 통해 여성이 처한 노동환경을 점검한다.

### 2.2.1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

서울시 출산여성에 비해 비출산여성의 취업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 2년 전 출산여성과 비출산여성의 취업비중이 49.0%, 48.5%로 유사하였다. 그러나 출산 1년 전 출산여성과 비출산여성을 살펴보면 비출산여성은 49.1%, 출산여성은 44.8%였으며 출산 2년 전인 48.5%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이에 출산여성과 비출산여성의 취업비중이 다소 벌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출산여성의 취업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는 점차 심화되어 출산 시, 출산여성의 취업비중은 34.1%까지 감소하였다. 반면 비출산여성은 출산 2년 전, 출산 1년 전, 출산시기까지 취업비중의 변화가 49%대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임신에 대한 의사결정 시점부터 출산까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출산여성 혹은 출산을 앞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함을 유추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출산에 호의적이지 않은 노동시장 분위기<sup>28)</sup>로 인해 취업여성에서 비경제활동여성으로 전환되고,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구학적 요인에서 보았듯이 서울시 출산여성의 직장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가 상대적으로 잘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이탈이 발생하였다. 이는 제도마련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가족양립의 어려움, 여성노동시장환경의 문제 등이 출산문제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27) 반대로 여성의 소득이 남성보다 매우 높은 경우 부부의 역할 합의 이론에 의해 출산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다. (Yamaguchi, 2010)

28) 현대경제연구원(2014)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출산 후 복직의 어려움, 출산 후 직장에서의 불이익이 경력단절의 주된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위험 등 출산 비친화적인 분위기가 출산을 어렵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 표 IV-5 】 서울시 출산·비출산여성 및 배우자 경제활동상태

(단위 : %, %p)

구분		출산 2년 전		출산 1년 전		출산	
		취업	비경활	취업	비경활	취업	비경활
여성	비출산(A)	49.04	49.32	49.11	49.32	49.59	48.82
	출산(B)	48.48	50.00	44.84	53.87	34.11	65.50
	차이(B-A)	-0.56	0.68	-4.27	4.55	-15.48	16.68
남성	비출산(A)	93.07	4.95	92.72	5.22	92.61	5.29
	출산(B)	96.48	2.01	95.48	3.87	94.11	4.72
	차이(B-A)	3.41	-2.94	2.76	-1.35	1.50	-0.57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차~15차

서울시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불균형은 서울시 남성과의 비교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출산여성의 취업비중은 출산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감소하여 비출산여성과 차이가 커졌으나 남성의 경우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2년 전 서울시 출산·비출산여성은 각각 48.5%, 49.0%의 취업비중을 보였으나 출산 1년 전의 출산여성의 취업비중은 비출산여성 취업비중에 비해 4.3%p 낮은 44.8%이었다. 출산 시 출산여성의 취업비중은 더욱 감소하여 비출산여성의 취업비중보다 15.5% 낮은 34.1%였다. 하지만 배우자(남성)의 경우 출산 2년 전, 출산 1년 전, 출산까지 상황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비출산남성의 취업비중 차이는 1.5%~3.4%의 차이만을 보였다.

출산휴가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많은 수의 출산여성이 출산시점에 가까워질수록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모습은 출산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의미한다.<sup>29)</sup> 비록 출산여성은 비출산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적 마련이 잘 되어있음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제도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으로 인해 차라리 일을 그만두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29) 이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그래프에서 30~39세가 급격히 하락하는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M자형 곡선은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 2.2.2 비출산여성의 고용불안정

서울시 출산한 여성의 2년 전 근무상 지위는 80.4%가 상용직이었으며 비출산여성은 출산여성보다 23%p 낮은 57.8%만 상용직에 종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여성의 출산 2년 전 임시직과 일용직에 종사하는 비중은 불과 5.4%, 1.1%로 매우 낮았으나, 비출산여성의 임시직 비중은 상용직 다음으로 높은 17.9%였다. 이는 2년 후 출산한 여성의 임시직 비중 5.4%보다 12.5%p 높은 비중이다.

서울시 출산여성과 비출산여성의 근무상 지위에서 보았듯이 출산여성은 비출산여성보다 상용직 종사비중이 매우 높았다. 반대로 임시직과 일용직에 종사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순 근무상 지위의 의미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임시직, 일용직은 상용직에 비해 고용불안정과 낮은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출산이라는 것은 여성과 남편, 한 가구가 장기적인 관점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경제적인 문제이다.

가구단위의 의사결정을 고려하기 위해 출산여성, 비출산여성 배우자의 근무상 지위도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비출산여성의 배우자는 비출산여성과 상용직, 일용직의 비중은 유사하였으나 자영업비중이 매우 높았다. 이는 경제상황에 따라 소득이 불안정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비출산여성의 배우자는 출산여성의 배우자에 비해 임시직의 비중은 2% 수준으로 비슷하였으나 상용직의 비중이 매우 낮으며 일용직비중이 높았다.

출산 후 육아, 교육, 주택, 생활비 등에 투입되는 미래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여성과 배우자의 소득과 고용의 안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을 결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

【표 IV-6】 서울시 출산·비출산여성 및 배우자 근무상 지위

(단위 : %)

구 분			임금근로자			자영업	가족 종사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여성	출산 2년 전	비출산	57.83	17.88	6.24	16.83	1.22
		출산	80.43	5.43	1.09	13.04	0.00
	출산 1년 전	비출산	57.59	17.82	6.3	16.93	1.36
		출산	79.26	7.41	2.22	10.37	0.74
	출산시기	비출산	56.82	18.04	6.35	17.16	1.62
		출산	84.80	4.09	0.58	9.94	0.58
배우자	출산 2년 전	비출산	57.70	2.34	7.01	32.76	0.19
		출산	82.20	2.62	2.09	13.09	0.00
	출산 1년 전	비출산	57.99	2.45	6.88	32.50	0.18
		출산	80.74	2.36	2.36	14.53	0.00
	출산시기	비출산	58.37	2.82	6.78	31.83	0.19
		출산	76.99	3.14	3.35	16.53	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15차

출산여성과 비출산여성의 고용안정을 대변하는 요인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여부를 확인한 결과 앞서 유추했던 결과와 동일한 비출산여성의 정규직 종사비중이 매우 낮았다. 서울시 출산여성의 출산 2년 전 88.6%는 정규직이었으나 출산하지 않은 여성은 23.7%p 낮은 6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출산 1년 전, 출산시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 비출산여성은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63~64%대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이며 비정규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였다. 반면 비출산여성 배우자의 정규직비율은 출산여성 배우자의 정규직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84% 수준의 정규직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표 IV-7】 서울시 출산·비출산여성 및 배우자 정규직 비율

(단위 : %, %p)

구 분	출산 2년 전			출산 1년 전			출산		
	비출산	출산	차이	비출산	출산	차이	비출산	출산	차이
여성	64.92	88.61	-23.69	64.24	85.96	-21.72	63.49	94.56	-31.07
배우자	84.62	90.80	-6.18	84.41	91.81	-7.40	84.01	90.26	-6.25
차이(%p)	-19.70	-2.19	-	-20.17	-5.85	-	-20.52	4.30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차, 4~15차

배우자와의 정규직비중 차이에 있어서 비출산가구는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출산여성은 배우자에 비해 정규직비중이 2.2%p 낮은 수준에 그쳤으나 비출산여성은 출산여성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비해서도 무려 20%p 낮았다. 다시 말해 남성에 비해 정규직에 종사하지 않는 혼인여성은 출산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는데 근무상 지위에서 보았듯이 안정적인 일자리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단순 기술통계치를 이용하여 정확한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근로환경이 취약한 여성이 출산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2.2.3 근무시간 및 월평균소득

출산하기 좋은 환경조성의 첫 번째 조건은 일·가족양립이 가능한 가족중심의 사회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 경제여건이다. 일·가족양립은 주어진 시간 제약 하에서 하나를 택하면 다른 하나를 일정부분 포기해야하는 상충관계(trade-off)에 놓여있다. 가정보다 일 우선인 사회적 분위기, 과도한 회사중심의 개인평가 문제 등은 가족보다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게 하는, 일·가족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특히 가족 내의 역할분담에 있어서 여성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sup>30)</sup>으로 인해 여성은 일·가족의 선택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일에 투입되는 시간의 감소만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한다.<sup>31)</sup> 서울시 비출산여성은 출산여성에 비해 모든 시점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높았으며 배우자(남성)의 주당 근로시간에 있어서도 비출산여성의 배우자가 높았다. 즉 비출산가구의 주당 근로시간이 출산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출산·비출산가구 모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일·가족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으로 분류된다.

30) 통계청 사회조사에 의하면 2014년 11월 서울시 취업여성의 78.6%는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한다고 응답하였다.

31) 서울시의 높은 물가, 주택비용, 양육, 교육과 같은 환경 하에서 경제적 손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표 IV-8】 서울시 출산·비출산남녀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 시)

주당근로시간	출산 2년 전		출산 1년 전		출산	
	비출산	출산	비출산	출산	비출산	출산
여성	45.59	44.23	45.47	42.00	45.21	41.88
남성	49.00	47.78	48.84	47.11	48.38	47.71

주 : 서울시 임금근로자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15차

본 연구는 서울시 여성의 노동환경, 경제적인 여건이 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정하며 이 중에서도 월평균소득에 주목한다. 일반적으로 서울시의 높은 생활비, 보육비, 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결국 소득에서 오는 문제이다. 소득대비 각각의 비용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면 미래에 투입되어야 할 비용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금전적인 부분이 출산의사결정의 전부는 아니지만 분명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다음의 [표 IV-9]를 보면 서울시 출산여성의 월평균소득과 비출산여성의 월평균소득이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다.

【표 IV-9】 서울시 출산·비출산남녀 월평균소득 및 배우자 대비 소득

(단위 : 만원, %)

구 분	혼인여성			배우자		
	비출산(A)	출산(B)	차이(A-B)	비출산	출산	차이(A-B)
출산 2년 전	127.12	174.78	-47.66	236.71	220.81	15.9
출산 1년 전	130.53	193.34	-62.81	244.43	241.26	3.17
출산시기	137.07	207.22	-70.15	252.45	249.08	3.37
평 균	131.57	191.78	-60.21	244.53	237.05	7.48

배우자 대비 여성 소득

	비출산여성 배우자 대비 비출산여성	출산여성 배우자 대비 출산여성
출산 2년 전	54%	79%
출산 1년 전	53%	80%
출산시기	54%	83%

주 : 서울시 임금근로자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15차



서울시 비출산여성은 2년 후 출산한 여성에 비해 월평균소득이 48만원 낮았으며 출산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소득격차는 70만원까지 벌어졌다. 출산2년 전~출산시기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봉상승에 의한 연봉상승 역시 비출산여성이 출산여성에 비해 낮은 것을 짐작 할 수 있다.<sup>32)</sup> 반면 남성 월평균소득의 경우 그 차이는 약 7만원으로 매우 작은 차이였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제도마련의 환경적 여건뿐만 아니라 근무상 지위, 정규직 여부, 여기서 파생되는 월평균소득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비출산여성은 출산여성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있었다. 또한 배우자 임금대비 여성의 월평균소득에 있어서도 출산여성은 배우자 소득 대비 79%, 80%, 83%를 보였으나 비출산여성의 경우 53~4%만을 차지할 뿐이었다. 비출산여성의 출산여성과의 소득차이, 배우자와의 소득차이는 비출산여성으로 하여금 상대적박탈감(relative deprivation)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적 비용인 임신,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할 수도 있는 요인이라 생각된다. 반대로 높은 소득은 출산의 기회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며 배우자에 비해 소득이 높은 여성은 가구생계의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 대해 서울시 여성은 어떠한 이론을 따르는지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출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은 여성이 가사일만 하거나, 가구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거나 하는 것이 아닌 배우자와의 적절한 가구내의 역할분담이라 판단된다.

### 2.3 가구 근로소득 및 이전소득

서울시 출산가구와 비출산가구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3,500~3,800만원<sup>33)</sup> 범위 안에서 이뤄지며 경제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4)</sup> 그러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친척, 친지로부터 받는 지원금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대가없이

32) 근무상 지위에서 살펴보면 출산여성은 비출산여성에 비해 상용직 종사 비중이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임금상승도 더욱 안정될 확률이 높다.

33) 서울시 출산·비출산여성과 배우자의 월평균소득의 합을 12개월로 환산한 소득과 상이하다. 이는 출산·비출산가구 근로소득에는 남성과 여성 중 한명만 일하고 있는 경우, 모두 일하고 있는 경우 등 일의 유무와 상관없는 가구전체의 소득을 나타내므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34)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보험소득, 기타소득 역시 큰 차이가 없었으며 본문에 포함하지 않는다.

받는 보조금(노동패널 통합설문지, 2014)인 이전소득에서 출산가구와 비출산가구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다시 말해 부부의 소득 외에 추가적인 소득에 있어서 출산가구가 비출산가구보다 더 많은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제적 도움이 출산에 도움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출산가구는 출산 2년 전 162만원으로 가장 큰 지원을 받았고 출산 1년 전에는 이보다 소폭 감소한 154만원을 받았으며 출산 시에는 113만원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반면 비출산가구의 경우 79~82만원의 이전소득을 취하고 있었으며 이는 출산 2년 전 출산가구 이전소득에 비해 49%에 불과하였다. 또한 이전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주와 배우자의 부모로부터의 현금지원 역시 출산가구 비출산가구 구분 없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서울시 출산·비출산가구의 경제적인 지원은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시 투입된 금액에 대한 지원일수도 있으며 부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가구 외(外)부터의 지원,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비용부담의 지원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출산가구가 비출산가구보다 높은 금전적 지원을 받는 이유는 출산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가령, 양육비와 보육비, 교육비 등)이 주는 부담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로 인한 소득의 상승 또는 직접적인 비용감소 등의 방안이 요구된다.

【 표 IV-10 】 서울시 출산·비출산가구 근로소득, 이전소득,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단위 : 만원, %)

구분	출산 2년 전			출산 1년 전			출산		
	비출산 (A)	출산 (B)	비율 (A/B)	비출산 (A)	출산 (B)	비율 (A/B)	비출산 (A)	출산 (B)	비율 (A/B)
근로소득	3521.03	3466.94	102%	3609.86	3752.20	96%	3713.60	79.09	97%
이전소득	82.26	113.00	73%	79.41	154.32	51%	3819.56	162.29	49%
현금지원	491.9	495.4	99%	451.7	749.5	60%	480.1	306.2	157%

주 : 1) 가구 근로소득에는 혼인여성 및 배우자뿐만 아니라 전체 가구원에 대한 연간소득임  
 2) 현금지원은 가구주와 배우자 부모로부터의 현금지원 합계 수치임(9~15차 조사자료)  
 3) 이전소득의 경우 받지 않는 가구 즉, 관측값이 0인 가구도 포함되어 있으며 현금지원은 현금지원을 받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여 관측값이 0인 가구가 제외된 값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15차

한편, 서울시 출산가구와 비출산가구의 주관적 경제상태는 출산가구가 비출산가구에 비해 미미하게 경제상태가 나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모든 가구가 체감 경제 상태는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표 IV-11 서울시 출산·비출산가구 주관적 경제상태 인식정도

구분	출산 2년 전		출산 1년 전		출산	
	비출산	출산	비출산	출산	비출산	출산
주관적 척도	2.79	2.94	2.78	2.99	2.79	2.80

주 : 매우 어려움(1)~매우 만족(5)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15차

#### 2.4 비출산가구의 낮은 저축액과 높은 부채금액

서울시 출산가구와 비출산가구의 월평균 저축액에 있어서 출산가구가 비출산가구에 비해 월 2~13만원 수준의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부채에 있어서 출산 2년 전의 출산가구는 4,454만원의 금융부채가 있었으나 출산 1년 전 1,100만원의 부채 증가를 보였으며 출산 시 200만원이 더 증가하여 5,634만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비출산가구는 5,192만원에서 5,757만원으로 증가했을 뿐이었다.

출산가구의 비금융부채 또한 금융부채와 동일한 추세를 보이며 출산 2년 전 2,433만원이었으나 출산 1년 전, 출산시기에 각각 3,392만원, 3,894만원으로 증가하였고 비출산가구는 2,200만 원 선에 머물렀다. 또한 비출산가구의 개인부채는 2,700만원 수준이었으나 출산가구는 출산 2년 전 4,570만원에서 감소하여 출산 시 1,405만원이었다.

출산가구의 출산시점이 가까워질수록 금융부채, 비금융부채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출산으로 인한 비용의 발생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출산은 가족 구성원이 확장됨을 의미하므로 더 넓은 주거지에 대한 필요성과 이로 인한 목돈마련의 부채일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그 동안의 저축을 통한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sup>35)</sup> 이러한 매우 큰 규모의 부채는 비출산가구에게 첫째야 출산의 부담을 주며 출산가구에게 둘째야 출산부담을 야기한다.

35) 금전적인 부담으로 인해 출산 전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고려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출산한 가구이므로 지역 이동을 포함할 수 없었다.



【 표 IV-12 】 서울시 출산·비출산가구 월평균저축 및 부채

(단위 : 만원)

구 분	출산 2년 전		출산 1년 전		출산	
	비출산	출산	비출산	출산	비출산	출산
저축액	76.16	81.61	77.52	90.87	80.52	82.48
금융부채	5192.29	4454.17	5410.42	5536.79	5757.86	5634.18
비금융부채	2293.53	2433.33	2260.38	3392.86	2165.36	3894.12
개인부채	2647.18	4570.83	2742.16	2677.78	2928.25	1405.56

주 : 1) 월평균저축액의 경우 저축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수치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15차

## 2.5 입주·주거형태 및 주거비, 월평균 생활비

서울시 비출산가구는 시점과 입주형태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출산가구의 출산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전세의 비중이 감소하고 자가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에 있어서도 비출산가구는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나 출산가구는 출산 2년 전 28.3%의 다세대주택 주거비율이 출산시기에 가까워지면서 21.7%로 하락하였다. 또한 출산가구의 단독주택의 주거비율 출산 2년 전 13.7%에서 12.0%로 감소하였고 반대로 아파트 주거비율은 40.6%에서 50.0%로 증가하였다.



【 표 IV-13 】 서울시 출산·비출산가구 입주 및 주거형태 비율

(단위 : %)

구 분	자가		전세		월세		기타	
	비출산	출산	비출산	출산	비출산	출산	비출산	출산
출산 2년 전	48.09	32.55	40.64	58.49	8.77	4.72	2.50	4.25
출산 1년 전	48.19	33.83	40.33	56.68	9.14	5.04	2.33	4.45
출산시기	48.03	34.35	40.13	54.92	9.44	6.80	2.40	3.94

구 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비출산	출산	비출산	출산	비출산	출산	비출산	출산
출산 2년 전	19.06	13.68	41.45	40.57	12.39	12.26	22.26	28.30
출산 1년 전	19.27	12.17	41.37	45.70	12.94	13.06	21.75	25.22
출산시기	19.31	12.01	41.37	50.00	13.35	12.90	21.40	21.68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15차

서울시의 아파트구매는 전국에 비해서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아파트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그렇다면 다세대에서 더 높은 비용이 요구되는 아파트로 이동한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다세대에 비해 관리와 안전의 측면에서 유리한 장점이 있다는 것이 원인일 수도 있고 출산을 위한 더 큰 주거공간의 확보일 수도 있다.<sup>36)</sup> 통계적으로 집계하기 어렵지만 아파트가 가진 이미지에 대한 선호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주거형태의 변화는 경제적인 제약을 가져오게 된다. 가령 전세보증금의 변화 혹은 주거비의 증가는 부채를 증가시킬 수도 있으며 가구재정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다음의 표는 서울시 출산가구와 비출산가구의 전세보증금 규모를 나타낸다. 평균적으로 7,000만원에 근접한 전세보증금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추가적인 월세 또한 월 30만원 수준이었다. 경제적인 부담을 일으킬 수 있는 규모로 판단된다.

■ 표 IV-14 ■ 서울시 출산·비출산가구 전세보증금 규모

(단위 : 만원)

구분	출산 2년 전		출산 1년 전		출산	
	비출산	출산	비출산	출산	비출산	출산
전세보증금	6150.85	6616.67	6533.65	6874.29	6795.97	7585.92
월세금	28.89	29.80	31.89	27.33	34.13	27.14

주 : 전세보증금의 경우 일반적인 전세보증금과 전세와 월세가 공통으로 적용되는 ‘반전세’ 금액의 합산  
이므로 일반적인 순수 전세보증금보다 과소평가 되어있을 가능성이 존재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15차

서울시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크게 노동환경과 노동환경에서 파생되는 소득, 임금의 불균형 등을 살펴보았으며 가구단위의 소득과 부채, 주거환경과 같은 경제적 상황도 살펴보았다. 또한 서울시라는 지역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월평균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요인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36) 한국노동패널 2~15차까지의 주거공간 실사용평수를 분석한 결과 출산 2년 전 출산·비출산가구 모두 약 20평대의 주거공간에 거주하였으며 출산시점 모두 21평대의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생활비는 출산여부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소비되는 재화나 상품,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므로 출산가구, 비출산가구 모두 시계열적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서울시 비출산가구와 출산가구의 생활비는 각각 200~218만원, 172~195만원에서 발생하고 있었으며 서울시 경제적 요인에서 보았듯이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 표 IV-15 】 서울시 출산·비출산가구 월평균 생활비

(단위 : 만원)

구분	출산 2년 전		출산 1년 전		출산	
	비출산	출산	비출산	출산	비출산	출산
총 생활비	207.14	172.04	213.47	177.01	218.22	195.39
식비	41.78	32.16	42.33	35.64	42.46	39.82
주거비	18.35	16.22	18.57	17.32	19.03	18.02
생필품	6.09	5.90	6.24	5.63	6.12	7.62
교통비	7.26	6.14	7.40	6.52	7.64	6.33
차량유지비	24.72	25.37	25.23	26.93	25.98	26.39
의료비	5.64	6.20	5.75	5.53	5.94	6.47
문화비	6.70	6.51	7.19	8.36	7.54	7.56

주 : 전세보증금의 경우 일반적인 전세보증금과 전세와 월세가 공통으로 적용되는 ‘반전세’ 금액의 합산이므로 일반적인 순수 전세보증금보다 과소평가 되어있을 가능성이 존재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15차



### 3.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 분석 : 미시적 요인을 중심으로

서울시 여성이 출산을 결정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앞서 언급되었던 다양한 요인들 중 가장 밀접한 요인을 선별하고 선별된 요인들이 실제 출산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서울시 여성의 인구학적 요인 중 여성의 연령과 교육년수, 교육년수×월평균소득을 고려하고 근무상 지위 등 경제적 요인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남성)의 월평균소득, 일·가족양립정도를 위한 주당 평균 근로시간과 서울시 환경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가구 월평균 생활비도 분석모형에 반영하였으며 주거안정 효과를 보기 위해 입주형태를 고려하였다.

분석방법은 본 장의 1절에서 서술하였듯이 IV panel probit 모형을 활용하여 각 요인이 미치는 영향과 이를 이용한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추정하였다.

#### 3.1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 분석결과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 분석결과, 여성의 교육년수를 포함한 교육년수×월평균소득, 직장 내 일·가족양립지원제도 마련, 배우자(남성) 월평균소득, 상용직, 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가구 월평균 생활비는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출산에 부정적이었다. 또한 여성의 월평균소득은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상태가 양호할수록 출산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sup>37)</sup>

---

37) IV panel probit 추정 후, 확률을 산출하기 위한 한계효과 재추정 결과는 본장의 소결 [표.Ⅳ-22]에 제시하였다.

표 IV-16 서울시 여성 출산영향요인 분석결과 (출산 2년 전)

구 분 변 수 명	RE Panel Probit		IV Panel Probit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b>여성의 연령 및 교육년수</b>					
- 15-29세			기준더미		
- 30-39세	-1.337***	-0.927***	-0.998***	-1.047***	-1.048***
- 40-49세	-3.522***	-2.172***	-2.329***	-2.390***	-2.371***
여성의 교육년수	0.107***	0.085***	0.013	0.057**	-
<b>월평균 소득</b>					
- ln(여성의 월평균소득)	-	-	-	0.023	-
- ln(배우자 월평균소득)	-	-	-	0.146***	0.158***
- $\ln\left(\frac{\text{여성의 월평균소득}}{\text{배우자(남성) 월평균소득}}\right)$	-1.235**	-4.360***	-	-	-
- ln(가구의 월평균소득)	-	-	0.591***	-	-
- 주관적 경제상태	-	-	0.115**	0.106*	0.094*
- 여성의 월평균소득 × 교육년수	-	-	-	-	0.009**
<b>일·가족양립지원 제도</b>					
- 출산휴가 유무	-0.144	-	-	-	-
- 육아휴직 유무	1.057**	-	-	-	-
- 출산·육아휴직 유무	-	0.484***	0.178	0.406**	0.339*
<b>근무시간(일·가족양립의 정도)</b>					
- $\left(\frac{\text{여성 주당평균 근무시간}}{\text{가구 주당평균 근무시간}}\right)$	-0.079	-	-	-	-
- 여성의 주당평균 근무시간	-	0.001	-	-	-0.101
<b>근무상 지위 및 경제활동상태</b>					
- 상용직			기준더미		
- 임시직 및 일용직	-0.401	-0.323	-0.083	-0.164	-0.137
-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0.167	0.031	0.088	0.371	0.234
- 비경제활동	-1.107**	-3.408***	-0.344**	-0.049	-0.013**
<b>가구소득 대비 생활비</b>					
ln(월평균 생활비)	-0.208**	-0.110*	-	-	-
ln(월평균 생활비/월평균 가구소득)	-	-	0.318***	0.222**	0.232**
N	2535	2360	2424	2424	2424
log likelihood	-237.559	201.49	238.03	181.78	192.42
Wald chi-sq	126.98	0.00	0.00	0.00	0.00
p-value	0.00	0.00	0.00	0.00	0.00

\*\*\*p<0.01, \*\*p<0.05, \*p<0.1

### 3.1.1 서울시 여성의 연령과 출산

서울시 여성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30대 혼인여성과 40대 혼인여성은 20대 혼인여성에 비해 출산할 확률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이미 많이 알려진 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출산확률이 낮아진다는 의견과 동일한 결과였으며, 본 연구에서 다루는 요인 중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30대 혼인여성은 20대 혼인여성에 비해 출산할 확률이 약 26%p 낮았으며 40대 혼인여성은 약 35%p 낮았다.

【 표 IV-17 】 연령 및 교육년수 한계효과(marginal effect)

연령대 추정계수 및 유의수준	
30대	40대
-0.262***	-0.353***

\*\*\*p<0.01, \*\*p<0.05, \*p<0.1

### 3.1.2 서울시 여성의 근무상 지위, 월평균소득<sup>38)</sup>과 교육년수

서울시 여성의 월평균소득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전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가구 출산결정요인을 분석한 송헌재(2012)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그러나 모형4에 의하면 여성의 월평균소득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나 주관적 경제상태를 좋다고 인식할수록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모형5(최적모형)에 의하면 여성의 월평균소득×교육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으며, 배우자(남성)의 월평균소득 또한 여성의 출산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명목임금뿐만 아니라 여성 스스로가 느끼는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출산에 긍정적이었다.

38) 월평균소득을 범주화하여 고소득 집단과 저소득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원자료와 더미로 처리하여 분석하는 한계로 인해 각 개별여성의 소득을 고려하였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2015년 발표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여성이 적극적으로 학력과 경력을 추구하면서 출산에 관심이 멀어지는 통념이 무너지는 결과를 보였다. 미국 인구통계 분석에 따르면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여성이 자녀를 가지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sup>39)</sup> 미국의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들의 경우 과거보다 더 많은 출산을 하였다.<sup>40)</sup>

서울시 여성 월평균소득×교육년수가 증가할수록 출산확률은 0.1%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남성)의 월평균소득이 1% 증가할수록 여성의 출산확률은 1.3%p 증가하였다. 여성이 느끼는 주관적 경제상태 만족도가 올라갈수록 출산확률은 9.4%p 올라갔다.

고학력-고연봉의 여성, 배우자의 월평균소득, 주관적 경제상태 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주관과 명목 모두를 포함한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모형<sup>241)</sup>에서 다룬 배우자(남성) 월평균 소득 대비 여성의 월평균소득은 출산에 음(negative)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 다루었던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출산 포기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여성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이 낮아지는 것은 출산의 기회비용이 높을수록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과 동시에 한 가구의 생계부담이 여성에게 가중될수록 출산확률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sup>42)</sup> 가사는 여성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하에서 출산의 1차 당사자인 여성에게 가구생계부담은 출산을 더더욱 미루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39) 2015년 자녀가 없는 석사학위 이상의 고학력 여성은 22%에 불과하였다.

40) 한겨레21, 2015년 6월 17일자 언론보도 자료 인용

41) 최적의 모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가지는 경제적부담에 관한 모형은 모형1과 모형2가 존재하며 이 두 개의 모형 중 더욱 적합도가 높은 모형2를 선택하였다.

42) 배우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여성의 월평균소득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 여성의 소득이 낮아질수록 출산확률은 올라가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현실적 논리와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수치해석일 뿐이다. 실증분석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수리적인 절차를 통한 수치와 논리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표 IV-18 】 여성 월평균소득 × 교육년수, 배우자 월평균소득 한계효과(marginal effect)

여성 월평균소득 × 교육년수	배우자 월평균소득	주관적 경제상태 만족도	$\left( \frac{\text{여성의 월평균소득}}{\text{배우자(남성) 월평균소득}} \right)$
0.001***	0.013**	0.094*	-0.334***

주 : 1) 주관적 경제상태 만족도는 실증분석 결과임  
 2) 배우자소득대비 여성의 소득은 모형2의 한계효과를 나타냄  
 \*\*\*p<0.01, \*\*p<0.05, \*p<0.1

그렇다면 여성에게 가구 생계부담이 덜한, 전적으로 배우자의 소득에만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것인가? 하지만 실증분석 결과 상용직 여성에 비해 비경제활동 여성이 출산할 확률은 약 0.1%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여성의 경제활동과 동시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은 배우자와 적절하게 분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판단된다.<sup>43)</sup>

또한 임시직, 일용직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sup>44)</sup> 상용직에 비해 출산의 확률이 1.1%p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의 안정은 여성의 노동과 출산에서 현실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 표 IV-19 】 서울시 여성의 근무상 지위 한계효과(marginal effect)

근무상 지위 및 경제활동상태		
임금·비임금 근로자		비경제 활동
임시직 및 일용직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0.011	0.022	-0.001***

\*\*\*p<0.01, \*\*p<0.05, \*p<0.1

43) Yamaguchi(2010)는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무임승차'는 출산의욕을 감소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부부사이에 가족 형성의 합의는 출산의 큰 조건이라 밝히고 있다. 특히 남편이나 아내 모두 경제적 역할과 가사·육아를 담당한다는 비전통적 합의의 경우 부부의 기능이 대체(代替)적으로 뒤를 주장한다. 이는 부부관계를 약화시키기 쉬우므로 부부의 보완성을 높이기 위해 가정 내 협업, 역할 분담을 통해 서로 도와주고 있다는 확인이 필요하다 주장한다.

44) 앞선 현황에서는 서울시 출산여성과 비출산여성의 근무상 지위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으나 실증분석의 결과 임시직 및 일용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모든 요인을 고려하는 실증분석에 포함된 분석대상 중 임시직 및 일용직의 수가 비경제활동에 비해 매우 적어서 발생한 문제로 판단된다. 분석에 포함된 수많은 여성들은 상용직,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었다.



### 3.1.3 서울시 여성의 출산관련 제도 및 일·가족양립의 정도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가 있는 직장에 종사중인 서울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직장에 종사하는 여성보다 출산할 확률이 2.8%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sup>45)</sup> 이는 출산을 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양(positive)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서울시 여성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시간 증가할수록 출산확률은 0.8%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6)</sup>

【 표 IV-20 】 출산관련 제도 및 주당 월평균 근로시간 한계효과(marginal effect)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여부	주당 평균 근로시간
0.028**	-0.008*

\*\*\*p<0.01, \*\*p<0.05, \*p<0.1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같은 일·가족양립을 가능하게 정책은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에 제한될 위험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으며 제도의 사용이 여성에 한정될수록 조직 내 불이익을 받기 쉽다는 지적이 있다(신경아, 2010).

물론 직장 내의 불이익과 같은 인식은 모형에 포함시킬 순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제고에 있어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육아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과 출산 후 다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은 여성이 출산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여성들만을 대상이 될 경우 낙인효과가 우려되므로 남성의 사용률 역시 함께 장려하는 인식개선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45)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의 유무에 관해 질문은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 비경제활동 여성의 경우 출산·육아휴직제도 여부 = 0으로 처리하였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혼인여성 중 출산여성이고 임금근로자로 표본을 제한할 경우 표본의 수가 매우 적어 추정이 효율적인 추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46) 주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임금·비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비경제활동 여성의 주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0으로 처리하였다. 대체할 수 있는 변수로 가사에 투입되는 시간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자료수집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 3.1.4 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월평균 생활비

서울시 출산가구의 주거안정을 반영하기 위한 입주형태는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sup>47)</sup>, 서울시 혼인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월평균 생활비가 1% 증가할수록 출산확률은 1.9%p 증가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2012)는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계 복지욕구 및 우선순위’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 지출규모도 높아짐을 보였다.<sup>48)</sup> 즉, 월평균 생활비가 높다는 것은 해당가구의 소득수준도 그에 비례하여 높다는 것이다.

앞서 여성의 월평균소득×교육년수, 배우자 소득, 주관적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출산확률이 높아짐을 확인하였으며, 가구소득 대비 월평균 생활비 역시 출산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9)</sup>

【 표 IV-21 】 월평균 가구소득 대비 월평균 생활비 한계효과(marginal effect)

ln(월평균 가구소득 대비 월평균 생활비)
0.019***

\*\*\*p<0.01, \*\*p<0.05, \*p<0.1

47) 서울시의 높은 주택가격을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더욱 적합하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이미 혼인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주택을 구입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주택구매를 위한 대출금을 모형에 고려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노동패널에서 주택구매 대출금이 있는 서울시 혼인가구를 추출하는 것에 매우 큰 제약이 존재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택안정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그러나 주거형태와 관련된 변수들은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며 모형의 적합성을 크게 낮추는 결과를 보여 본문에서 제외하였다.

48) 4인 가구 기준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포함한 월평균 소득과 지출은 가계소득 연 5,000만 원 이상의 가구는 필요지출규모가 약 311만원이었으며 연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275만원으로 나타났다.

49) 삼성경제연구소(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에서 언급되었듯이 소득과 생활비는 비례관계를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령, 가구 월평균소득 300만원, 월평균 생활비가 100만원인 가구(소득대비생활비 0.3, 저축 200만원)와 가구 월평균소득 500만원, 월평균 생활비 300만원(소득대비 생활비 0.6, 저축 200만원)인 가구가 있다면 후자가 출산에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소결

본 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 2~15차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출산·비출산여성과 가구의 특성현황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한 결과를 도출했다. 비출산여성은 출산여성에 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가 마련된 사업장에 근로하는 비중이 30%p 이상 낮았으며 상용직 비중은 23%p 낮고 임시직 비중이 13%p 높았다. 또한 비출산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출산가구에 비해 48만원 낮았으나 가구 총 생활비는 35만원 높았다. 이는 여성의 경제적인 안정과 더불어 직장 내 일·가족양립지원 제도 마련, 고용안정이 출산에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표 IV-22 | 서울시 출산·비출산 여성 및 가구 출산 2년 전 특성 비교

항목	구분(단위)	비출산 가구(A)	출산 가구(B) <sup>50)</sup>	차이 (A-B)	T/chi	p
여성의 교육기간(년)		12.4	14.3	-1.9	-12.27	0.000
여성의 직장 내 출산휴가 유무(%)		30.56	67.61	-37.05	42.15	0.000
여성의 직장 내 육아휴직 유무(%)		22.33	53.52	-31.19	35.99	0.000
여성의 근무상 지위	상용직(%)	57.83	80.43	-22.6	18.51	0.000
	임시직(%)	17.88	5.43	12.45	9.50	0.002
	일용직(%)	6.24	1.09	5.15	4.13	0.042
	자영업(%)	16.83	13.04	3.79	0.90	0.342
	가족종사자(%)	1.22	0.00	1.22	1.13	0.287
여성 월평균 소득	월평균(만원)	127.12	174.78	-47.66	-4.35	0.000
가구 입주형태	자가(%)	48.09	32.55	15.54	19.65	0.000
	전세(%)	40.64	58.49	-17.85	26.62	0.000
가구 총 생활비(만원)		207.14	172.04	35.1	6.04	0.000

현황비교와 더불어 더욱 체계적으로 출산영향요인을 선별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특히,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여성의 연령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산의

50) 출산가구의 관측치는 최대 212가구, 최소 71가구로 나타났다.

확률은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출산확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고학력-고소득(교육년수×월평균소득)의 여성일수록, 직장 내 일·가족양립지원제도가 마련되어있는 여성일수록 출산확률이 증가하였다. 또한 배우자(남성) 월평균소득과 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가구 월평균 생활비가 높을수록 출산확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여성에 비해 상용직여성의 출산확률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여성의 월평균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상태가 양호할수록 출산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 표 IV-23 】 서울시 여성 출산영향요인 분석결과 최적모형 한계효과

변수명	한계효과(marginal effects)
<b>월평균소득</b>	
남성(배우자)월평균소득	0.013** (0.005)
여성월평균소득 × 교육년수	0.001*** (0.000)
<b>여성의 연령</b>	
30대	-0.262*** (0.041)
40대	-0.353*** (0.043)
<b>일·가족양립지원제도 및 근무시간</b>	
직장 내 출산 및 육아휴직	0.028* (0.017)
여성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0.008* (0.014)
<b>근무상 지위</b>	
임시직·일용직	-0.011 (0.019)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0.022 (0.038)
비경제활동여성	-0.001* (0.018)
<b>월평균 생활비</b>	
가구 월평균 생활비/가구 월평균소득	0.019*** (0.010)

\*\*\*p<0.01, \*\*p<0.05, \*p<0.1

# V

## 서울시 여성의 출산 결정 요인 분석 : FGI를 중심으로

1. 불안정한 일자리와 출산
2. 주거문제와 출산
3. 출산관련 의료비 및 보육문제와 출산
4. 소결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V

## 서울시 여성의 출산 결정요인 분석 : FGI를 중심으로

본 장에서는 실증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한 불안정한 일자리, 주택마련의 어려움, 의료비 및 보육문제 등 경제적 이유로 출산하지 않는 서울시 기혼여성 1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출산을 하지 않거나, 둘째아를 포기하는 원인은 어느 특정 한 가지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제는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표 V-1】 FGI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령	학력	자녀 유무	근무상 지위	주거 유형	비출산 및 둘째아 출산지연 원인
20대 후반	대졸	없음	상용직	전세	주택마련으로 인한 대출(경제적 문제), 고용불안정
30대 중반	대졸	없음	상용직	자가	주택마련으로 인한 대출(경제적 문제), 고용불안정
30대 초반	대졸	1명	비경제 활동	자가	높은 양육비와 교육비
20대 후반	대졸	없음	임시직	전세	주택마련으로 인한 대출(경제적 문제), 소득 및 고용 불안정
30대 초반	대학원 졸(석사)	1명	임시직	자가	주택마련과 양육에 의한 경제적인 부담, 소득 및 고용 불안정
30대 중반	대졸	1명	비경제 활동	전세	양육비와 교육비의 부담
30대 초반	대졸	1명	임시직	전세	높은 양육비와 교육비

연령	학력	자녀 유무	근무상 지위	주거 유형	비출산 및 둘째아 출산지연 원인
30대 초반	대학원 졸(석사)	없음	임시직	전세	소득 및 고용불안정, 가구생계부양(비맞벌이)
30대 초반	대졸	없음	상용직	전세	주택마련으로 인한 대출(경제적 문제)
30대 초반	대졸	없음	임시직	전세	고용 및 소득불안정,

## 1. 불안정한 일자리<sup>51)</sup>와 출산

서울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한 결과,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한 출산과 노동의 양립불가능을 공통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이는 임신·출산경험을 막론하고 모든 기혼여성에게 관찰되는 상황이었으며 출산휴가·육아휴직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하더라도 사업장의 분위기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 돌아오는 암묵적인 페널티는 여성의 몫’이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불안정한 일자리는 계약직을 포함한 일용직, 임시직을 의미하였으나 실제 인터뷰를 통해 만나본 사례는 비록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출산으로 인한 여성 자신의 일자리에 위협을 받고 있었다. 다음은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체감하고 출산을 하지 않는 사례를 나타낸다.

“출산휴가 3개월 쉬고 몸도 못 가누는 애를 두고 회사를 어떻게 다니나 막막하더라고요. …(중략)… 육아휴직 얘기도 해봤는데 여기는 팀장급도 다 3개월씩 나온다 고(3개월만 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신입사원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일자리 불안정으로 인한 출산지연 사례.1)

51) 본 장에서의 불안정한 일자리는 상용직, 일용직, 임시직의 의미를 포함한 여성 및 가족 친화적이지 못한 일자리를 의미한다.



“제가 비정규직은 아닌데 회사 안에 팀원이 저 혼자예요. 만약에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을 갖게 될 경우에는 팀이 없어지니까 회사에서는 굉장히 꺼리죠. 제가 출산 할까봐.. 회사 대표 만날 때마다 임신여부를 확인하고 ...(중략)...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건 마찬가지죠. 아니면 일이 다 스톱됐다거나..그런 부담감이 있어요.”(일자리불안정으로 인한 출산지연 사례.2)

정규직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노동환경이 열악한 비정규직 여성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는 정규직만 대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은 일자리 상실, 경제력 감소를 의미한다. 이는 다시 주거, 보육 등의 문제로 연결되며 장기적 비용이 발생하는 출산을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제가 지금 비정규직인 상황이라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과 동시에 그만둬야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집 대출금을 남편 월급으로만 감당을 해야 돼요.”(불안정한 일자리와 경제적문제로 인한 출산지연 사례.1)

“제가 만약에 애를 낳아서 아이한테 시간을 다 쓰면 당장 수입이 끊기는 거예요. 뭐 육아휴직 같은 그런 개념이 저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불안정한 일자리와 경제적 문제로 인한 출산지연 사례.2)

또한 한 번의 출산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이미 첫째아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둘째아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 주거라든지 생활적인 면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산다는 게 얼마나 지출이 많고 (여성의 일자리) 희생이 되는지를 첫째를 키워봐서 대략 짐작이 돼요. 그런 여건들이 저희 생활하기엔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둘째를) 보류하고 있어요. 첫째가 클수록 아이한테 투자해야 되는 면이 많아지는데 또 다른 아이를 갖는다는 건...(중략)...가정경제에 위기가 다시 한 번 찾아올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우려



하는 마음이 커요.”(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둘째아 출산포기 사례.1)

서울시 기혼여성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일·가족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인식, 분위기 등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터뷰에서 만난 여성들은 모두 호의적이지 않은 주위의 시선과 일·가족양립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제가 29살인데 직장에서는 어린 편이고 결혼을 저만 한 거예요. 아직은 20대니까 임신 더 있다가 해도 되지 않아? 이런 분위기이죠. 임신에 관련한 거는 개개인의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건데 어리니까 임신은 더 있다가 해도 되지 그런 분위기예요”(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한 출산지연 사례.1)

“출산휴가를 쓴다는 건 되게 독한애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한 출산지연 사례.2)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sup>52)</sup>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에서 이탈했던 여성이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다. 둘째아를 출산하게 된다면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하므로 둘째아를 포기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출산하지 않은 기혼여성 역시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를 보였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하고 일을 알아보고 있어요. 외벌이로는 생활에 한계가 있으니까..근데 생각보다 일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무슨 돈 많이 주는 그런 직장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 애가 있다고 하면 야근도 힘들겠네요? 물어보세요. 할 수 있다고 해도 별로 안 반기는 그런 눈치죠...(중략)... 둘째를 갖는다면(산부인과 검진부터)이런 걸 또 반복해야하는데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노동시장 차별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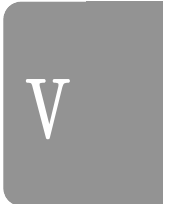
52) 20대 후반의 높은 고용률은 30-34세에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35-39세의 고용률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고용률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다.

### 인한 출산지연 사례.1)

“제가 대기업이나 이런 곳은 아니고 작은 회사에 면접 보러 가서 결혼했다 그러면 임신 안 해요? 물어봐요. 그러면 (회사담당자는)임신하면 당연히 그만두겠지, 이 생각이고 우리는 출산휴가 한 달밖에 못주는데 이런 얘기를 먼저 하세요. …(중략)… 뭐 조그마한 회사들의 경우에는 무언의 압박이에요. 네가 애를 가지면 나가야 된다고..”(노동시장 차별로 인한 출산지연 사례.2)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인사담당자가 제게)설마 결혼하신 건 아니죠?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인사과에서 상의하시고 문제가 된다면 저한테 통보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저희가 다 미혼이라 야근을 많이 하는데 기혼자가 있으면 분위기가 흐려져서 안 될 거 같다고...…(중략)… 지금 일자리도 어렵게 구했는데 임신을 하면 다시 구하기 힘들 걸 알기 때문에 결국 임신계획이 세워지지 않아요.”(노동시장 차별로 인한 출산지연 사례.3)

불안정한 일자리와 경제적 문제, 이로 인한 출산지연은 임시직, 일용직 여성만의 문제라고 판단하였으나 여성은 정규직, 비정규직에 관계없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한 임신, 출산 시의 경력단절은 가구 경제력을 감소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가구 경제력의 감소는 주거문제, 보육 문제 등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된다. 다시 말해 출산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하므로 미래의 기대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



## 2. 주거문제와 출산

서울시의 주택구매에 관한 통계자료(주택구매력, 가구소득대비주택가격)를 통해 타 지역에 비해 주택구매가 2배 이상 어려운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서울시의

주택가격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감당하기 매우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원자료의 한계와 미시적 접근으로 인해 서울시 주택가격을 모형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 기혼여성이 겪는 주택문제에 접근하였으며 모든 참가자가 공통적으로 주택마련의 어려움,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였다.

*“주변에서 계속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애기를 낳으면 낳는 순간 돈을 못 모은다. 낳기 전에 돈을 모아야지 낳은 다음에는 돈을 모을 수가 없다.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거 형태가 좀 안정이 된 다음에 애기를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주거 및 경제적문제로 인한 출산지연 사례.1)*

*(서울시의)주거비용이 너무 비싸니까..대출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얼마이상 안 해주거든요 대출도. 그러다보니 결혼도 늦어지고..결혼한다 해도 (경제적인 문제로)출산이 걱정되고..”(주거 및 경제적문제로 인한 출산지연 사례.2)*

서울시의 높은 주택가격은 가구의 경제적인 문제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주거의 불안정도 동시에 야기하며 주택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첫째는 대출을 통한 자금마련이고 둘째는 상대적으로 가격부담이 덜한 월세, 마지막으로 부모의 도움이다. 이 모든 주택마련 방법은 경제적인 부담을 동반<sup>53)</sup>하며 주거문제와 출산은 이러한 부분에서 충돌한다. 대출을 통한 주택마련 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하므로, 장기적으로 높은 비용이 요구되는 출산을 고려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월세 역시 매달 지출이 발생하여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전세금도 경제적 문제를 일으킨다.

*“(전세금이 계속 올라) 대출을 꺼서라도 우리 집을 사는 게 낫겠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양을 받았어요. 신규로 분양을 받았는데 월 상환*

---

53) 부모님의 도움으로 집을 마련한 경우, 상대적으로 부양의 부담을 더 크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는 금액을 생각하면 둘째를 고려할 상황이 안 되는 거죠.”(주택마련 대출로 인한 둘째아 출산기피 사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린나이에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도움을 안 받고.. 전세도 전세자금 대출 많이 낀 상태구요 또 (직장이)대기업 이런 곳이 아니다보니까 나중에 애 대학 등록금 이런 게 나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미래에 적금도 부어야 하고...(중략)... 한 달에 (원금+이자) 30만원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주택마련 대출로 인한 출산지연 사례.1)

“대출받았는데 대출이자가 3.4%였고 그 정도였고 원금이랑 이자가 매달 백만 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엔 맞벌이여가지고 그게 감당이 됐는데 제가 몸이 나빠지고 회사를 그만두니까 신랑의 벌이만으로는 저금할 돈이 없더라고요”(주택마련 대출로 인한 출산지연 사례.2)

전세제도는 한 번에 목돈이 지출되는 문제가 있으나 계약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전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장점<sup>54)</sup>이 있다. 반면 월세제도<sup>55)</sup>는 매달 금액을 지불하고 거주하는 입주형태이나 지출된 금액을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월세제도는 신혼부부에게 매우 큰 금전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는 다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구조로 이어진다. 또한 전세에 거주하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출산을 고려하여 주거지를 이동하려 저축하였으나 2년간의 저축액만큼 전세가격이 상승하여 이동이 수월하지 않는 사례도 존재하였다.

“저희처럼 정말 탈탈 털어서 양가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고 최대한 발품 팔아서 구한 집이 지금 사는 9천만 원짜리 (전세)빌라예요. 저희가 살 때도 엄청 싸게 정말 잘 구해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저희 집 근처에 1억 밑으로는 아예 없거든요. 지금

54) 물론 전세금을 시중은행에 저축하였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포기해야 한다.

55) 월세제도의 대부분은 원룸형태의 거주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원룸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주택담보대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만약 이 집을 내놓고 나가면 살 집이 없어요. …(중략)… 대출이 아니라면 임대주택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없어서 혜택을 볼 수 없어요.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게 가장 커요 확실히. 그래서 낳지 말자 그러고 있습니다.”(전세금의 상승, 경제적 문제로 인한 출산지연 사례)

물론 부모의 도움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 전세와 월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안정이 쉬울 수 있으나 부양비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sup>56)</sup> 결국 결혼 후 오랜 시간 경제적 기반을 다지지 못한 신혼부부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은 상태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경제적인 부담은 곧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중요 요인으로 나타나며 주거안정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주택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정부분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대부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임대주택을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인터뷰에 참가한 모든 여성들은 임대주택도 고려하였으나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체가 되지 않음을 호소하였다. 자신들은 지극히 평범한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책의 초점은 ‘저소득층’에 맞춰져 있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여성가족리포트(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4)에도 언급되었듯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정책은 존재하나 실질적으로 진입장벽의 너무 높다는 의견과 동일하였다.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도 임대주택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 위치 등의 이유로 꺼려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맞벌이를 하면 제가 뭐 연 2천 벌고, 남편이 3천 벌고 하면 5천이 넘어가잖아요? (임대주택)대상이 안 돼요. 정말 내가 생활보호대상자다 이러면 되는데,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중략)…급여가 외벌이를 하면 남편 급여가 많지 않으니 해당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맞벌이를 하면 수입이 두 배가 되고, 저희가 애들이 많은 게

---

56) 인터뷰 참가자 중 2명의 대상자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주택을 마련하였으며 이로 인해 다른 가구에 비해 높은 부양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다른 참가자들 역시 만약에 부모님의 도움으로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지금보다 높은 부양의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아니라 하나잖아요? 그럼 3인 가구인데 안돼요. 저희는 부자도 아니고 아주 가난하지도 않은 그 상태에 끼어있는 상태인거예요.” (임대주택의 높은 입주조건으로 인한 사례)

“애기를 키우고 있고, 임대주택이라 하는 것은 일단 저게 임대주택이란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애기가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야되는데, 임대주택이 뭐 저희한테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중략)… 우리나라 (인식)이 좀 그렇잖아요. 어디 사는 지 중요하고.. 임대주택 인식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은..”(임대주택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기피 사례)

“임대주택 주변에 학교가 있잖아요?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인데, 초등학교에 가면 재는 임대주택에 살아 라는 걸로 왕따를 당한대요. 친정의 동네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중 한 아파트가 임대주택인데 거기 사는 애들이 다 왕따를 당한다는 거예요 학교 내에서. 그래서 부모들이 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 기를 쓰고 거길 빠져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애길 들어서 제가 (임대주택에 들어갈) 조건이 안됐지만 만약에 가능하다고 해도 아이를 낳기 전에 나오려고 했을 거예요”

위의 사례들에서 보았듯이 서울시의 높은 주택비용은 가구 경제에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제적부담은 출산을 미루게 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비록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신혼부부 우선지원 임대주택 등의 정책들이 존재하였으나 인터뷰 참가자 중 자격에 해당하는 참가자는 없었다. 생활비와 주택마련을 위해 맞벌이를 하게 되는 경우 더욱 신혼부부 주택정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으며 직장으로 인해 서울에서 벗어날 수도 없으므로 출산을 더더욱 미루게 되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주거문제와 앞에서 살펴본 불안정한 일자리문제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기혼여성들이 가지는 경제적인 문제는 매우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불안정한 일자리 → 소득불안정 → 주택마련의 어려움 → 대출 등을 통한 주택 자금 마련 → 경제적 불안정 → 경제적 안정을 위한 출산지연 및 포기
- ② 서울시의 높은 주택비용과 물가 → 경제적 기반마련을 위한 맞벌이 → 신혼부부 우선순위 임대주택 등의 조건부합 어려움 → 경제적 안정을 위한 출산지연 및 포기

### 3. 출산관련 의료비 및 보육문제와 출산

서울시 기혼여성 중 첫째아를 출산하고 둘째아의 출산을 망설이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출산하지 않은 여성과 크게 두 가지 차이를 보였는데 첫째는 출산관련 의료비와 둘째로 보육문제였다. 특히, 임신시기부터 발생하는 부담스러운 검사비용<sup>57)</sup>과 국공립어린이집의 긴 대기시간, 워킹맘을 고려한 편의부족을 꼽았다.

의료비와 관련해서 첫째아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산부인과 진료에 대한 전문 지식 부재와 이로 인한 높은 진료비용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다음은 보건소에서 특정 진료를 받았으나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검진 받은 사례이다.

*“임신기간 중에 병원에서 시기별로 많은 검사를 하는데 이중 일부 검사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해당 검사를 따로 받고 오면 병원에서 싫어하는 눈치라서...”*

병원을 쉽게 옮기지 못하는 산부인과의 특성과 산모들의 의학지식 부족, 자신의 출산에 신경을 덜 써주지 않을까하는 우려 속에서 높은 비용이 요구되더라도 그저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을 뿐이었다.

---

57) 물론 출산 전 50만원(다태아의 경우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운맘카드가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나 산부인과 비용을 모두 감당할 수 없었음을 호소하였다.



“산부인과에 가면 이거저거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제가 아픈 거면 (비용 때문에) 좀 참거나 하겠는데 아이에 관련된 검사니까 안 받기도 힘들고 ... (중략)... (비급여라) 비싸기도 하고 과잉진료하나? 이런 생각 드는데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산부인과를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도 없으니까요.”

이처럼 첫째아를 출산한 서울시의 기혼여성들은 이미 첫째아 임신시기부터 부담스러운 의료비 지출이 있었음을 공통적으로 언급하였으며 의료에 대한 정보부족을 꼽았다. 추가로 보건소의 접근성에 대해서도 어린애기를 데리고 보건소로 이동하기에는 다소 쉽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임신시기부터 발생하는 출산관련 의료비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호소하였는데 어린이집 지원을 받더라도 활동비 등의 추가 지출문제, 돌봄서비스의 높은 비용도 언급하였다. 또한 보육에 관한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부족으로 인한 긴 대기시간, 워킹맘을 고려한 편의부족을 추가적으로 호소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대기를 여러 곳 신청해봤는데..제가 12개월 되었을 때 복직을 할 거니까 한 9개월부터는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오는 거예요.” (서울형 어린이집을 포함한 국공립어린이집의 긴 대기시간 및 높은 돌봄비용 사례)

“어머니는 맞벌이시니까 보내시면 1순위 되셔서 금방 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있어서 차 운행을 안 하면 얘기를 데려다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런데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차 운행을 안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국공립어린이집 편의부족 사례)

이처럼 첫째아를 출산한 서울시 출산여성은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겪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보육문제로 인해 둘째아의 출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워킹맘의 경우, 보육시설 편의의 부족이 주는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 4. 소결

V 장에서는 서울시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개별특성, 가구특성 변수를 선별하여 IV panel probit 모형을 추정하였고 각 요인의 한계효과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교육년수가 높을수록, 상용직일수록, 일·가족양립지원제도가 마련되어있을수록 서울시 여성의 출산에 긍정적이었으며 연령, 배우자(남성)대비 월평균 소득, 월평균 생활비가 높을수록 출산에 부정적 효과를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성의 노동환경이 좋을수록 출산의 확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 FGI통해 만난 서울시 기혼여성이 처한 노동환경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상용직 여성은 임시직, 일용직 여성에 비해 고용의 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FGI결과, 출산에 의한 고용불안정이 관찰되었다. 다시 말해, 일·가족양립지원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이용시의 불이익, 주변 동료와 상사들의 눈치 등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었다.

즉, 기혼여성에게 고용안정이란 근무상 지위에 따른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의 개념을 넘어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를 어려움 없이 사용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차별도 발생하지 않는 노동환경을 의미한다.

한편, V 장의 실증분석을 통해 서울시의 높은 생활비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임신을 결정하는 과정은 임신과 출산뿐만 아니라 양육, 교육 등 장기적으로 높은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로 인해 현재의 높은 생활비는 가구의 경제력을 낮추는 원인과 동시에 출산의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의 높은 주거비,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증분석에서 반영하지 못하였다.

FGI를 실시한 결과, 실증분석에서 고려한 생활비보다 주택마련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더 큰 문제로 확인되었다. 특히, 첫째아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보육, 교육비의 문제로 인해 둘째아 출산을 지연·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I

## 정책방안

1. 서울시 여성 및 가족친화적 기업환경 개선
2.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
3. 출산관련의료지출 및 생활비, 보육
4. 향후 연구의 개선방향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VI 정책방안

본 연구는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과 원자료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문제를 보완하려 추가로 FGI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분석결과를 통해 서울시 기혼여성의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와 서울시의 높은 물가, 주택가격이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여성의 고용안정과 경제적 안정, 주거안정,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출산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 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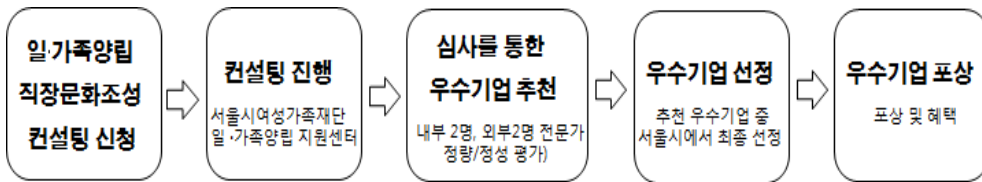
## 1. 서울시 여성 및 가족친화적 기업환경 개선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직에 종사중인 기혼여성은 비경제활동 기혼여성에 비해 출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FGI결과 상용직 기혼여성 역시 임신·출산으로 인한 고용불안정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여성의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출산’에 대해 뿌리깊이 자리 잡고 있는 기업문화와 전반적인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등 출산 전·후 고용안정은 여성 및 가족친화적 인식이 단단하게 자리 잡혔을 때 실현가능한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 할지라도 인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현불가능 한 것이다.

### 1.1 여성 및 가족친화적 기업에 대한 유인(incentive)제공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을 실증 분석한 결과, 일·가족양립지원제도(출산휴가, 육아휴직)가 있는 여성의 출산확률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FGI를 통해 일·가족양립지원제도 이용의 어려움은 경력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고용불안정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증분석결과와 FGI의 결과를 토대로 여성 및 가족친화적 환경조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일·가족양립지원센터를 통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일·가족양립지원 센터에서는 서울시 소재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직장문화조성을 위한 컨설팅과 이를 통해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수기업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고용 우수기업 특별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가능 : 시중보다 2~3% 낮은 대출금리 (5억 원 이내 융자)</li> <li>• 서울가족사랑기업 BI사용</li> <li>• 서울시 표창 및 기업홍보(우수사례집, 관련홈페이지 및 언론보도)</li> </ul>

우수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1차 과정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부 2명, 외부 2명의 정량/정성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목록을 작성한다. 그리고 1차적으로 선별된 기업 중 절대평가를 통해 서울시에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혜택과 포상이 주어진다.

위와 같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기업 선정에 다소 아쉬운 부분과 기업들의 참여를 이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함께 제안한다. 첫째, 우수기업 평가는 기업 내의 근로자가 아닌 전문가에 의해서 평가된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 일·가족양립의 정도는 기업외부 전문가보다 내부 근로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실제 내부 근로자 의견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용이성 또는 기업 고유문화와 같은 부분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우수기업 선정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법적인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내규에 명문화 되어있는지의 여부 또한 중요한 요인이므로 지표에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

둘째로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지표를 강화함과 동시에 기업 및 기관들로 하여금 우수기업이 되고자하는 유인(incentive)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① 우수기업의 다양한 홍보

- 우수기업은 언론보도와 더불어 서울시청, 기업 및 기관의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가족양립 우수기업'부분을 신설, 지속적인 기업 홍보 실시

②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입찰 가산점 부여

- 우수기업이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 입찰 시, 일정수준 이상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청과 연계하여 우수기업 상품에 대한 홍보 및 판로를 지원하여 기업 및 기관들로 하여금 우수기업이 되고자하는 유인을 제공

**일·가족양립 우수기업 조건 강화**

-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규정 및 제도 유무 및 사용의 용이성 추가(근무자 대상)
- 근무자 대상의 일·가족양립의 만족도 등



**일·가족양립 우수기업 지원 확대**

- 여성고용 우수기업 특별자금 금리(2~3%) 인하 및 용자규모(5억 원 이내) 확대
- 지속적인 우수기업의 홍보
  - 서울시청 및 우수기업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 내 '일·가족양립 우수기업'신설 및 홍보
  - 서울메트로 내의 일·가족양립 우수기업 홍보 (전철 및 역사 내 광고)
-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입찰시 가산점 부여
- 중소기업청과 연계한 우수기업 상품에 대한 홍보 및 판로 지원

## 1.2 고용안정과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이탈방지 및 재진입 활성화

비경제활동 여성의 출산확률이 경제활동 여성보다 낮고, 교육년수가 높을수록 출산확률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서울시 기혼여성의 경제적인 안정성이 높아질수록 출산 확률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요약하자면 서울시 여성의 출산 결정 여부는 '경제적 안정'을 가장 우선하여 볼 수 있으며 보육시설 보완을 통한 양육비용을 낮추기보다 경력 단절된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고용안정화 정책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sup>58)</sup>

서울시는 2015년 4월 29일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중점사항은 다음과 같다.<sup>5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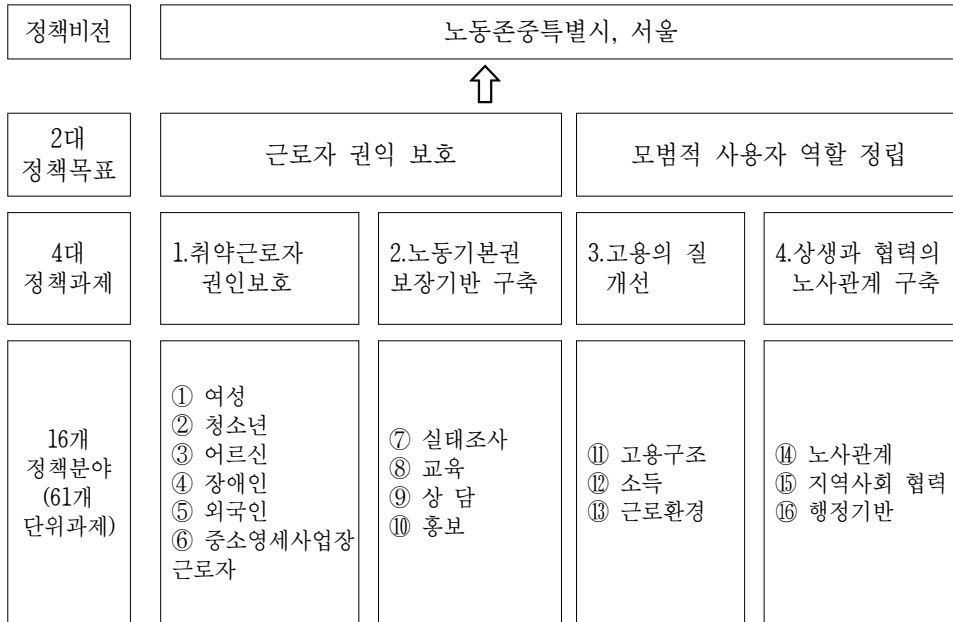
- ① 노동문제 근본 원인 치유를 위한 첫걸음인 「노동교육·상담」에 시정 역량 집중
- ② 여성, 청소년, 감정노동자,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등 취약계층 대책 마련에 중점
- ③ 고용안정·적정임금·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등 취약계층 대책 마련에 중점
- ④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노동안전 문제에도 관심 및 중앙정부와 개선방안 도모
- ⑤ 실질적 노사민정 협력체계 구축 및 행정기반 마련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근로자 권익보호와 모범적 사용자 역할 정립이라는 2대 정책목표 아래 4대 정책과제(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고용의 질 개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이 있으며 이는 다시 총 16개 정책분야(61개의 단위과제)로 이루어져있다.

58) 이와 같은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59)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archives/53185>) 발췌





이 중 여성에 관한 정책은 ①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 운영 ② 일·가족양립 지원체계 운영 ③ 맞벌이가정 돌봄서비스 지원 ④ 감정노동자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기업·소비문화 만들기 캠페인까지 총 4개의 단위과제가 존재하나 아쉬운 점은 일하는 임산부를 위한 단위과제의 부재이다. 일하는 임산부를 위한 ‘일하는 임산부 근로자 쉼터’의 운영을 통해 출산 전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현상을 방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기업·소비문화 만들기 캠페인뿐만 아니라 ‘임산부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기업문화 캠페인’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홍보정책분야에서 노동인식개선 홍보, 노동존중 시민캠페인 단위과제에 일·가족양립지원제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함께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방지에 매우 기초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고용안정을 위해 서울시는 2015년 4월까지 5,625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17년까지 1,697명의 비정규직을 추가 전환함으로써 총 7,322명을 정규직화 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러한 공공부문에서부터 정규직 전환은 단순 공공부문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분위기로 확산될 수 있도록 언론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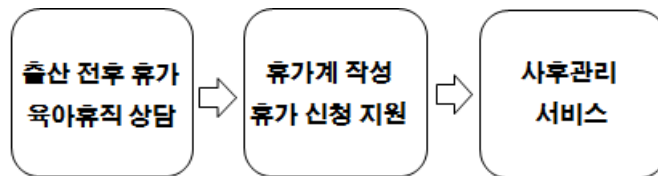
영향을 주는 방향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1.3 비정규직 근로자 및 임산부에 대한 불이익 적극적 예방

서울시 노동계획 기본정책의 근로환경 단위과제 중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추진’은 직장내 괴롭힘 세부 처리 절차 등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계획 중에 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문책), 직장내 괴롭힘 시스템 강화 예정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의 범위에 임산부 포함을 제안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의 강화뿐만 아니라 임산부에 대한 불이익 예방교육을 포함하고 임산부에 대한 괴롭힘, 불이익 처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구제가 필요하다. 임산부에 대한 괴롭힘은 태아와 산모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가장 약한 자에 대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임산부근로자에 대한 폭언, 괴롭힘을 규율하는 제도는 전무하다. 서울시 차원에서 회사별 취업규칙 징계규정에 임산부에 대한 차별 및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징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sup>60)</sup>

### 1.4 직장맘지원센터 기능강화를 통한 여성노동권 보장

서울시 직장맘센터는 여성의 노동권, 모성보호와 더불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육아기 여성에게 법적 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60) 저출산 대응 및 워킹대디 일·가족양립 정책토론회의 이영희 노무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토론문 인용

현재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직장맘의 고충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장맘지원센터가 휴가계를 직접 기업 측에 제시하여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여성의 대리인 자격으로 기업에게 신청함으로써 여성의 출산과 육아, 이후의 과정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리신청에 대한 법적 문제가 있으므로 여성이 기업에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 또는 거절 발생 시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2.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sup>61)</sup>

서울시 주택가격을 시 차원의 정책적으로 안정화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며, 민간주택시장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보다 공공주택을 통한 주거안정에 우선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 2.1 임대주택의 높은 진입장벽 해제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신혼부부 주거관련 정책으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신혼부부 전세자금, 다자녀 가정 임대·전세주택 우선공급을 꼽을 수 있다. 이 중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은 다시 국민임대주택, 보금자리 주택 공공임대 분양주택, 민간건설 주택으로 구분하여 공급된다. 그러나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이지만 지원 자격을 살펴보면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적인 신혼부부는 제외됨을 확인할 수 있다.

-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 혼인기간

61) 신혼부부가 출산에 많이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나, 주거지원 정책은 신혼부부만이 아닌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신혼부부만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에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언급하는 이유는 기존의 신혼부부 정책의 실효성이 매우 낮음을 지적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내에 출산한 자녀(입양포함)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 결혼 3년 이내 유자녀 또는 임신 중(1순위)  
결혼 3년 초과 5년 이내 유자녀 또는 임신 중(2순위)
- 청약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는 신혼부부 (민간건설주택 청약신청 시 서울의 경우 300만원 예치금을 만족해야 함)

자격조건 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출산한 자녀가 이미 있거나, 임신 중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혼인과 맞물려 거주할 곳을 구하고 있으나 제도는 혼인 후 출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이에 막 가정을 이룬 수많은 신혼부부들은 정책의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점이다.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가구 중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주택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는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고려할 수 있으나 소득기준이라는 또 다른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었다.

- 국민임대주택 : 주거지의 크기가 60m<sup>2</sup>이하 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3인 가구 이하 약 331만원), 60m<sup>2</sup>초과인 경우 100% 이하. 자산의 경우 부동산 12,600만원, 자동차 2,467만 원 이하

자녀를 포함한 3인 가구의 경우, 맞벌이를 하는 가구라면 여성과 배우자의 월평균소득이 165만원에 해당한다.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출산한 서울시 맞벌이가구의 월평균소득을 고려하였다고 하기는 매우 낮은 소득기준이며, 홀벌이가구(3인 이하 가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FGI에 참가한 서울시 기혼여성들 모두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한 소득수준이 낮음을 지적하였으며 정책의 1차 대상이 과도하게 저소득층에 국한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된다.

우선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며 자녀가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낮춘다면, 주택문제를 지니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층이 아닌 서울시의 일반적인 신혼부부를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 2.2 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임대주택이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더불어 임대주택과 민간분양이 섞여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임대주택이 확연히 구분되는 현재의 주택계획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김승호(2013)의 연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 정책에 관한 인식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반대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이 가지는 이미지는 ‘저소득층’으로 굳어져있음을 유추할 수 있으며 FGI에 참가한 서울시 기혼 여성들은 ‘임대’라는 이미지를 ‘저소득’이라는 이미지와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주택문제 해결방안으로 임대주택의 진입장벽을 낮추기를 제안하였으며 동시에 이미지 개선을 주장한다.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기존의 ‘임대’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버리고 누구나 쉽고 거부감 없이 부를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하다. 또한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는 임대주택의 차별인데<sup>62)</sup> 특히, 민간주택과 섞여있는 단지에서 이와 같은 낙인효과는 더 크게 발생하므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임대주택 비구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규모의 주택단지가 있을 때, 임대주택은 일반적인 민간주택과 나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구분된다. 다시 말해 거주하는 위치를 통해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부정적인 인식의 개선과 동시에 민간주택과 임대주택의 경계를 허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 2.3 희망하우징 대상의 확대 및 사회적 주택 공급

서울시에서는 대학생들을 위한 ‘희망하우징’을 진행하고 있다. 희망하우징은 서울시와 SH공사가 매입한 다가구주택과 건설한 원룸을 대학생 기숙사형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부모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0%(혹은 70%) 이하인 자에게 주어진다.<sup>63)</sup> 비용은 보증금 1백만 원 외 월임대로 6만 원~30만 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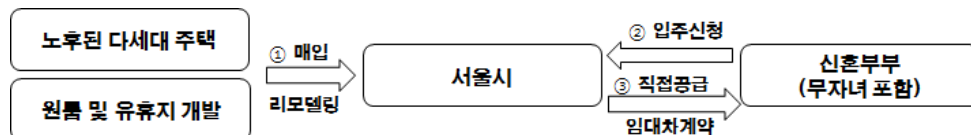
62) 한 예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는 임대아파트와 민간아파트의 출입구가 다르며, 또 다른 아파트 단지는 임대아파트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민간아파트는 소음이 덜한 안쪽으로 배치가 되어있었다.

63) 2015.06.29. 저출산 대응 및 워킹대디 일가족양립 정책토론회의 임경지(민달팽이 대표)의 토론문 인용

형별, 입주자별 상이)로 이루어져있고 2009년 말에 정책이 발표되어 2014년 10월 까지 998호를 공급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의 대상을 신혼부부를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해 다가구, 연립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주택 형식으로, 임대주택보다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의 희망하우징의 경우, 임대주택의 조건과 유사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기준을 가지고 있어 신혼부부가 입주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득기준을 낮추어 신혼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은 민간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여서 발생하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임대주택이 가지는 부정적인 인식도 없어, 주택비를 마련하지 못한 신혼부부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기존의 희망하우징 정책에서 더 나아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직접 지원의 경우 주거비가 저렴하며 소유권을 공공(서울시)이 갖기 때문에 거주기간이 안정된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재정의 부담, 빠른 공급의 어려움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공급은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주변시세(80%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게 될 경우 매우 높은 비용을 수반한다. 동시에 매달 요구되는 주거비용 또한 30~50만 원 선으로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희망하우징을 실시한다면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특히, 직장과의 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혼부부에게 크게 어필(appeal)할 수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외곽지역이 아닌 서울 중심부 다세대, 휴유지를 활용하여 공급해야 될 필요가 있다. 즉, ① 서울시 주요 위치의 다세대 주택 매입 혹은 휴유지를 활용한 소형 주택을 직접공급하고 ② 서울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혹은 혼인예정자)를 대상으로 입주자 선정한다.



희망하우징뿐만 아니라 빈집을 활용한 ‘빈집 살리기’가 현재 시행중이며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주거복지 수요층(노인, 여성, 직장인, 한부모가족 등)에 따른 주택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희망하우징과 다르게 빈집 살리기는 민간(사회적 기업)이 함께 공급을 하고 있는 형식이다.

- ① 각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 DB 제공
- ② 사회적 기업 건물(빈집) 임대
- ③ 서울시는 사회적 기업에 리모델링비 지원
- ④ 사회적 기업 리모델링 시공
- ⑤ 해당 자치구 입주자 모집
- ⑥ 입주자와 사회적 기업 임대차 계약

위에서 언급한 희망하우징은 서울시가 직접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며 높은 비용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 빈집 살리기는 서울시가 간접적으로 관여하나 추가인력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 두 가지의 장점을 결합하여 서울시만의 신혼부부 주택정책을 시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가령, 빈집 살리기 사업의 대상을 빈집으로 한정하기보다 노후된 주택으로 범위를 확장하거나 희망하우징 사업대상을 빈집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제도를 활용하여 서울시가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리츠제도란 주식이나 수익증권 등을 발생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후 이를 부동산·부동산관련대출·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리츠란 증권화된 부동산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mutual fund)라고 할 수 있다(윤윤석, 2003).

이와 같은 서울시 주거정책은 임대주택에 들어가지 못하는 무자녀 신혼부부에게 매우 좋은 주거정책이 될 것이다. 또한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첫째 아가 태어났을 때 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임대주택의 높은 소득기준이 변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임대주택의 기준이 완화된다면 희망하우

정에 거주하는 무자녀 신혼부부가 출산 시 자연스럽게 임대주택으로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3. 출산관련의료지출 및 생활비, 보육

이미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겪은 차별, 경제적인 부담, 보육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둘째아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특히, 출산관련 의료비의 경우 산부인과를 자주 옮기기 어려운 특성으로 인해 고운맘카드를 포함한 의료비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호소하였다. 또한 워킹맘 모두 국공립어린이집의 편의부족 등을 언급하였는데 이에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한다.

#### 3.1 출산관료의료정보 제공

일반적으로 병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특정 재화를 구입하는 것과 달라 가격(비용)을 비교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산모들이 임신기간 동안 받아야 하는 검사의 정보도 불분명한 상태로 산모간의 정보교류만으로 얻고 있었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산부인과에 관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산모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검진, 선택적으로 받아도 되는 검사·검진 등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산모들은 그와 같은 정보를 획득하여 과잉진료를 피할 수 있을 것이며,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 3.2 국공립어린이집 공급확대 및 편의시설 마련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린이의 안전 등의 문제로 인해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있으나, 아이를 데려다줄 환경이 안 되는 워킹맘들은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부담을 통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



집의 높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힘을 쏟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급의 부족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동안 맞벌이 가구와 다자녀 가구, 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에 1순위를 적용해 100점을 부여하였으나 2015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는 맞벌이 가구 자녀에게 200점을 부여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를 통해 입소를 위한 대기시간은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 가구의 1순위와 함께 지속적인 국공립어린이집 공급을 통해 서울시 기혼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

#### 4. 향후 연구의 개선방향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과 FGI, 두 가지의 상이한 방법론을 통해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 분석을 시도하고 종합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에서 몇 가지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였는데 첫째는 표본수의 부족이다.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실증분석은 경제활동 기혼여성, 비경제활동 기혼여성을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표본의 수가 매우 적어 구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다보니 변수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상용직, 임시직·일용직, 비경제활동인구로 제한하였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 역시 비경제활동 여성은 0으로 처리되는 한계를 가졌다. 이러한 작업은 표본의 분포가 비경제활동에 다소 편중된 경향이 있다 보니 통계적 유의성이 없거나 직관적인 결과와 다소 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노동시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출산에 가까워질수록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력단절의 객관적 수치를 확인하였다. 또한 상용직, 일·가족양립지원제도, 월평균소득이 서울시 기혼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으나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과 직결된 근로감독권, 노사분쟁조정권 등 대부분의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sup>64)</sup>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서울시 차원에서 여성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접근은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기초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

64) dongA.com 4월 30일자 '서울시 비정규직 7,322명 정규직 전환' 기사문 참조

졌으며 일·가족양립가능 노동환경에 초점을 맞추었다.

마지막으로 출산 의사결정은 여성의 노동환경과 더불어 가구 외부요인 또한 매우 중요하고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결정된다. 여성의 출산은 거시적 관점의 여성의 고용, 소득수준 등과 상당히 높은 내생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다시 말해 다른 주요 요인들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여성의 노동환경과 서울시 특성만 고려하다보니 출산 후 환경(가령, 보육과 교육, 산모의 건강, 사회적 분위기 등)은 다루지 못하였다.<sup>65)</sup> 추후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다뤄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건강문제 등의 분석도 요구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 기혼여성의 출산력 실태조사를 통해 더욱 풍부한 자료 확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서울시 여성의 패널을 구축하여 서울시 미혼, 기혼여성 기초자료 또한 요구되어진다.

---

65)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고용이 증가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경제환경에서 미시적인 출산율 제고 정책의 효과가 단기적이고 미봉적일 수 있음을 지적해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 참고문헌

- 김영주. 2005. “대도시 저출산 가정의 주거현황과 주거의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49-157.
- 김한곤. 1993. “여성의 지위와 출산력에 관한 미시적 분석.” 『인문연구』 15(1): 259-282.
- 김현식·김지연. 2012.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와 정책방안.” 『연구보고서 47-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현숙. 2007. “우리나라 가구의 자녀수 결정요인에 관한 Count 모형 분석 및 경제적 함의.” 『한국인구학』 30(3): 107-135.
- 김혜영·선보영·김상돈. 2010. 『여성의 만혼화와 저출산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3-25.
- 송헌재. 2012.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 가구의 출산결정요인 분석.” 『응용경제』 14(3): 51-78.
- 신경아. 2010. “저출산대책의 쟁점과 딜레마 -여성 없는 여성정책-.” 『페미니즘연구』 10(1): 89-122
- 신윤정. 2008. “보육·교육비 부담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건사회연구』 28(2).
- 이철희. 2012.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혼인과 유배우 출산율 변화의 효과.” 『한국인구학』 35(3): 117-144.
- 조명덕. 2010. “저출산·고령사회의 원인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사회보장연구』 26(1): 1-31.
- 조혜자·방희정. 2005. “결혼과 출산기피의 한 이유: 여성의 관계역할.” 『한국심리학회지』 10(1): 95-112.
- 차경욱. 2005. “저출산 가계와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 비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37-148.
- 최경수. 2008. “출산율 하락의 경제적 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 『정책연구시리즈』 한국개발연구원.
- 최숙희·김정우. 2005.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의 원인 분석.” 『SERI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 Becker, G. 1960.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in A. J. Coale, (ed).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ecker, G. & G. Lewins, 1973.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 279-288.
- David A. Jaeger and Marianne E. Page, 1996. “Degrees Matter: New Evidence on Sheepskin

- Effects in the Returns to Educa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8: 733-740
- Easterlin, R., 1968. “Population, labor force, and long swings in economic growth: The American experience.” NBER Books.
- Easterlin, R., 1973. “Relative economic status and the American Fertility swing.” *Family Economic Behavior: Problems and Prospects*.
- Heckman, J. J. & T. MaCurdy, 1980. “A Life-cycle Model of Female Labor Supply.” *Review of Economic Studies* 47: 7-74.
- Hotz, V. J. and R. Miller, 1993. “Conditional Choice Probabilities and the Estimation of Dynamic Model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60(3): 497-529.
- Walker, J. R, 1995. “The effect of public policies on recent Swedish fertility behavior”,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8: 223-251

## Abstract

# A Study on Policy through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Seoul's Fertility rate

Jin-Hee Jang

Family Team, Family Policy Office of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Korea's low fertility rate is becoming a serious problem, with Seoul showing the lowest fertility rate across the country. With concerns over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a declining fertility rate, an increasing number of studies has analyzed factors contributing to the problem. In particular, they have been placing a greater emphasis on gender equality in the workplace and family-oriented working environments. This study has a similar focus in relation to factors affecting the low fertility rate in Seoul. It involved an empirical analysis using data of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and FGI was also carried out to compensate for defects arising from source materials. The results of the two analyses showed that the unstable employment of married women in Seoul and the city's high cost of living and housing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fertility rat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omen who have not given birth had a relatively poor economic situation compared with those who had given birth. Second, a woman's total years of education x average monthly wage (interaction term) had a positive (plus) effect on the probability of childbearing. Third, husband average monthly wage had a positive (plus) effect on the probability of childbearing. Fourth, the existence of policy promoting childbirth promoting policy had a positive (plus) effect on the probability of childbearing. Fifth, women participating in

economic activities had a higher probability of childbearing than those who did not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Finally, employment instability arising from pregnancy and delivery and the high cost of housing in Seoul were found to be factors delaying childbearing even for permanent female employee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concludes that to offset the problem of Seoul's low fertility rate there should be more policies supporting women and family oriented working environments, mor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such environments, better housing policies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lower delivery costs.

부 록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부록 서울시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자료 (1997~2010)

(단위 : 명)

자료명	연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연령별 서울시 가임기 여성 수	1997	432,362	518,103	554,175	445,710	465,334	406,123	320,280
	1998	427,243	496,073	557,392	437,116	458,684	420,870	322,365
	1999	414,071	481,720	556,159	440,182	442,894	439,644	330,318
	2000	392,912	480,957	548,535	449,538	426,495	448,574	352,814
	2001	371,482	482,460	524,134	467,897	421,378	451,194	374,011
	2002	347,959	485,311	500,483	480,548	412,909	451,058	387,248
	2003	327,264	487,769	491,247	486,645	407,310	445,956	404,315
	2004	311,063	476,161	492,332	487,624	409,930	435,385	422,029
	2005	299,296	455,698	498,062	477,148	416,955	421,995	432,830
	2006	299,922	424,755	508,704	467,648	432,674	412,723	441,146
	2007	305,670	395,547	515,829	455,762	443,707	406,945	443,440
2008	309,739	378,058	515,837	445,520	450,206	407,373	444,952	
2009	312,779	370,393	505,421	444,461	448,124	410,920	440,486	
2010	310,022	365,253	483,681	444,523	435,714	415,968	430,837	

자료명	연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연령별 서울시 가입기 혼인여성 수	1997	2,332	53,159	289,628	383,869	407,650	365,776	290,845
	1998	2,215	45,828	275,194	372,182	394,642	373,768	296,079
	1999	2,097	38,497	260,761	360,494	381,633	381,761	301,314
	2000	1,980	31,166	246,328	348,807	368,624	389,754	306,548
	2001	1,760	27,949	224,845	342,385	361,970	382,106	317,142
	2002	1,540	24,732	203,363	335,964	355,316	374,458	327,735
	2003	1,321	21,515	181,880	329,542	348,661	366,810	338,329
	2004	1,101	18,298	160,398	323,121	342,007	359,162	348,922
	2005	881	15,081	138,915	316,699	335,353	351,514	359,516
	2006	851	13,385	128,983	301,553	330,887	346,021	353,539
	2007	821	11,690	119,051	286,407	326,420	340,527	347,561
2008	791	9,994	109,118	271,260	321,954	335,034	341,584	
2009	761	8,299	99,186	256,114	317,487	329,540	335,606	
2010	731	6,603	89,254	240,968	313,021	324,047	329,629	

자료명	연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연령별 서울시 혼인 모의 출생아 수	1997	620	17,094	78,798	35,053	7,834	868	36
	1998	556	14,175	74,223	34,928	7,427	862	36
	1999	482	11,950	69,092	35,622	7,211	971	57
	2000	443	10,652	67,486	42,599	8,106	1,073	43
	2001	381	8,352	54,532	40,285	7,562	1,023	54
	2002	282	6,703	43,906	39,748	7,382	1,035	66
	2003	202	6,025	41,249	41,733	7,700	1,092	73
	2004	206	4,892	38,066	43,931	8,709	1,045	68
	2005	174	3,828	32,367	41,159	9,165	1,021	59
	2006	191	3,444	31,565	43,689	11,069	1,076	57
	2007	222	3,496	33,167	46,690	13,505	1,175	54
2008	162	2,964	29,255	44,932	13,966	1,318	52	
2009	163	2,558	26,483	42,625	14,344	1,450	59	
2010	168	2,494	24,250	46,167	16,210	1,843	72	

자료명	연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연령별 서울시 무배우 모의 출생아 수	1997	52	128	244	230	158	35	35
	1998	52	123	266	262	154	44	2
	1999	68	120	293	253	154	53	4
	2000	53	166	324	319	193	60	60
	2001	67	126	274	300	186	68	7
	2002	47	124	237	304	183	43	1
	2003	26	138	258	349	176	65	8
	2004	32	102	239	337	225	81	7
	2005	38	94	202	355	212	72	6
	2006	41	89	234	395	272	75	4
	2007	51	107	254	412	331	68	5
2008	55	111	322	477	344	107	11	
2009	62	133	320	426	395	100	8	
2010	103	113	307	486	404	128	4	

주 : 서울시 가임기(15~49세) 여성인구의 2000, 2005, 2010년을 제외한 각 연도는 선형보간법에 의해 추정된 수치임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장래인구추계」, 「인구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2015 정책연구-01

##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정책방안 연구

발행인 이숙진  
연구자 장진희, 박성준  
발행일 2015년 8월  
인쇄처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발간등록번호 51-B552561-000041-01  
발행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전 화 02-810-5101(대)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함께해요 청렴실천, 신뢰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seoulwomen.or.kr](http://www.seoulwomen.or.kr)

